

상세본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2. 1

해양수산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① 실질적 정책효과 중점 평가

- (정책효과 평가 개선) 평가항목을 **종합적 정책효과**(기존 20 → 개선 30점), **향후 기대효과**(5점), **국정과제 보고서 반영도**(가점)로 통합하여 **실질적 정책효과 평가 강화**

< 정책효과 평가 개선(안)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존	개선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35점)	종합적 정책효과	20	30	+10
	향후 기대효과	5	5	-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성과	5	-	△5
	정책 환류의 충실성	5	-	△5
	(가점) 국정과제 보고서 반영 정도	+3	+3	-

② 평가 간소화 * 평가지표 과다로 인한 평가위원의 평가부담 완화 등

- (평가지표 축소 등) 정책결정 사전점검제 이행을 폐지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난이도를 부합도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목표(지표) 달성도 평가지표 축소

< 정책추진 노력 및 목표(지표) 달성도 평가 개선(안) >

구분	평가지표	배점		비고
		기존	개선	
정책추진 노력(30점)	추진계획의 충실성	5	5	-
	정책이행 노력도	10	15	+5
	정책결정 사전점검제 이행도	5	-	△5
	정책소통·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10	10	-
목표(지표) 달성도(35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5	-	△5
	성과지표의 난이도	15	-	△15
	성과지표의 부합도	-	20	+20
	목표(지표) 달성도	15	15	-

- 성과지표의 부합도는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 강제배분 평가*하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 상위 20%(20점), 21~50%(16점), 51~90%(12점), 91~100%(8점)

○ (원점수 적용) 개별 평가지표에 대한 조정점수(표준편차 10) 적용 및 성과지표의 부합도에 대한 再 강제배분 폐지

- 평가지표별 평가 원점수를 조정없이 적용*하고, 성과지표 부합도는 평가위원별로 강제배분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20) 100점 환산점수의 표준편차가 10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를 10으로 조정

** ('20) 위원별 강제배분 평가점수를 평균한 순위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다시 강제배분

3 정부 핵심과제 등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 핵심과제) 우리부 소관 핵심 추진과제*를 관리과제에 포함하는 경우 가점(+3점)을 부여하여 핵심과제와 성과관리의 연계성 확보

* 한국형 뉴딜·탄소중립 과제, 정부 후반기 핵심과제 등

○ (국정과제 성과지표) 우리부 소관 국정과제의 성과지표*를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가점(+3점) 부여

* 국정과제별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도 평가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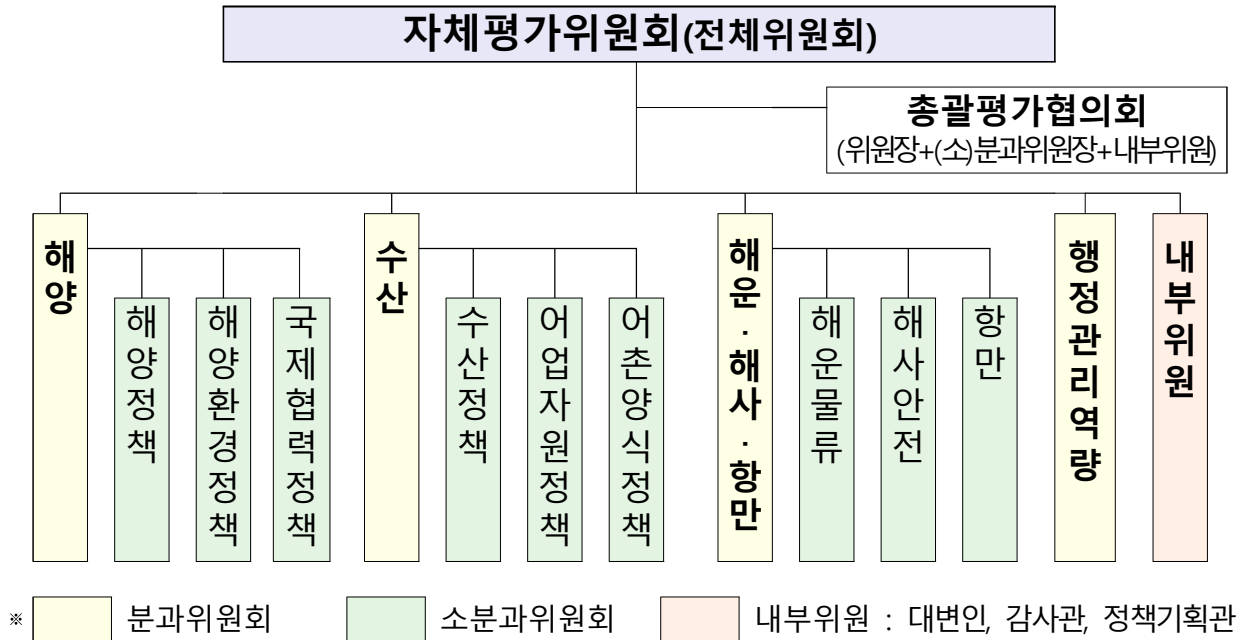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담보를 위해 민간전문가(27명)와 내부위원(3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해수부 훈령 제496호) 운영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대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전문 분야별 분과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과 소관 관리과제 평가

* (1분과) 해양(해양정책/해양환경/국제협력), (2분과) 수산(수산정책/어업자원/어촌양식), (3분과) 해운물류·해사안전·항만

- (총괄평가협의회) 위원장, (소)분과위원장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및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을 수행



- (평가지원팀)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점검 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총괄지원팀과 분과별 지원팀을 구성·운영

② 평가 절차

< 2021년도 성과관리과제 평가 일정 >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	➡	대면(영상) 평가	➡	총괄평가 협의회(1차)	➡	이의신청	➡	총괄평가 협의회(2차)	➡	전체 회의 (등급 확정)
'21.12.15 ~ 12.22		'22.1.4 ~ 1.6		'22.1.11		'22.1.12 ~ 14		'22.1.18~20		'22.1.24~25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지표의 부합도는 서면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이 개인별 제출한 사전질의서와 부서의 답변을 전체 분과위원에게 공유

<대면평가>

- 소분과 단위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부서별 정책성과를 상대 비교(5단계 등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총괄평가협의회>

- 평가 등급 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치밀한 검토로 평가 공정성 확보
 - 7단계(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로 과제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수용여부 검토

<전체 회의>

- '21년도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방법

- (소분과 평가) 관리과제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5단계(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로 평가등급 강제 배분

【소분과별 평가등급 분포 기준】

등급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순위누적	~20%	20%~35%	35%~65%	65%~80%	80%~

- (등급결정) 총괄평가협의회를 통해 7단계 등급으로 상대 등급화

【최종 평가등급 분포 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순위누적	~5%	5%~20%	20%~35%	35%~65%	65%~80%	80%~95%	95%~

-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총괄평가협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 결정
-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결과 확정
 - 평가결과는 전체회의 개최 이전에 모든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제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본부 41개과(팀)의 62개 관리과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6	17	18	62	109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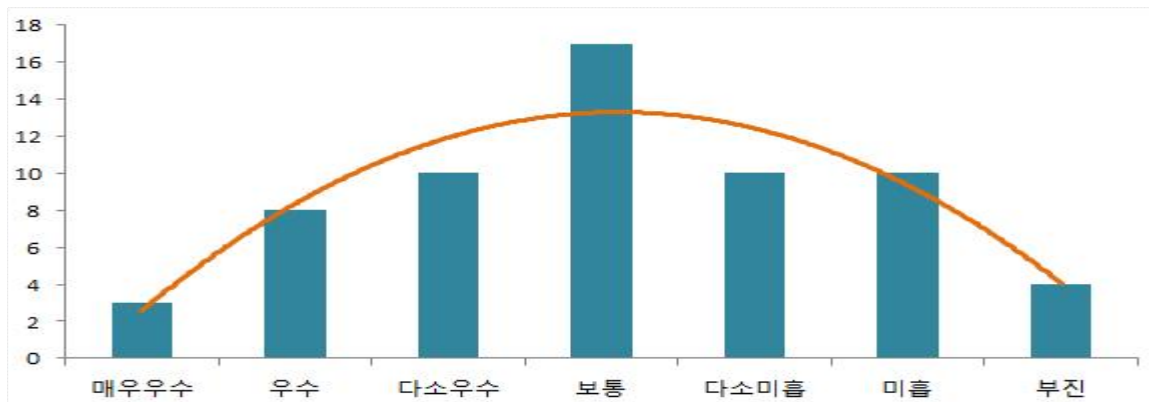
구분 (100점)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정책추진 노력 (30점)	○ 추진계획의 충실성	○ 상위 정책과제와 연계 정도 ○ 분기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 전년도 평가 개선보완 필요사항 반영 등	5
	○ 정책이행 노력도	○ 과제별 추진계획의 이행정도	15
	○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 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도	10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 성과지표의 부합도	○ 대표성있는 지표 설정 및 목표치가 과거 실적,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 수준을 상회·미달하는지 여부 ○ (가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	20
	○ 목표(지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	15
정책효과 (35점)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종합적 정책효과	30
		○ 향후 기대효과	5
		○ (가점) 국정과제 부처 설명회 보고서에 반영된 정도	3
가·감점	○ 가점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대내외기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 ○ 획기적인 성과로 사회적 주목, 부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등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장(장·차관)의 현장 중심 성과점검 및 소통 노력 ○ 우리부 소관 핵심 추진과제를 관리과제에 포함 ○ 우리부 소관 국정과제의 성과지표를 전략 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설정	최대 5점
	○ 감점	○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미흡 평가 부여 등 ○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입력, 회의·교육 등 참여도 등	최대 △4점

2. 평가결과

(1)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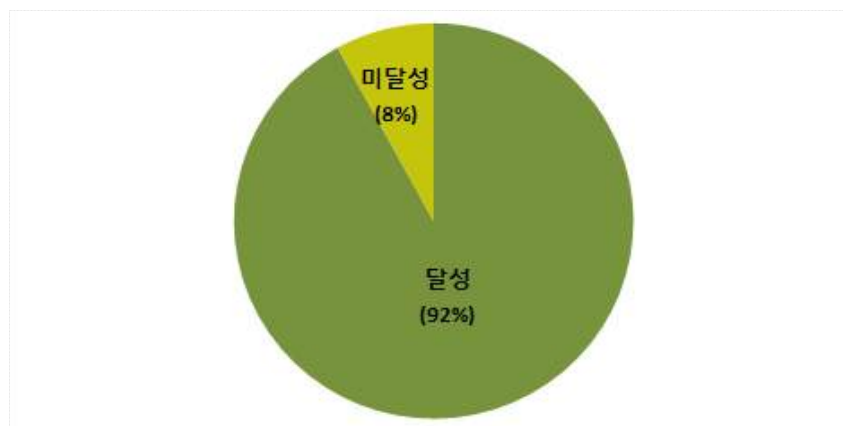
- '21년도 총 41개 과(팀)의 6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 우수 8개(12%), 다소 우수 10개(16%), 보통 17개(27%), 다소 미흡 10개(16%), 미흡 10개(16%), 부진 4개(6%)임
 - 우수 이상 과제는 11개(17%)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14개(21%)임

<'21년도 자체평가 결과 등급별 과제 분포도>



- 총 62개 관리과제의 10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2%로,
 - 해운재건 프로그램 추진율 등 10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읍서버 신규양성 및 제도 활성화 추진율 등 9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목표를 일부 달성함

<'21년도 자체평가 결과 성과지표 달성율>



(2) 주요성과

□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음

해 양

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Ⅲ-2-⑤)

- 체계적인 갯벌 관리·복원 정책의 성과로써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갯벌복원 및 블루카본 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 기반을 마련
- (갯벌 관리·보전) 「제1차(’21~’25)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7.22) 및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추진 계획 마련(’21.12)
- (갯벌 복원) “그린뉴딜”사업으로 갯벌복원을 확대시행하고 갯벌식생복원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
- (블루카본) 우리나라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규명하고, 갯벌 생태계 다양성 및 가치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수 산

수산물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Ⅱ-2-②)

- 코로나19·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산물 수출 실적 달성
 -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 비대면 판로 확보 및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 V자 반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전인
 - * 수산물 수출(억불): (’18) 23.8 → (’19) 25.1 → (’20) 23.1 → **(’21) 28.2, 역대 최대**
- 코로나19로 변화된 무역·소비시장 대응, 비대면 수출 본격화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e커머스플랫폼에 한국수산물 판매 전용 K-SEAFOOD(5개관)을 개설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 판로 확보
 - * 제8차 범정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모범사례로 선정(국조실, ’21.6.4)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 항만 부가가치 향상,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배후단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21.5~)
 - 부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위상 공고화
 - 양곡부두 이전 필요성 제기에 따라 기존 계획된 남컨테이너 지역 내 잡화부두 등 시설별 규모 조정 추진('21.5~)
 - 친환경·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수소항만 추진기반 마련
 - 수소항만 조성방안 마련을 통해 항만에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가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수소의 생산, 저장, 수입, 이송(유통), 활용(소비)

(3) 개선·보완 사항

- ☐ 분야별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해 양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강화(V-1-①)

- 성과지표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수 산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VI-1-③)

- 성과지표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내실화(VI-2-④) /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안전항만 강화(I-3-⑤)

- 정책소통 및 확산노력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성과 목표	관리과제	평가결과
전략목표 I.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1. 세계 5위 수준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①해운산업 지원체계 강화	우 수
	②상생협력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우 수
	③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다소미흡
2.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		
	①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보 통
	②해외항만개발 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	다소미흡
3.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물류중심 항만을 구축한다.		
	①동북아 환적 HUB 부산항의 입지강화	매우우수
	②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다소우수
	③'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다소우수
	④안정적인 항만운영체계 구축	다소우수
	⑤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안전항만 강화	부 진
4. 항만지역에 민간투자를 다양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①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보 통
	②부산항 북항 통합개발로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다소우수
	③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개발사업 추진	미 흡
전략목표 II.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실현하고 살기좋은 어촌을 조성한다.		
1.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고품질 양식수산물을 생산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보 통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다소미흡
	③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미 흡
	④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다소우수
2. 질 좋은 수산물 유통·가공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①수산물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다소우수
	②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	매우우수
3.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①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	보 통
	②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미 흡
	③어업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보 통
	④어촌·어항재생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우 수

성과 목표	관리과제	평가결과
전략목표 Ⅲ.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한다.		
1. 국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한다.		
	①자원관리형 어선 감축 추진	우 수
	②안전·복지 중심의 어선 현대화 기반 구축	보 통
	③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보 통
	④수산자원 조성·관리강화	다소미흡
	⑤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다소우수
2. 해양수질·생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이용을 실현한다.		
	①오염해역 수질개선 및 해양오염사고 관리 선진화	미 흡
	②해양수산탄소중립 관리 강화	다소미흡
	③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전(全) 주기 관리	보 통
	④갈등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	다소우수
	⑤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매우우수
	⑥해양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보 통
전략목표 IV.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한다.		
1.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다소미흡
	②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다소우수
	③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우 수
2. 국제협력 및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해양 수산자원을 개발한다.		
	①해양수산 ODA 확대 및 신남방, 신북방 등 양자협력 증진	우 수
	②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미 흡
	③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보 통
	④주요 통상 협상 시 수산분야 전략적 대응	미 흡
전략목표 V. 해양수산 신산업을 본격 상용화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한다.		
1.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 레저 수요를 창출한다.		
	①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강화	부 진
	②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관광 핵심 新산업 육성	미 흡
	③해양교육·문화 육성 및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기반 구축	다소미흡

성과 목표	관리과제	평가결과
2.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보 통
	②해양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다소우수
	③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우 수
3.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①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보 통
	②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다소미흡
	③수요자 맞춤형 해운인력 경쟁력 강화	보 통
	④선원 수급 체계화 및 선원 근로여건 개선	다소미흡
전략목표 VI.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한다.		
1. 안전관리여건 개선으로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한다.		
	①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미 흡
	②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우 수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부 진
	④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시행	보 통
	⑤고품질 위치정보 제공으로 해양안전 강화	보 통
2. 첨단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안전을 수호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보 통
	②범정부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다소미흡
	③연안침식·침수 대응 강화	보 통
	④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내실화	부 진
3.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을 확대한다.		
	①항로표지의 사회적 가치 확대	미 흡
	②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 확대	미 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해운산업 지원체계 강화(I -1-①)	우 수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 해운지표 회복) '21년 해운매출액(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신조 발주량 포함), 지배 선대*(9,338만DWT) 등 주요 정량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 특히, 올해 대형 컨테이너선(1.3만TEU급) 12척 추가 발주(21.6. 1.9조원)에 따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한진사태 이전 수준인 105만TEU를 회복
- (점유율 증가) 초대형선박 투입 등을 통해 주요 수출항로인 미주·유럽항로의 점유율이 각 8.4%, 7.2%로 '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국적선사 경영정상화) HMM은 초대형선 투입을 통한 원가구조 개선, 화물수송량 증가 등의 효과로 '20년에 10년만의 흑자전환
 - 올해에도 매 분기 최대 규모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지속 개선되어 경영정상화 가시화
 - * ('19) 556% → ('20) 455% → ('21.9) 99.9%
- (중소선사 지원 강화) 신규보증상품 출시, 선주사업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안전판 역할 강화
 - 중소선사의 화물운송계약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입찰·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 출시('2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1.7)
 - * 공기업 등 국가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서 발급 기관에 해양진흥공사 추가
 - 무담보 신용보증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선사 대상 사업 시행('21.12. 예정)
 - * 「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21.5)

- 운용리스*(BBC) 방식의 선주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2척) 추진으로 중소선사 선대유지비용 절감 도모
- * 금융리스(BBC-HP, 기존 방식):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의무 부여
 ⇔ 운용리스(BBC):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선박 매입의무 없음)
- (금융지원)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1조 2,785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선박·컨테이너 등 선사의 자산 확충* 및 경영 안정화
- * '21년 선박 18척 신조·매입 및 컨테이너박스 4.6만개 리스 등 지원
- 국적선사의 신조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지원 프로그램(21억불) 마련 및 이를 위한 해진공 자본금 확충(300억원)
- * 친환경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해진공·산은·수은·캠코 15억달러), 그린오션 펀드(해진공·산은 6억달러)
- (고용창출) 해양진흥공사에서 발주 지원한 HMM의 1.3만TEU급 컨테이너 선박 12척('21.6. 1.9조원)의 국내 조선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에서 건조로 고용 1.3만명 및 생산 4.2조원 창출
- (선사 간 상생협력) 5개 국적선사(HMM·홍아·팬오션·SM·장금)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 출범(8.31)으로 동남아항로에서 국적선사 간 협력 강화
- 베트남, 태국, 말레이 등 아시아 5개 항로에서 선복교환 형태로 협력하여 참여선사의 항로 다변화 및 선복량 증가
- (미래비전 공유) 선복량 회복 등 해운재건의 1차 목표 달성에 따라, 해운재건 이후를 대비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수립('21.6)
- * 선박·화물 확보 등 해운재건계획 발전·보완+친환경·스마트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목표) '30년 해운매출액 7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달성 등
- 범정부 해운산업TF*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 행사(6.29)에서 미래비전을 선포함으로써 해운재건 이후 지속적인 해운업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
- * 해수부 차관·기재부 1차관을 공동 반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해운산업TF 논의('21.4~6)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선사 지원 지속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해운재건 프로그램 추진율과 선박 등 확보지원 실적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21년 해운매출액(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신조 발주량 포함), 지배 선대(9,338만DWT) 등 주요 정량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으로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체계적 대응)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20.12~) 및 '범정부 비상대응TF*' 가동('21.5)으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정부) 해수·산업·국토·기재·중기부 / (기관) 무역협회, 해운협회, KOTRA, 국제물류협회

- 종합대응센터를 통해 파악한 업계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비상대응TF 논의 등을 거쳐 4차에 걸쳐 수출물류 지원대책 확대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접수된 애로는 총 643건(10.1. 기준),
①선박공급 확대 289건(45%), ②운임지원 207건(32%), ③컨테이너 확보 34건(5.3%) 순

- (국적선사 처리량 증가) 선적공간 부족 및 해상운임 상승* 등에 대응한 선복 확대로 '21.1~10월 간 국적선사의 수출물량 처리량이 전년 대비 미주항로는 42% 증가(31.9만TEU), 유럽항로는 87% 증가(6.4만TEU)

*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20.1)1,023 → ('21.1)2,872 → ('21.6)3,713 → ('21.8)4,386 → ('21.3)4,727

- 특히, 선복부족 문제가 심했던 미주항로에서는 임시선박으로 '21.1~10월간 물동량 증가분(16.4만TEU)의 84%(13.7만TEU)를 처리

- (중소기업 물류난 해소) 단독으로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선적공간 지원규모를 주당 1,300TEU*로 확대 ('20.11~)350TEU→('21.9~)1,300TEU)하여 중소기업 물류난을 해소

* (미주) 1,130TEU / (유럽) 50TEU / (동남아) 120TEU

- 선착순 모집방식으로 총 100회, 1.5만TEU*를 제공하여 총 444개 중소기업(총 1,808건)의 전용선복 지원신청 접수·처리('20.11~)

* 미주(68회), 유럽(19회), 동남아(13회) 등 총 100회 14,632TEU 제공(~'21.11)

- 추가적인 운임상승 걱정 없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운송계약 물량*을 배정하여 95개 중소기업 선정, 총 1,246TEU 지원('21.9~)

* 미주서안향(向) 중소기업전용 선복물량 중 300TEU/주를 장기운송계약 물량으로 전환하여 지원

○ (국가적 위기 극복) 수에즈 운하 통항중단, 요소수 수급대란 등 국가적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위기상황 극복

○ (사회적 편익 제고) 지속적인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 사회적 편익 제고

- '20년(6척) 대비 대폭 증가한 13척의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으로 조선업 일자리 4,632개*를 창출하는 등 '18년부터 총 12,647개**의 일자리 창출

* 6,259억원('21년 국내 조선소 발주액)×0.74명/억원(조선업 고용유발계수)

** 17,091억원('18~'21년 국내 조선소 발주액)×0.74명/억원(조선업 고용유발계수)

○ (상생협력 강화) '20년(6개) 대비 대폭 증가한 10개 우수 선화주 기업*을 선정하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의 선순환 고리 정착 도모

* (대상) 모든 화주(수출입기업, 국제물류주선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인센티브)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금융 금리 우대, ▲법인세 감면 등

- 우수 선화주기업 심사항목 중 '장기운송계약' 배점 확대*, 이의신청 절차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화주간 상생협력 체계 강화

* 장기운송계약 배점: 7점 → 12점 / 100점

○ (적취율 지속 상승) 우수 선화주 인증 등 선화주 상생협력 추진으로 국내 컨테이너선사의 수출입화물 적취율*이 지속적으로 상승**('17. 42.8% → '20. 46.1%)

* 전체 수출입화물 중 국내 선사를 통해 운송되는 수출입화물의 비율

** ('16) 49.1% → ('17) 42.8%(한진해운 파산) → ('18) 44.4% → ('19) 45.3% → ('20) 46.1%

- 미주, 유럽 등 원양 적취율도 상승세로 전환('17. 15.4% → '20. 19.4%)하여 국적선사가 국내 수출입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물류난 지속 해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임시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선복 제공 등 사용가능한 최대한의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물류난을 극복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연안선사 경영지원으로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 보장】

- (경영 지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운항 중인 여객선사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종전 운항결손금(24억원) 외 추경 50억원 확보(3.30)
- 또한,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되던 운항결손액을 상·하반기 정산(74억원)으로 변경하여 선사들은 경영부담 완화
- (유동성 확보) 영세한 연안여객선사의 상황 및 경영난을 고려하여 200억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 시행(12.13)

【도서민에 대한 지원확대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 (도서민 운임 지원) 전국 228개 도서에 거주하는 12만명 도서민에 대해 여객·차량 운임을 146억을 지원하였고,
- 도서거주 미취학 아동이 여객선을 무료 승선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 (해상운송비 지원) 전국 8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유류·LPG 등) 해상운송비 19억원을 지원하여 도서민 약 10만명의 기초생활비 부담 완화
- (1일 생활권 보장) 도서민이 육지↔섬을 당일 왕복하는 1일 생활권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서에서 육지로 출발하는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지원

- 백령-인천, 가거도-목포, 거문도-여수 항로를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선정하여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5개 지역(용진, 통영 등)에 시범 도입한 도서민 신원 정보 확인 시스템*을 7개 지역(여수 등)으로 확대 추진
 - *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진·성명·주소 등으로 도서민 신원확인 후 발권, 승선시 QR코드 스캔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사진 정보 확인 후 승선 가능
- 발권·승선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도서민 승선절차를 간소화하여 특정 여객선 이용률이 높은 도서민 이용편의 증진

【환경규제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연안선사 지원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저유황유 전환 지원) 내항선사의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21~)되어 선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
 - 연안화물업계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1년 보조금 예산을 '20년대비 213% 증가한 765억원으로 증액
- (보조금 지급 투명화) 관계기관 협의체(해수부·해경청·관세청·석유관리원)를 운영하여 유류세 보조금 수급선사, 유류공급업체 대상 합동단속(연2회) 실시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로 투명한 해상유 유통시장 조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연안선사 경영지원으로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 보장, 도서민에 대한 지원확대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해외 주요 항만에 물류센터 3개 확보로 우리기업 물류기반 안정화】**① (물류센터 확보) 해외 주요 거점항만인 유럽(로테르담·바르셀로나), 동남아(프로볼링고)에 우리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물류센터 확보**

※ (추진계기) '18년 경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발생
⇒ 투자 여력이 있고 항만당국과 소통 가능한 부산항만공사 중심으로 물류센터 확보에 착수

- 우리 기업들에게 ①물량 우선배정, ②물류서비스* 가격혜택(시장 대비 10~30%) 등 혜택 제공하여 물류기반 안정화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

* ①단순 창고기능 외에도 ②항만하역, ③내륙운송 연계, ④재포장·라벨작업, ⑤컨설팅, ⑥사무실 임대 등 물류 관련 복합 서비스 제공 예정 (단, 물류센터마다 제공내용 상이)

②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단순 해운물류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대표적인 협력의 성공사례로서 외교당국 등도 높이 평가

- 또한 주요 항만당국 간 실질적·구체적으로 협력한 최초의 사례이며, 동 사업을 계기로 특히 친환경화·자동화 관련 항만공사 간 협력이 이어질 전망으로 항만 경쟁력 제고 기대

※ (로테르담) 친환경 항만 에너지 전환전략 및 자동화 항만 전환전략 공유
(바르셀로나) 운송경로별 탄소 배출량 산출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활용전략 공유

③ (기관·기업 참여 유도) 코트라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효과 극대화(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코트라 물류비 지원사업 연계)

- 로테르담·바르셀로나 물류센터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유럽 물류동향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21.6.30)

* '21.6.30/ 영상회의/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항만공사, 바르셀로나항만공사, 유럽진출기업 등

-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관련 기업(하나로 TNS, 태웅로직스) 참여의향서 체결로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21.10.26)

④ (국정과제 성과 홍보) ①보도자료(국·영문) 배포 외에도 ②장관님 기고(11.2), ③출입기자단 해외취재* 지원, ④국제행사 참석**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10.25~30/ 우리부·부산항만공사 출입기자단/ 로테르담 물류센터 개장식 및 바르셀로나 현장방문 등
⇒ (성과) 로테르담 개장식 언론노출 40건 이상, 인터뷰르포현장보도, 언론사 유튜브 게시 등

** 국제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주최 연례행사인 "Port Summit 2021" 개최식에서 해외물류센터 추진계획 발표 ('21.10.26, 온라인 생중계)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여건 조성으로 신규 해외진출 9건 달성】

① (해외진출 의사결정 지원)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및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등 총 10건 지원(예산 5.4억원 규모)

*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현지 시장조사, 법률검토 등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8천만원)
(동반진출 컨설팅)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비용 지원(최대 4천만원)

② (유망국 진출 지원) '21년 유망 물류시장으로 동유럽을 선정하고, 정보공유 및 현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사업 투자 설명회('21.9.8)', '해외 한상 물류기업 설명회('21.10.27)', 등 개최

③ (우수사례 공유) 타당성 조사·컨설팅 수혜기업 중 우수 진출사례 등을 국내 물류기업에 공유하는 '해외진출 우수사례 발표회('21.11.26) 개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우리기업 물류기반 안정화,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여건 조성 등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 외 주 요 항 만 에 물류센터 확보로 우리기업 물류기반 안정화,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여건 조성으로 신규 해외진출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방글라데시 ‘চিতাং 항만터미널 1단계 상세계획 설계 및 감리사업’ (180억원) 국제입찰에서 우리기업이 사업을 수주】

- (추진업무) ‘방’측 정부 지원 요청에 따라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치타공항, 파이라항, 칸푸르항을 포함하는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원(‘18.2월 ~’19.4월)하였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추진과제로 방글라데시 치타공 베이터미널 개발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국내기업의 수주를 지원
- (현재성과) ‘19년 우리기업의 파이라항 수주성과에 이어 ‘21년 치타공항 설계·감리 국제 입찰에서 우리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180억 규모의 수주 성과 달성
 - * 사업금액/기간/내용 : 1.5천만달러/착수 후 45개월/컨테이너 및 다목적 터미널 등 설계 및 감리
- (기대성과) K-권소사업 구성, EDCF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향후 추진될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의 Operator-2 구역의 사업 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추가 수주 (5천억원 규모)를 기대

【’23년 KOICA 사업으로 라오스 메콩강 Port-MIS 구축 사업(43억) 선정】

- (추진업무) 신남방 정책에 기여하고자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라오스 국가물류수송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18.10월~’20.10월)를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라오스 메콩강 Port-MIS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지원 사업으로 추진(’21.7)

- (현재성과) '23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지원 규모, 방법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KOICA 공동기획조사 진행 중
* 내용/기간/예산: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및 기술이전 등/23~24(2년)/4,313백만원
** (추진일정) '23년 무상지원사업 대상 선정(21.9) → KOICA 현지조사 실시('21.10~'22.하반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및 의결) → '23년 상반기 사업 추진
- (기대성과) '23년 사업 착수에 따라 우리기업이 43억 규모의 라오스 Port-MIS 구축사업을 수주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따라 항만 건설(H/W)을 넘어서 국내 항만 운영 시스템 기술(S/W)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기반의 강화가 기대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3,000억) 수주 지원 추진】

- (추진업무) 중미지역의 국내기업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아카후틀라항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라우니온항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16.12월~'18.4월)하였고, 동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계사업 제안
- (현재성과) '엘'측의 EDCF 자금 요청에 따라 수출입은행 타당성 조사가 완료('21.7)되었으며, 고위급 면담(우리부 차관-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장) 면담 추진, 대사관 협의 등을 통해 '엘'측과 EDCF 추진에 대한 협력 기반을 조성
- (기대성과) '21년 12월 말 한국 측에 EDCF 차관을 신청할 예정으로 차관 공여 계약에 따라 우리기업이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의 3,000억 규모 항만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통해 중미 지역 항만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우리부에서 추진한「베트남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항만 타당성 조사」결과가 「'베' 2030 항만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

- (추진업무) 베트남 정부와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베트남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수행('18.8월~20.11월)

하였고 제40~41차 ASEAN MTWG회의 참석('21.3, '21.10)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향만 시장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

- (현재성과) 우리 부가 수행한 베트남 향만기본계획이 「베트남 2030 향만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양국 우호관계가 증진되고, 기존 조사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향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 베트남 향만 기본계획수립 지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베트남 향만개발 2030 비전”이 베트남 총리 승인 완료(21.9.21) 하였으며 향후 베트남 향만개발이 진행 예정.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 감사함을 표함(제 41차 ASEAN MTWG회의에서 감사인사('21.10)와 감사서한 별도 송부('21.11))

- (기대성과) 베트남과 우호 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추진될 베트남 미투이 향만개발 사업, 까이맵 물류시설 구축 사업 등 우리 기업이 진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예상되며, 베트남 향만 기본계획에 근거한 다양한 향만개발 사업의 발굴 기대

【'향만분야 최초'로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의 업무협력 체결 및 공동프로젝트 착수】

- (추진업무) 개도국의 재정적 한계로 향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위해 '다자개발은행 협력을 통한 해외향만개발시장 진출 방안 연구용역 착수'('21.6)와 함께 협력 가능한 다자개발은행 발굴 노력 지속
- (현재성과) ①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21.5)하고 마다가스카르 툴레아 항 개발사업(PPP) 타당성 조사 등 공동 프로젝트* 착수('21.7), ②중미경제통합은행과 온두라스 향만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구체화

* 우리부는 사업에 대한 기술·경제·재무·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AfDB는 PPP 사업 파이낸싱, 환경사회영향평가 수행

- (기대성과) ①약 2,300억 규모의 아프리카 지역 항만개발 사업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②중미경제통합은행과 온두라스 항만개발 공동프로젝트 착수('22. 상반기) 등으로 중미지역 진출 기반 조성*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신시장 개척을 기대

* 라세비아 항 현대화 지원 사업 타당성 조사(약 1.1억원)를 우리기업과 계약 예정('21.12말)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UN ESCAP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UN ESCAP의 교통장관회의로 수립되는 5개년 교통 부문 이행계획(RAP)에 “항만·해운 의제 최초 반영 성과 달성”】

- (추진업무) UNESCAP과 국제 항만세미나를 개최하고 아·태지역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우리부와 공동 프로젝트 진행
- (현재성과) 아·태 지역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우리부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UN ESCAP의 교통장관 회의*를 통해 수립되는 5개년 아태지역 교통부문 이행계획(RAP, '22~'26)에 항만·해운 분야 안전을 반영
 - 기존 RAP에 해운·항만분야 아젠다가 없었으며, 철도·도로 등 육상 부문 중심으로 교통사업이 논의되었으나 우리부 주도로 아태지역 항만·해운 분야에 대한 안전 반영을 추진('21.7.월 ~ 12월)
- (기대성과) RAP II가 확정되면 체계적인 논의를 위하여 해운·항만 분야 RAP II를 이행하기 위한 최초 Working Group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안전 발제자로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한 협력 여건과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

【해외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4개국(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4개 사업 지원 완료】

- (베트남 미투이 항만) 우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베트남 미투이 항만개발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21.1.15), 우리기업 진출 기반 조성

- 우리기업은 '베' 총리실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현지 사업권자와 MOU를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 방안 마련 중
- (페루 항만개발 수주 지원)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페루 카야오 수리 조선소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20.4월~'21.11월)하였고, 이와 관련된 "페루 해군기지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K-컨소시엄 구성, 페루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 중
- * 페루 카야오 해군기지 이전 및 현대화 사업으로 설계 등을 제안(총 사업비 1.2조원의 약 2~5%의 규모), 시공, 조선기술 등 연계사업 진출 기대
- (파푸아뉴기니 항만개발)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마누스, 키코리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완료('20.10월~'21.12월)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EDCF 차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기업과 협력을 통해 부대 연계사업(유류탱커, 냉동창고 등)을 수립하는 등 통해 우리 기업 진출 활로를 모색 중

【민간기업 진출 지원 사업 2건 신규추진, 해외항만 진출 교육사업 2건 신규추진, 해외항만 개발 정보화시스템 개선】

- (민간기업 진출 지원 사업) 최근 개도국이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해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부 중심의 협력사업과 별도로,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 및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게 수주활동 및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추진
- *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22년 예산 : 7억원)
- 금년도 최초로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 결과, 이라크 알포항 운영 컨설팅 사업, 베트남 까이맵 신항 배후 부지 저온물류센터 건설 컨설팅 사업이 선정

- 특히, 이라크 알포항 운영 컨설팅은 단기적으로는 '22년 예정되어 있는 5선석 상부 공사 수주(약 1조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장기적으로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알포항 내 다양한 사업(운영, 건설, S/W등)의 우리기업 수주 및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라크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향후 수주 지원을 위한 교차 방문, MOU 체결 등을 추진 예정

- (교육사업 신규추진) 해외항만 시장 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주 실적 제고를 위해 직무 능력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수요*에 따라 해외항만개발역량강화 교육을 2차에 걸쳐 신규 추진

* 지원센터 업무 0결과('20.12/110명 응답), 응답자 66%가 해외항만 시장 진출 관련 교육과정 운영 희망

-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해외항만개발 사업 진출 검토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하였으며 응답자의 80%이상이 추후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 재 참석 의향을 밝힘

- (정보화 시스템 개선) 해외항만개발사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공정보 확대 및 메뉴 개선 추진

- 코트라, 관세청, KOICA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대상국 기준으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증진

* 이용실적('21.1.1~'21.12.13) : 접속자 2,038명, 페이지뷰수 35,290, 신규방문자 수 1,940명, 총 게시물 수 293건, 뉴스레터 발송 총 48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의 개선 ·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만터미널 1단계 상세계획 설계 및 감리사업’ 국제입찰에서 사업 수주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 항만 부가가치 향상,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배후단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21.5~)
 -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별 현안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배후단지 수요예측 및 권역별 특화방안 마련
 - * (부산신항) 환태평양 복합운송의 물류허브 항만 지원, (인천항) 수도권 및 환황해권 국제물류 거점 구축, (평택당진항) 대중국 물류거점 및 중부권 기간산업 중심 항만 지원 등
-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관할→전체항만)하고, 민간 개발 항만배후단지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항만법」 개정안 발의, '21.8)
 - * 민간 개발·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의 관리·운영비 징수 근거 마련
 - 다양화되는 항만기능 수요를 충족하고,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 연관산업 지원·활성화, 항만이용자의 편의 도모
 -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를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함께 제조기업의 물류비 약 25% 절감 기대

【부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위상 공고화】

- 양곡부두 이전 필요성 제기*에 따라 기존 계획된 남컨테이너 지역 내 잡화부두 등 시설별 규모 조정 추진('21.5~)
 - * 당초 양곡부두가 계획된 두문지역은 수리조선단지(민자사업)와 연계한 두문방파제, 가덕도 서측 진입도로 건설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개발·엑스포 차질 우려
- 현지답사('21.5) 및 민간업체 의견수렴('21.6~'21.7) 후 '26년까지 이전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부두 위치 조정(두문지역 → 남컨테이너 서측)

- 양곡부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잡화부두 선석 규모를 조정**(3만톤 2→1선석)하나,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배후부지 제공
- * 부두 내 하역, 보관, 재조립, 제조 기능이 결합된 물류처리 시스템
- 부산항 북항 재개발(2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부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두시설 이전 지원***
- * (유치위원회) 현지실사('22.9월, 잠정) 일정 및 박람회 개최시기('30.5월)에 맞추어 양곡부두 및 관공선 부두 등을 '26년까지 이전 완료 요청
- 환적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형선 컨테이너 계류시설 확충** 및 컨테이너 화물 외 **잡화화물의 하역기능 확보**
- * 피더부두와 잡화부두의 연계 또는 통합운영 등을 유도하여 부두 운영 효율성 극대화
- LNG병커링, 수리조선단지 등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 산업을** 추진하여 **항만서비스 확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

【관행적인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정책 효과 제고】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두 용도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단일 품목 → 둘 이상 혼재 처리)로 인한 **부두 운영상 분쟁 및 문제 해소 기대**
- 혼재 비중이 높은 품목을 통합하여 부두 기능을 단순화하는 등 **품목 분류체계를 간소화**(현행 14개 → 7개 이내)를 통한 부두 효율성 제고
- 항만의 운영 및 시설의 적정 규모, 건설시기(트리거를 적용) 검토를 위해 **항만 물동량 예측의 정확도 개선 추진**(‘21.3~)
- 전통적 예측기법에 대한 검증 제도 마련하고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 기반 물동량 예측방법 도입**
- (수요예측기법) 전통적 예측방법 고도화를 위한 검증 제도 마련 및 항만품목별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산·학·연 전문가 활용체계*** 개선
- * (현행) 물동량 추정 후 항만수요검토위원회(산·학·연, 62명) 검토
(개선) 14개 품목별로 전문가(3~4명) 자문 후 항만수요검토위원회 검토
- (예측 시스템) AI, 빅데이터 기반 예측모형 기법(의사결정, 신경망 기법 등)을 물동량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능형 수요 예측 시스템 단계별 구축 추진**
- * 물동량 실적자료 전용DB 구축(‘21~’22) → 지능형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개발(‘22~’23) → 지능형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24)

【친환경·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수소항만 추진기반 마련】

- 수소항만 조성방안 마련을 통해 항만에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가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수소의 생산, 저장, 수입, 이송(유통), 활용(소비)

- 수소항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지자체·민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협력 투자('27, 2조원 → '30, 15조원 → '40, 30조원 이상) 촉진
- 총리 주재 제 4차 수소경제위원회(11.26.)에서 의결(장관 발표)되었으며, MOU 체결, 정책발표 과정에서 총 870회 언론 보도량 기록(11월 기준)

【해양영토수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 연안항 지정 추진】

- 최서단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실효적 관리 추진
- 진촌항 등 지방관리연안항 지정 시 관광지와 연계한 편의시설과 접안 시설 마련으로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신규 여객수요 창출 기대

【차질없는 항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내용의 「항만법」 개정 추진('21.8 정부입법)
- 항만개발사업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해소 및 행정효율 향상 기대
-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시 수출입 실적 요건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여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 중부권(대전) 소재 제조업 기준, 부산항 배후단지로 입주시 약 25% 물류비 절감

【항만 SOC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 '22년 예산 1.52조원 확보(지방이양항만 제외시 전년 대비 5.6% 증)로 신항만 건설, 재해안전 시설 확충 등 항만 SOC 적기 확충 기대

【항만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별도 홍보용역을 통해 주요 항만정책에 대한 온라인콘텐츠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 기자단 투어 등을 추진, 항만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북아 물류 중심인 부산항의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매우우수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친환경·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수소항만 추진기반 마련 등 정책효과가 매우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진해신항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해외 주요 항만과의 경쟁 동력 확보】

- (사업개요) 컨테이너부두 9선석*, 방파제 1.4km 호안 8.1km 등
 - * '29년 3선석 우선 공급, '32년까지 9선석 공급(7.9조 / '22~'31)
- 예타 추진 경과 및 결과
 - ('21.6) 진해신항(1단계) 예타 착수→('21.12) 예타 통과(B/C 0.97, AHP 0.5)
- 정책 효과
 - (시설 능력 확보) 지속적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급격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 최대 3만톤급 초대형 선박도 접안·하역이 가능한 고생산성·대수심 항만으로 조성***
 - * ('20) 2,182만TEU → ('25) 2,545만TEU → ('30) 3,012만TEU → ('32) 3,242만TEU
 - ** 신항 '컨' 선박 규모(최대) : '08년 1만TEU급 ⇒ '17년 2만TEU급 ⇒ '20년 2.4만TEU급
 - *** (기존) 수심 17m~18m / 350m(L)×600m(B) → (진해신항) 수심 23m / 400m(L)×800m(B)
 - (일자리 효과) 진해신항 개발로 직·간접 일자리 창출*, 항만자동화 도입에 따른 취약 계층(여성, 청년 등) 고용증대 및 고용의 질 개선
 - * 총 82,881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전망(건설단계 54,388명 이상, 운영단계 28,493명 이상)
 - (생활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인구구조 개선), 편의시설 증가 등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2.4851%('08~'15년 항만사업 예타의 평균값은 1.0214%)

【항만자동화 TB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항만분야 기술 혁신 동력 확보】

- (사업개요) 국내 항만의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과 관련 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자동화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
- (추진경과) 한국판 뉴딜('20.7) → 대상항만 선정('20.10/광양항) → 예타 대상사업 선정('20.12) → 예비타당성조사('21.2~11.) → '22예산확보('21.12)
 - * (예타결과) 총사업비 6,915억원(증975억), B/C 0.97, AHP 0.594

- **(정책효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국내 기술중심의 자동화 항만을 구축 운영하여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항만 관련 기술 도입 기반 마련
- **(구축단계)** 국내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 선정 시 시설 및 장비분야 국내업체로 제한*하여 기술력 및 국내시장 확보
- * 여수광양항만공사는「WTO 정부 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조달계약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님(부산항 신항 2-5단계의 경우도 국내업체로 제한하여 발주)
- **(운영단계)** 테스트베드에 신기술검증 영역을 반영(92천㎡)하여, 자동화 장비성능 개선 및 스마트항만 분야 연구개발*(R&D) 성과 실증 및 상용화
- * 기본하역장비 성능(효율, 안전성)개선, 육·해상 물류 데이터 연계 기술 등

【대형선박 입항여건 개선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 **(부산항 신항) 2단계 준설회사*를 통해 수심 17m**를 확보하여 1.8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상시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
 - * 개발(2단계) 준설회사 791만㎡ / 225억원 / '19.6~'21.6
 - ** 만선(滿船) 기준 / 부산항에서는 일부 물량만 선적 후 중국 등 타국 항만에서 나머지 물량을 선적하므로 수심 17m 확보 시에도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의 안전 입출항이 가능
- **(인천항) 신항 항로 연장*(3.16, 설계착수) 및 북항 내 항로 준설회사** 시행(5.10, 착공)으로 선박의 통항 안정성 확보(현재 수심 8.2m → 12m)**
 - 선박의 입항 대기시간 단축(연간 1,460시간)으로 항만운영 효율성도 제고
 - * 항로 연장 및 증심 설계 1식 / 19억원 / '21.3~'22.6
 - ** 준설회사 10.8만㎡ / 68억원 / '21.5~'22.10
- **(광양항) 부족한 배후단지를 조속히 추가 확보(10.9만㎡)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21.12)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20년 기 입주 216만㎡(88.1%), '21년 입주 예정 29만㎡(11.9%)
-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적기 추진('21.10 착공)으로 오일허브(2단계) 및 남항부두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 * 방파제 0.9km(항만가동율 99.8% 이상 확보) / 3,439억원 / '21.10~'25.10
- **(새만금신항) 방파호안*('21.2 준공) 및 접안시설** 확충(5만톤급 2선석, '21.9 발주)으로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 등 연간 176만톤 수용 가능**
 - * 가호안 및 방파호안 2.89km / 775억원 / '17.12~'21.2
 - ** 접안부두 2선석, 접속호안 565m 등 / 2,315억원 / '22~'25

【해경 거점 항만 확충으로 접경수역까지 출동시간 단축】

- (포항 해경부두 착공) 포항 구항을 이용 중인 해경부두를 영일만 신항으로 이전 배치('21.8 착공, 386억원), 동해 접경해역까지 약 1시간 단축
 - * 구항 통과시간 약 30분 단축, 2~3열 횡접안으로 지연된 함정 이안시간 약 30분 단축
- (거문도항 해경부두 준공) 접안시설 완공('21.11, 367억원)을 통해 한·일 접경해역까지의 출동시간을 약 1시간 45분 단축(출동거리: 150km→100km, 15노트 기준)
- (군산항 관리부두 준공) 군산항 내 5천톤급 대형함정 전용부두 확충('21.12 준공, 426억원)으로 한·중 접경해역까지의 출동시간을 약 30분 단축
 - * 당초 3천톤급 대형함정은 접안시설 부재로 일반 화물부두를 이용 접안

【국내 자동화항만 기술 개발로 하역 생산성 향상 및 신시장 창출】

- (하역기술) 국내기술로 개발 중인 고생산성 항만자동화 하역기술(OSS*, '19~'23, 297억원)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실증시설 구축**
 - * Overhead Shuttle System: 이송 및 보관·적재가 일체화된 구조물 형태의 하역시스템
 - ** 하역장비 설계완료('21.3) → 장비제작 착수('21.4) → 실증시설 상부시설 착공('21.8) → 시제품 제작(검수) 및 하부시설 완공('21.12)
- 오버헤드셔틀, 플랫폼 등 자동화장비의 투입을 통해 기존 항만 하역 시스템 대비 50% 이상 생산성 제고*
 - *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물량: 기존 210개 → 350개(2.4만TEU급 선박 기준)
- 기존 항만 대비 높은 컨테이너 적재(기존 5단→ OSS 7단 이상) 및 이송도로 최소화로 공간 활용도 20% 이상 제고
- (기술적용 확대) 선제적인 국내 자동화 항만 시장 창출을 통한 OSS 등의 국내 자동화 항만 기술의 실제 항만 적용 추진
 - 부산항 진해신항(장비 1조1,835억원) 및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장비 3,703억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 규모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진해신항 등 항만물류 인프라 지속 확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진해신항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해외 주요 항만과의 경쟁 동력 확보, 대형선박 입항여건 개선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컨' 항만 경쟁력 제고】

① (수출입물류 지원) 글로벌 해상물류 대란의 상황에서도 항만 내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을 적극 지원

* ('21년) 주요 3개 항만(부산·인천·광양) 물동량 전년대비 수출 3.8%, 수입 6.0% 증가

- 또한, 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국민청원, 6.24)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공급하여 운영**

* 부산항 신·북항에 수출 '컨' 전용 보관장소 공급(총 9,550TEU / 신항 7,650TEU, 북항 1,900TEU)

** 터미널 대비 화물 반입 제한을 완화하고 시중 창고 대비 약 절반의 이용료(상하차료, 보관료)를 부과하여 수출화주의 부담을 대폭 완화

② (경쟁력 제고) 주요 항만*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효율화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 확보**

* 3개 항만(부산항·인천항·광양항)은 전국 물동량의 약 94%를 처리하므로 국가 물류 안보에 중요한 역할

** (부산항) 동북아 환적 허브항 실현을 목표로 신항 신규 터미널 공급 연착륙 도모 등 (인천항) 환항해권 중심항만 도약을 목표로 신항 추가 건설, 남항 단계적 종료 방향 모색 등 (광양항) 터미널 인수합병 이후 2개사 운영체제 정상화,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등

- 특히 '21년도 각 항만별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리스크(화물연대 총파업(11.25-27), 요소수 품귀(10월~))를 차질없이 해소하여 원활한 항만운영 도모

* (부산항) 터미널 간 환적(ITT) 효율화, 신항 서'컨' 운영사 선정 재공모 추진 등 (인천항) 신항 추가 공급('26)에 대비하여 인천항 중장기 운영방안 논의(관계기관 TF 운영) (광양항) 터미널 인수합병('20.12) 이후 2개사 운영체제 정상화

【항만배후단지 기능 강화 ⇒ 6,158억원 투자 유치, 스마트물류 기반 마련】

❶ (기능 고도화) 단순 물류 출입·보관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이 가능한 산업공간으로 배후단지 기능 확대, 항만별 특화구역 활성화

- 제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우선입주기준 완화*, 배후단지에 입주 가능한 유턴기업 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우선입주 기준** 마련('21.6)

*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 80% 이상 → 50% 이상

**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

- 인천항 배후단지 특화구역(콜드체인·전자상거래) 입주기업 2개사*를 선정하여 6,158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 (콜드체인) 1개사(12만㎡) / 5,218억원, (전자상거래) 1개사(4.7만㎡) / 940억원

❷ (기업지원 강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중소기업에 미래형 물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후단지 입주 기업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 사물 간 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 물류센터 2개소*(인천항, 부산항) 건립 추진 중으로, 완공 시 일자리 2,400여명·물동량 4만TEU 창출 및 연간 20억원 물류비 절감 기대

* (인천항) 설계·착공('21~'22) → 준공('23) / (부산항) 설계·착공('22~'23) → 준공('24)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21년 총 147억원 규모) 및 '22년 임대료 동결 추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 '21년 188억원 규모 투자 신규유치】

❶ (클러스터 활성화) 부산·광양('17년 지정) 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모 실시

- 제2기 해양산업클러스터 후보지 모색을 위한 전국 무역항 대상 유희항만 실태조사*('21.6)를 추진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R&D 테스트베드 및 연구사무실 입주기관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공모를 실시(2차 : '21.4~5, 3차 : '21.8~10)하여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사업' 신규 유치('21.10, 188억원)

② (제도적 기반 정비)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상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고용보조금)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정부·지자체가 고용보조금 지급 가능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간 협업 증진 등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가능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법 시행('21.1)

- 사업의 효과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 '21.7)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만배후단지 기능 지속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글로벌 해상물류 대란의 상황에서도 항만 내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효과가 다소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항만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수부 주도로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7.5)하고, 대책을 뒷받침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8.3)
- 항만사업장별 하역사 주관으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항만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주체 명확화
- 「항만하역 표준안전매뉴얼」 마련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항만 하역분야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및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을 통한 사전 사고예방 활동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대
- 항만출입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및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항만안전문화 확산

【스마트항만 도입 대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 스마트항만 도입에 대비하여 재직자 직무전환 지원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 자동화장비 교육훈련프로그램 신규 개설, 교육장비(시뮬레이터 등) 도입을 통해 기존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체계 구축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항만 대기질 개선 기여】

- 해양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항만 지역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속운항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에서 저속 입항시 PA별 예산 범위에서 항비의 일부분 환급

- 항만별·선박별로 인센티브 차등 적용 지급 기준 마련,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선사 참여율 제고로 항만 대기질 개선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수부 주도로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뒷받침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하는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 표준을 따르고 해외 선진 설계기준에 준하는 독자적인 항만 설계기준 개발·운영 환경 개발을 통하여 자연재해 증가 및 항만 운영환경 다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보 가능
- 국내 해역별 해양환경 및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조건 개발을 통하여 안정성, 신뢰성 높은 항만시설 확보 가능
- 개발 위주에서 운영·유지관리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항만의 목표성능 기반의 전 생애주기 항만 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소통·확산노력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확산노력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 정책효과 개선·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부진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자연재해 증가 및 항만 운영환경 다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보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신규 재개발 적극 발굴로 일자리창출·주민편익 제고】

- (인천내항) 주민숙원 사업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2차례 무산('15~'16) 된 내항1·8부두 재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 3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1.8, 인천항만공사) 후 협상 착수('21.9~)
 - 사업계획 수립 관련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 및 소위원회(3개분과) 구성·운영
- 재개발 추진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부산 용호부두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재개발 전까지 시민이용 공원으로 임시활용·제공('21.7~)
 - * 관계기관간 업무협약(MOU, '20.12)에 따라 친수공원 조성·개방(남구청, 7억원)
 - 친수시설 조성 관련 지역 관심·호응도가 높으며 관광객 유치 효과
- (포항 구항) 지역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지자체 주도로 사업시행자 공모('21.6~9) 후 제안서 검토('21.10~'22.3) 중
 - * (위치/면적/추정사업비) 송도부두일원, 176만m², 1,336억원
- (구룡포항) '06년이후 방치된 투기장의 조속한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민간수요조사(10.26)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 공모 추진계획 수립(12.8)
 - * (사업개요) 구룡포항 일대/ 3.9만m²/ 153억원(부지조성)
- (협의체 구성) 금란도·장항항 재개발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21.12)하고,
 - *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 전북도 해양항만과장, 충남도 해운항만과장, 군산시 경제항만 혁신국장, 서천군 부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등 6명
 - 지역주민대표·전문가 등의 전반적인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도 지자체 추천을 받아 구성('21.12)
 - * (지역주민대표) 아촌계 수협 시민단체 등, (전문가) 항만분야(업계 포함), 도시계획 재생 물류 관광 등

- (예산 확보) 금란도 등 항만재개발 추진방향 설정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한 '22년 예산 확보(5억원)

【차질없는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해양관광·산업도시 육성】

- (영종도) 1단계 사업(249만m², 1,935억원)을 차질없이 준공('12.12)하고,
 - 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8회), 사후관리방안* 수립('21.10)
 - * 국가귀속 분양 용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기관별(인천청, 인천항만공사 등) 역할 정립
 - 현장방문, 온라인 설명회 개최 결과, 12개국(미국,일본 등), 총 101개 업체에서 투자의향 제출(12월기준)
- (고현항) 3단계 부지조성(15만m², 2,552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2단계 주거시설 착공('21.3, 1,113세대) 및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반영 등 주민니즈에 맞는 주거·관광시설 제공
 - 자금조달 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21.5 심의)를 활용한 규정 적극해석으로 검토·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 (광양 묘도 재개발) 현재 재개발구역 부지조성 중(312만m², 2,528억원)
 - LNG허브터미널 저장탱크 공사계획(9.16 승인)과 연계·운영토록 LNG부두 건설사업 시행허가(8.4, 해수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 (광양 3단계 투기장 재개발) 재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완료를 대비하여 설계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방안 마련('2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추진('21.12)
 - * (면적)326만m²/(시행자)YGPA/(기간)'20~'29/(총사업비)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제도 개선】

-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의 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항만공사가 사업 계획 제안 시 3자 제안 공고 생략 등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개정('21.12)

- (추진체계 개편) 시민참여 제도화, 재정지원방안, 법령 체계 정비 등 개선사항 발굴*·반영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마련('21.12)

* (주요내용) 지역협의체·경관가이드라인 마련 법제화, 국유재산 매각특례, 재개발 전담기관 설립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만재개발 활성화시 지역·민간 지원확대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거의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포항 일대 항만 재개발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한 부산항 북항의 시민 환원】

- '22년 기반시설의 시민개방을 위해 '21년 말까지 추진율 90%를 달성하고, 기 조성된 일부구역(친수공원 등)에 대해 우선 시민개방 추진
 - * 지하차도(부산해수청, 기초공사 등 공정률 37%) 및 오페라하우스(부산시, 건축물 외벽 시공 등 공정률 32%)는 '23년 준공
- 1단계 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친수공원 등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22.5.)하고, 집객시설 및 관광콘텐츠 확충 추진
- 1단계 사업의 앵커시설·문화 핵심시설인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정율 32% 달성)
- 북항 재개발 구역의 랜드마크 부지 사업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 잔여 매각예정부지(18만㎡)*의 공공성 증대와 상생(원도심↔북항지역) 측면에서 조망권을 개선한 사업화 방안에 따른 랜드마크 매각 기반조성
 - * 해양문화지구(14.5만㎡), IT·영상지구(2.0만㎡), 기타지구(1.5만㎡)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수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원】

- 부산항신항 개장('06) 이후 컨테이너(이하 '컨) 물동량 쏠림이 가속됨에 따른 북항 일원의 해운·항만, 철도, 원도심의 기능 및 경쟁력 회복 필요
 - 항만시설 노후*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따른 신항만 물동량 이동으로 자성대부두('23년까지 운영 예정) 유희화 발생
 - * 부두개장 : 자성대(1978년), 신선대(1991년) 등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
 - 부산진CY 처리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유희화와 철도시설 노후화(경부선 1905년 개통)에 따른 시설 이전 및 기능 재편 추진
 - * 물동량 전망 : '15년(229천TEU) → '20('193천) → '25(162천) → '30(98천)

- 2단계 사업의 실시협약 협상 시 증가된 사업비(4조4천억원)를 반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1.8.) 및 착수('21.10.)
 - * 예타('21.~'22.)→실시협약('22.下)→사업계획('23.上)→실시계획 및 착공('24.上)
- 북항 일원의 복잡한 교통체계의 조사·분석·진단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종합교통망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21. 1.),
 - 교통망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재개발 재정지원 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협상대상자 합의('21. 4.)
 - * 도로 등 기반시설 15개 사업 3,858억원 중 2,389억원 재정지원
- 사업구역 내 위치한 관공선 등 소형선(383척) 대체 이전지 검토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협의(예타 등)('21.3)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산업부) 수립 시 부산항북항 통합개발 사업계획과 연계되기 위한 협력 및 박람회 유치 지원
 - BIE 제168차 총회('21.6.29)에서의 PT*를 시작으로 BIE회원국(169개국) 설득을 위한 교섭활동 본격 추진(부산 엑스포 유치단)
 - * 유치기획단장 발언(2~3분)과 부산 소개영상(3~5분) 등으로 구성

【부산항북항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구역의 미래가치 상승 기대】

- 부산의 GRDP은 2,741만원으로 전국 평균 3,721만원에 크게 못미치며, 1인당 개인소득은 1,968만원으로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낮은 현실
 - 이러한 부산에 약 6.8조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2030 부산엑스포와 함께 '부산 대개조'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
- 재개발 사업 완료 시 항만시설과 더불어 해양문화, 상업·업무, IT·영상·전시, 복합도심지구 등이 조성, 약 31조 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수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속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거의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우수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한 부산항 북항의 시민 환원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항만 민자사업 정책 수립】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부두 변경실시협약 체결

- (추진배경) 2017년 1월 대규모 환경 관련 민원에 따라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었으며, 해수부와 사업시행자는 2019년 11월부터 총 13차례의 본협상 및 실무협상을 통해 골재 수급 차질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협상결과) 골재수급 차질로 인해 지연된 공사기간 15개월 연장, 이로 인해 증가된 총사업비 144.6억원 반영 및 무상사용기간 4.54년 연장에 합의하여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2차관) 상정 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 (정책효과) 증가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5월 사업 준공 및 6월 개장식 이후 신규 선사(서비스) 및 물동량을 유치하는 데에 준비 기반을 마련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 ‘20.7월 항만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을 통해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항만시설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 산업현장에서는 액체화물 하역 및 이송시설을 포함한 계류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적극해석 또는 규제 완화 확대 요구

- (추진결과)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임대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하였고,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제도개선 적기 발굴

*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방안 연구용역('21.5.11~12.9.)

- (정책효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령 개정전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관리청 전용 항만 시설의 임대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서비스 질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

○ 인천북항 교환대상부지 활용방안 수립

- (추진배경 및 문제점) '02년 환경분쟁위원회 심판결과*와 '06년 1월 인천광역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으로 촉발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책발표(인천 남항 국유지내) 이후 토지교환에 대한 기관간(인천지방청-인천광역시) 이견으로 15년간 민원 장기화

*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심판 결과 인천시와 중구청의 책임을 50%씩 인정하고, 우리부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02.4)

- (대책방안) 국·공유지 토지교환 방안이 합의(인천청↔인천시)됨에 따라 교환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활용)계획 수립('21.12)*

* 해양수산 공공기관 입주를 기준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추진

- (정책효과) 교환 예정지 활용계획을 '22년도 국유재산 처분계획에 반영할 경우 토지교환이 가능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에 기여

○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조기집행 방안

- (추진배경) 전년도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올해 하반기(8월) 지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어려움을 겪는 민자부두의 경영난 가중

- (대책방안) MRG 지급대상 5개 부두*에 대하여 금액 확정 전 MRG 일부를 조기집행(8월→4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울산신항, 목포신외항(1-1, 1-2)

- (정책효과) '21년 예산 499억원 중 70%인 36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자부두의 자금난 해결에 기여
- 비관리청 사업 관련 청렴도 제고
 - (배경)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고객중심의 행정절차 이행 및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 추진
 - '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부문이 '19년 대비 최하위에서 상위그룹*으로 향상
 - * (목표) '18년(7.47) → '19년(5.16) → '20년(7.8, '19년 평가 대비 2.64점 목표 상향)
 - (문제점)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및 민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및 인력배치 부족으로 민원 대응 한계 도달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투자 현황
 - 허가현황 : ('18)168건, 1조5백억, ('19)236건, 1조3천억, ('20)191건, 2조4백억원
 - (해결방안) 행정절차 정비로 반복민원 감소 및 국민신뢰 회복
 - 업무담당자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및 제도개선 지속 발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과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물류·제조기업 유치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 실시협약안 협상 및 협약 체결('21.12.21.)

【신규 민자사업 발굴】

- 부산항 신항 남'권' 피더부두
 - (추진배경·현황) 부산항 신항 내 최초의 피더 전용부두(2선석 규모)로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2.24) 이후 선석배치, 터미널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보완 중

- 최근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부산항 신항에 대형 컨테이너선을 위한 항만시설은 지속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중·소형 '컨'선은 사용 우선순위에 밀려 북항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물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최근 3년간 부산항 피더선 물동량은 북항이 66.3%, 신항이 33.7% 처리

- (정책효과) 북항과 신항 간의 중·소형 피더 화물 환적 셔틀에 대한 물류비 부담 및 물류 흐름을 분산하고, 셔틀 물량 감소에 따른 도심 교통체증 완화
- 민자를 통한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재정 절약 및 적시성 있는 항만시설 조성 추진

○ 부산항 신항 남'컨' 잡화부두

- (추진배경·현황) 부산항 신항 내 최초의 잡화부두(2선석 규모)로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10.8) 이후 선석배치, 터미널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보완 중
- (정책효과) 기존에 운영되었던 단순 잡화 화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 하역, 물류, 제조 등 산업 간 융복합 기능의 One-Stop 물류 서비스 제공 등 다기능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부두 운영 방식 도입
- 항만서비스 대상을 해외 진출 화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형 화주의 수출입 물류 지원 허브 시설 제공(원스톱물류센터)

○ 인천남항 2단계 2종

- 1종 항만배후단지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근린공원, 녹지, 도로 등 인천남항 2종 항만배후단지 53만m² 개발
- * (추진일정) 사업제안서 접수('21. 2) →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21.3~7) → 제3자 제안 공모 공고('21.10~'21.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2.상)

○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 민간투자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는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94m² 개발

* (추진일정) 사업제안서 접수('21. 5) →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21.5~11) → 제3자 제안 공모 공고('21.12~'22.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2.상)

○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 (현황) 국내에 대형 수리조선소가 없어 국적 대형선 및 부산항 이용 외국적선은 중국, 싱가포르 등을 이용하여 국부 유출* 발생

* '15년 기준, 3만톤급 이상 국적선 수리는 99%(222/225회) 해외에서 시행, 최소 1,738억원 ~ 최대 6,957억원을 수리비용으로 지출(해외수리조선소 평균 단가 적용)

- (정책효과) 부산신항 신규 '컨'부두(2-4단계 등)가 '22년 개장 예정으로 이와 연계한 항만관련 서비스 확충 및 종합항만으로의 도약
- 세계 주 간선향로 상에 위치한 부산항의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형선박 검사·수리 등 원스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조선 산업 활성화로 연관산업 효과가 큰 항만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 부산항 인근에 선박 수리에 필요한 전기, 통신, 기계장비 부품 수리업체 등 조선관련 기자재 및 부품회사가 밀집해 있어 연관 산업 육성 계기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부두 변경실시협약 체결,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 제도개선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 전환 가속화)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 확대 및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양식 보급으로 산업구조 전환 촉진
 - 스마트양식 ICT·자동화 기술 실증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5개소),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1개소)* 조성 및 연구시설·양식어가(10개소)** 지원
 -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부산·경남 고성('19~'22), 전남 신안('20~'23), 강원·경북 포항('21~'24), (내수면 스마트양식장)전남 화순('21~'22)
 - ** ICT기반 친환경 순환여과식 연구시설(경북), 빅데이터기반 스마트어류양식 플랫폼구축(전남), 순환여과식친환경스마트현대리새우양식시설(경기) 등 10개소에 국비 100억 지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같이 양식업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양식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 기존 산업시설용지(농공단지 내) 1차 산업 시설(양식장 등)이 입주 가능토록 해수부·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7월)
 - ** 양식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절차 준용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 발전법」개정 추진('21.12월 현재 법사위 상정대기)
-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부표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양식기술·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탄소중립형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 기존 굴 양식업을 굴패각 발생 및 부표사용이 적은 친환경 개체 굴 양식 전환지원*으로 미세플라스틱 및 탄소배출 감축**
 - * 종자생산 및 자동화 설비를 갖춘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 지원(30억/신안, 남해, 통영, 고성)
 - ** 기존 굴양식 80ha 전환지원으로 굴패각 5.6톤 및 부표사용량 8만개 감소, 탄소발생량 476tco₂e 절감

- 히트펌프·인버터·태양열발전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설비를 149개소에 260대 보급하여 9,125톤의 탄소 저감 효과 창출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소통을 통해 연안 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 금지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 부표 보급 확대

* 양식장 등 어장에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토록 「어장관리법」시행규칙 개정(11.12.)

** '21년 친환경부표 보급개수: 320만개 / 친환경부표 누적보급률: 39.5%

- (일자리 창출 지속) 청년창업, 귀어·귀촌인 등 양식업 신규 취·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진입장벽 완화

- '21년 기술이전 교육컨설팅 수료자 138명 중 32명 취업* 또는 창업**

* 취업(1명): 흰다리새우 1 / ** 창업(31명): 흰다리새우 13, 굴 3, 큰징거미새우 15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탄소중립형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지속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친환경·첨단양식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 확대 및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양식 보급으로 산업구조 전환 촉진하는 등 정책 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연어양식 육성)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강원) 협업으로 그간 반입이 제한되었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최초 반입으로 연어양식의 국산화 기틀 마련
 - * 아이슬란드 검역증명서 협의 완료('21.8), 수정란 수입 거래선 확보('21.9), 수입('21.10)
 - 향후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추진으로 전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어류 질병예방센터 건립 추진
 - * (총사업비) 226억원, (사업기간) '22~'24, (사업주체) 국립수산물과학원
- (수산물부산물법 제정) 그간 연안에 방치되어 악취, 경관훼손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킨 92만톤의 굴 폐각 등을 자원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21.7)했고, 12만톤을 연료로 하여 부가가치 54억원** 창출
 - * '21년도 해수부 적극행정 차관릴레이 우수과제 선정(9.9, 국조실)
 - 해수부, 환경부, 현대제철·포스코 협업으로 법률시행 전 임시로 폐각 재활용 제철소 소결제 사용승인(9.15) 및 첫 산업납품(9.27)
- (연구성과 확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수한 형질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을 수상(12.7) 하고 양식어가 기술보급
 - * 최우수상: 전복(제주대) / 우수상(2): 환경내성김(공주대), 붕바리(씨알)
- (종자품질표시제 신설) 수산종자품질표시제 최초 도입으로 부가가치 28.8억원을 창출하고 제도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정책·환류체계 마련
 - 양식 대표품종인 넙치, 전복을 대상으로 '21년도 최초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를 시범도입('21)하여 28.8억원* 부가가치 창출
 - * 품질표시제 시범운영 넙치, 전복 64개어가(업체당 연간 판매액 3억)에 기대효과(품질 향상 10%, 불법종자 유통방지 5%)를 고려할 때 28.8억원(64×3×15%) 부가가치창출

- 수산종자 생산업 기초 정책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청 승인('21.8) 및 실시('21.10)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환류체계 마련

* (대상) 수산종자생산업체 3,134개, (내용) 사업체 실태, 생산·사육·폐사·판매·경영 현황

- (신품종 개발·보호) 넙치, 김, 바리류, 전복 등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한국산 해조류종자의 심사·등록 등을 통해 품종보호권 체계 확립

- 고수온·질병확산 등 변화된 양식환경에 적응된 넙치, 김, 바리류, 전복 등의 우수종자 개발 및 보급으로 2,500만 달러 수출 달성

* GSP수출액(만불/∼'21) : 넙치 720, 전복 1,207, 바리과 503, 김 70

** 국내매출(백만원/∼'21) : 총 7,042 / 넙치 570, 전복 3,846, 바리과 2,505, 김, 121

- 김 신품종 개발·보급시 연간 최대 2,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및 김, 미역 등 유전자마커 개발로 분쟁 방지 및 보호권 체계 확립

- 김, 넙치 등 우리나라 대표품종에 대해 비상보급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에서 육종한 넙치친어 민간 분양을 통해 종자경쟁력 제고

* 비상용 김종자(유리사상체) 보급가능물량 확대(8kg→15kg, 수과원), 국가개발 넙치친어의 품종보호(특허 실시권 활용) 획득 및 민간분양으로 종자보급 확대

- (어장재배치) 상습적인 고수온 피해지역(충남 천수만) 소재 가두리 양식장을 깊은 수심으로 이전하여 재해 예방 및 성장촉진 효과

- 안정된 수온으로 인해 기존 연안어장 대비 최대 30% 빠른 성장을 보이고, 연중 사료공급이 가능하여 양식기간을 단축하며, 고수온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성 입증

- (ESG 경영 확대)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통 방식에서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양식어업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증대를 통한 양식산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 직불금을 통한 친환경 생산어가 소득보전,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사료 공급망 구축* 및 사료품질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건수 91%, 배합사료 사용률 전년 대비 5.5% 증가

* 배합사료 공장 1개소 준공(전남 장흥), '22년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 예산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하여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대서양연어 수정란 최초 반입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양식생산액 증가) 양식업 생산기반 강화를 통해 양식수산물 생산액이 전년동기 대비 9.4%(2,134억원) 증가, 양식생산량도 2%(4만톤) 증가
 - * 천해양식 생산액·생산량 현황(1월~10월 기준, 출처 : 국가통계포털-어업생산동향)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양식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연간 1조 5,758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신규일자리 1,645개 창출 기대
 - * 생산유발효과(1조 1,809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3,949억원)
 -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해양수산부고시) 제정·시행('21.2.23)
 - 연어, 참다랑어 등 수입대체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업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양식어가와의 상생 협력체계 조성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고수온 발생기간(43일)이 동일한 '18년 대비 피해금액 64%(389억원), 피해 수산물 규모 70%(4,500만마리) 감소
 - (대응역량 강화)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어업인 현장교육, 고수온 대응 사전점검 등 고수온 발생 전 사전대비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 * 대응장비 지원 : 10개 지자체 46억원(산소공급기, 저층해수공급장치, 차광막 등)
 - 고수온 현장교육 : 5개 시·도 238명(경남, 제주, 충남, 전남, 경북)
 - (재난대응 예산 추가확보) 선제적 예산전용을 통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재원 확보(6.4억원) 및 피해어가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 * 재해예방형 가두리(12억원), 고수온 내성 전복 우량종자 입식(20억원)

- (정보활용체계 개선) 양식장 수온관측망* 확대, 온라인·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등 IT와 접목한 예찰·예보 정보 활용성 개선
 - * 양식장 수온관측망 : ('20년) 120개소 → ('21년) 140개소(20개소 추가 확충)
- (제도개선) 입식 미신고 어가 최소화를 위해 입식신고 기간을 기존 “입식 후 10일 이내”에서 “입식 후 20일 이내”로 연장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21.6.1)
- (입식신고 편의 개선)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집중신고 기간 지정·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양식어가의 편의 개선
- (코로나19 피해어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피해극복을 위해 어가 당 1백만원 지원(총 29억원 추경예산 반영)
 - * 지원대상 : 전년 대비 생산액 또는 단가가 10% 이상 하락한 품목(총 22개 품목)
(지원대상 어가 확대를 위해 최초 15개 품목에서 대상품목 확대)
- (양식업 진입장벽 해소) 공공임대형 양식면허 도입, 양식장 임대 활성화 등 양식면허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신규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주거여건 개선 등을 반영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어촌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수급안정화) 수산물 관측 고도화 및 자조금 지원, 소비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수산물관측 고도화) 표본 확대 및 검증체계 강화, 수산물 소비통계 생산체계 구축, 조직개편방안 마련 등 수산물관측 신뢰도 향상
- (자율 수급관리 역량 강화) 수산물자조금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의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소비촉진·수급조절 등 지원('21년 35억원)
- (양식수산물 소비·홍보) 수산양식박람회,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등 다양한 소비·홍보 이벤트를 통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 온라인박람회(홈페이지) 방문객수 40,521명, 유튜브 조회수 130,098건,
요리경연대회 : 중·고등부, 일반부, 단체급식부 3개 부문 119개 팀 참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양식산업 규모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양식장 HACCP 확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적발 사례 감소(전년대비 27건 감소)

- (수산물 안전성 확보) 안전성 조사 확대('20/14,500→'21/15,000건)에도 양식장 HACCP 등록 전년 대비 25% 증가* 및 약품사용실태 점검(6~11월)**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 발생 건수 감소***

* HACCP 인증 양식장 수 : ('20) 284개소 → ('21) 354개소

** 양식장 1,995개소 점검 결과, 475건(23.8%) 의약품 안전사용 개선 지도 실시

*** 부적합 건수 전년 대비 24%(17건) 감소('20년 71건 → '21년 54건)

- (양식장 HACCP 실효성 제고) 생산자는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양식장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HACCP 수산물의 온라인 마켓 등 입점*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 온라인: 신세계 홈쇼핑, 소셜커머스(쿠팡, 네이버쇼핑 등), 이마트몰, 롯데ON 등
오프라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부적합 사후관리 강화) 금지물질, 패류독소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수산물이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후속조치 철저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발표('21.4)에 따라 오염수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대응책을 발표*('21.4) 하여 원전 오염수 대응

* ①해양방사능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 ②후쿠시마현 등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③해양방사성물질 거동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 ④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⑤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

- (방사능 검사 강화) 국내 생산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을 전년대비 29.4% 이상 확대* 시행으로 방사능 검사 강화

* 수산물 방사능 조사 건수(건): ('18) 2,283 → ('19) 2,330 → ('20) 2,699 → ('21) 3,493

- (방사능 대응 강화)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강화 방안*을 마련('21.10)하고 방사능 검사인력·예산 확충**

* ('20) 다소비 40여 품종 → ('21) 연간 1천톤 이상 생산 100여 품종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안전과 신설(4급 1, 5급 1, 6급 1),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신규 확충(해수부 5대, 위판장 10개소 36억원)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건강 보호

- (PLS 시행 대비)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24.1~)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이해관계자 정책홍보** 및 소통 강화

*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로 수산물에는 어류의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적용

** PLS 도입('24) 관련 생산자단체 간담회, 리플릿, 동영상 제작 등 이해관계자별(어민, 지자체, 수산질병관리사 등)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소통 실시

- (항균제 일률기준 강화) 잔류기준 미설정 항균제 기준변경* 대비** 항균제 오·남용 예방 강화

* 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항균제 일률기준 적용(0.01mg/kg) 시행('22.1~)

** 전국 양식장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및 항균제 일률기준 도입 홍보('21, 1,995개소)

- (에톡시퀸 안전관리) 양식업계의 원활한 無에톡시퀸 전환을 위해 유예종료 시점('22.6)까지 사료·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에톡시퀸 모니터링*과 어가 소통 추진으로 향후 부적합 발생 방지

* 사료(분기별)·수산물(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시 지도·점검 등 후속조치 수행

- (식품 안전사고 예방) 생산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기별·테마별 주요 위해요소 예방 정보 및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법 연계 제공*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인식과 소비촉진 양가 가치 모두 실현

* (봄) 패류독소 안전관리 (여름) 비브리오팀 예방법, (가을) 한가위 위생 조리법, (겨울) 노로바이러스 대비 조리법 등 홍보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수산물 생산해역 및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위생관리체계로 발전

- (패류 위생조사 확대) 패류생산해역 위생조사 모니터링 항목 확대* (전년대비 98% 증가) 및 조사해역 확대** (전년 대비 3개소 추가)

* ('20) 42개 항목 → ('21) 83개 항목(다이옥신, 농약류, 항생물질 등 41개 추가)

** ('20) 조사해역 71개(지정 7, 일반 64) → ('21) 74개(지정 7, 일반 67)

- (식중독 관리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품종(1→4종) 및 바이러스(1→2항목)에 대한 조사 확대('21.11~)

* 대상품종 : 굴→굴·바지락·피조개·멍게 / 조사항목 : 노로바이러스→노로·A형간염바이러스

- (식중독 원인 차단)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의 주 원인인 하수(분뇨)의 해역유입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환경부 협업)

* '25년까지 지정해역 주변 37개소 설치 예정, '21.12 현재 4개소 완공, 공사중 13개소

- (쿠도아 안전관리) 쿠도아 치료제 개발 연구* 및 쿠도아 관리 방안** 지속 추진

*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조사('21~'22), 효능검증 및 제조허가 공동연구('23~'24)

** 납치 양식장 취수관 교체·연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관리 강화 및 외국과의 유기적인 위생협력 체계를 지속하여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

- (한국패류위생계획(KSSP)) 수출용 패류의 위생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수립·시행중인 KSS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수출용 패류의 안전성 확립 노력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지자체(시·도, 시·군·구), 해경, 관련 수협 등

- (위생점검 대응) 미국·EU의 한국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및 수출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현지점검 및 영상점검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인 패류 수출 및 위생협력 강화

* 美FDA는 2년마다 현지점검 실시, 점검결과 "적합" 판정 시 對미 패류 수출 허용

** 對EU 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영상점검 실시('21.12.6~17)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역량 강화) 수산물 전염병 관리기능 일원화 중장기('21~'25)대책마련, 질병예방 기술 선진화 등으로 수산물 공급 안정화 도모

- (검·방역 통합)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행정 처리기관을 일원화('21.3)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 (질병관리대책수립)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진단·사후처리 등 전주기적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수산생물 안전국가 기반 구축
-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긴급방역대책, 진단체계의 강화, 민관 협조 체계의 구축 등 수산생물질병의 전주기 관리 강화('21~'25)
- (체계적 예방) 수산물 검역 대상 확대(양서류*), 진단 기술 개발(1종, VHS), 전염병 모니터링 비율 상향 등을 통한 국내 양식어업인 보호
- * 인수공통감염병의 주요 매개체로 우려되는 해외 야생동물(양서류) 관리를 통한 사람·동물 사이에 질병 전파 예방
- (질병확산방지) 전파력·전염성이 강한 질병(APHAND, Iridovirus) 발생 시 신속 대응(살처분, 이동·격리)을 통한 추가감염 차단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통한 양식어업인 생계회복 기회 제공
- (전문인력 양성) 메가 FTA 확대체결에 따라 수산생물의 국가간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 등 질병관리 전문 인력(수산질병관리사) 지속 배출
- (체계적 예방) 수산물 검역 대상 확대(양서류*), 진단 기술 개발(1종, VHS), 전염병 모니터링 비율 상향 등을 통한 국내 양식어업인 보호
- * 인수공통감염병의 주요 매개체로 우려되는 해외 야생동물(양서류) 관리를 통한 사람·동물 사이에 질병 전파 예방
-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품 개발, 약품 사용 관리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예측적·과학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전자처방관리시스템)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진단·검안·처방의 전자적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약품 안전정책 마련
- * 전자처방관리 시스템 구축('21.12) → 시범 운영(~'22.2) → 정식운영('22.3~)
- (의약품 연구) 수산동물 질병 발생 동향에 따른 신규 의약품 연구 추진* 및 기허가 의약품의 최신 과학 수준으로의 재평가**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어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 ('16) 1종 → ('17) 1종 → ('18) 2종 → ('19) 2종 → ('20)2종 → ('21)2종 → ('22)10종

** ('20) 클로람페니콜 등 항균제 2종 81 제품 → ('21) 겐타마이신 등 항균제 4종 40 제품

***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에 효과적인 수산용 구충제 2종 개발 및 제약업체 기술이전(7.12)

- (불법판매 신고센터) 동물용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거래 차단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부작용 방지

* 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개설·운영(수품원 홈페이지, 9.15)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여 수산물 안전성 강화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소비쿠폰 발행규모 180% 확대로 총 2,618억원의 수산시장 내수 창출】

- 코로나19 장기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20, 210억원 → '21, 590억원 / 180% ↑)하여 총 2,618억원의 소비 창출
- (어업인) 주요 소비부진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함으로써, 공급 과잉 상황이던 대중성어종에 대한 산지 적체물량을 해소하여 산지가격 안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소상공인) 전국 전통시장 34개소와 협업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실시, 매출 증대 등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비자)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성수기 물가관리로 수산물 가격 안정화】

- (수급관리) 정부비축 및 민간수매(용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산물 수급 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감물가 지속 점검

* 정부비축 : ('20) 705억원 1.3만톤 → ('21) 1,005억원 2.4만톤 / 민간수매 : ('20) 509 → ('21) 719억원

** 생산자단체(수협), 소비자단체(소비자연맹), 전통시장, 유통업계 등 참여

- 아울러, 물가분석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규격을 다양화하는 등 수산물 물가관리 및 수급동향 분석 고도화
- (집중관리) 특히, 추석 명절기간 집중 물가 관리*(대통령 지시사항)를 통해 수산물 성수품 6종의 평균가격이 18.8% 하락(9.16일 기준, 8.30일 대비)
- * 정부비축 물량(7,185톤) 최대 30% 할인방출 할인을 상향(20→30%)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수입산) 민감도가 높거나 적발 실적이 높은 수산물을 10대 중점품목*으로 지정('21.1)하여 집중 관리하고,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전문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기동단속반 구성·운영('21.3)

*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주꾸미, 대게

- 특히, 설·추석('21.2·9) 등 명절, 봄 성수기('21.4~5)*, 휴가철('21.8)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점검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 12,538개소 점검('21.4~5) ⇒ 165개소 위반사항 적발 (미표시 123개소, 거짓표시 42개소)

- (국내산)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이력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수산물 이력제 개선방안('21.11)'을 수립하여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특히, 이력제 개선방안의 핵심인 수협 위판 정보시스템과 수산물 이력제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예산 확보(1.5억원) 완료

【FDC 처리물량 618% 증가, 일자리 151개 신규 창출 등 新유통경로 확대】

- (직거래 확대 등)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대상*을 호남권(전남·전북, 10개소)으로 확대하여 생산자 소득 증대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 ('20) 중부권(세종, 대전, 태안) 10개소 → ('21) 호남권(전북, 전남) 10개소

- (유통단계 축소) ^{소비자친화적}FDC 2개소 구축으로 산지 → 소비지 유통단계를 축소(기준 6 → 4단계)하고, 생산자 중심 유통 강화

* FDC 구축운영실적: ('20) 인천 1개소, 처리물량 932톤 → ('21.10) 인천·호남권 2개소, 6,694톤

- 특히, FPC 4개소, FDC 2개소에서 4년간 총 151명(FPC 46명, FDC 105명)을 신규 채용하여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생산·유통업계 협력을 통한 불법수산물 유통 금지】

- (유통포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유통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 창립('21)

- (불법수산물 유통근절) 미성숙 어종에 대해 ‘총알오징어’, ‘연지 홍게’ 등 이름을 변경하여 유통업체에서 판매, 이로 인해 자원고갈 우려가 있다는 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응
 - (종합대책 마련) 언론 지적 등을 반영하여 유통·소비자단체 협력, 생산·유통 감시체계, 혼획 미성어 시장 분리(중장기) 등이 포함된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을 마련
 - (협약체결) 정부·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어린 물고기 등 불법어업 수산물 유통금지 상생협약* 체결(4.19)
- * “월마트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는 할인 판매”(1.28, 이데일리), “새끼 생선 알고도 판매하는 유통가”(2.5, 이데일리), “총알로 포장한 새끼 오징어 남획”(2.8, 채널A) 등
- ☞ 소비자 관리형 자원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수산물 유통 금지 상생 협약 체결 등으로 ‘총알오징어 온라인 유통 비중 전년 대비 39% 감소’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청정위판장 조성 및 저온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청정위판장 등 조성) 청정위판장 1개소(‘21.3월, 여수), 저온 위판장 리모델링 1개소(‘21.4월, 목포)를 공모로 선정하여 산지 위판장 위생 환경 개선 여건을 마련
- (인프라) 수산물의 저온 보관·수송 등의 확대를 위해 산지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온차량(6대), 자동선별기(4대)를 지원
- (위판장 개선방안) 산지 위판장 위생·유통환경 개선방안을 마련(‘21.12)
 - (위생 위판장 전환) 전국 211개 위판장에 대한 위생 위판장으로 전환 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조합의 역할 분담 및 시설 투자 로드맵 구축
 - (위판장 수익구조 마련) 온라인 거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판장의 수익 다변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산지 풀필먼트 기능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지속 대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소비쿠폰 발행규모 180% 확대로 총 2,644억원의 수산물 내수 창출, 성수기 물가관리로 수산물 가격 안정화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코로나19·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산물 수출 실적 달성】

-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 비대면 판로 확보 및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 V자 반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견인

* 수산물 수출(억불): ('18) 23.8 → ('19) 25.1 → ('20) 23.1 → **(21) 28.2, 역대 최대**

- 특히, 김은 러시아·독일 등 신규 시장 개척, 온라인 마케팅 확대 등 수출지원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 경신, 식품 분야 1위 기록, 114개국 수출

* 김(억불): ('18) 23.8 → ('19) 5.8 → ('20) 6 → **(21) 6.9, 역대 최대**

【코로나19로 변화된 무역·소비시장 대응, 비대면 수출 본격화】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e커머스플랫폼에 한국수산물 판매 전용 K-SEAFOOD(5개관)을 개설하여 지속 가능한 온라인 판로 확보

* 제8차 범정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모범사례로 선정(국조실, '21.6.4)

-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을 확충하고 △화상 무역상담회를 수시 상담 체계로 전환, △온라인 박람회 정례화(연 2회)로 추가 수출 견인

【물류대란 속에서도 민관 협업으로 수출업계 물류 애로 해소】

-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화물 수요에 대응하여 6.5백만불 수출 성과 도출

* 民(HMM, aT)+官(해수부, 농식품부) / 수산물 월65TEU 우선 배정('21.7.17~12월)

-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류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수출업체의 무역 애로 해소를 위해 방역, 물류비 등 추가 지원

- * 우수수산물 지원(유자), 수출바우처·선도조직 지원(보조) 등 기존 수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수출기업 필요에 따라 물류비 등 사용 허용

【수산가공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

- 국내 수산물 수출 거점인 전남·부산에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수출 등의 기능을 집적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선도사업 추진 기반 마련
 - *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1.11) 및 '22년 신규 예산 21억원(설계비) 확보, 전남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기본설계 완료('21.10)
-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기 조성된 거점단지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추진
 - * 어묵볶이, 명란구이(HMR), 치즈 새우롤 등 제품개발(전남 15건, 부산 14건)
- 마른 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세를 절감하여 운영비 경감 및 온실가스 감축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법」 본격 시행('21.2)으로 중장기 기본계획('21~'25) 및 '22년 시행계획 마련
 - *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 수립('21.3)
 - ** 2022년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21.12)
- 「김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시행('21.12)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김 산업을 주요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부산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이후 R&D 등 다양한 S/W 사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매우우수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역대 최고 수산물 수출 실적 달성, 코로나19로 변화된 무역·소비 시장 대응 등 정책효과가 매우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팀 신설】

- (공익직불제 시행)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자원보호 등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가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 법령 전면 개정, 시행('21.3)과 예산 515억('20년 128억 대비 302% ↑) 확보, 기존 직불제 1종을 4종으로 확대
- (조직·인력 확보) 수산공익직불제팀을 신설하고, 소속기관 전담 인력 11명 확보(8.10, 조직개편)

【영세어가 바우처 지원 등 어가(漁家)의 안정적 생활 지원】

- (직불금 확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인상
 - 어가당 직불금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상향('16. 50만원 → '21. 75만원)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율도 상향('20. 70% → '21. 80%)
- (긴급 추가지원) 추경예산(51억원)을 통해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 어가를 대상으로 바우처(어가당 30만원) 지급

【어업인 낙도지역 안전쉼터 조성, 여성어업인특화검진 신규 등】

- (안전쉼터) 도서지역에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평상시에는 휴식 및 어업장비 보관시설로 활용하는 안전쉼터 지속 조성
- (이동수리소) 별도 수리소를 갖추지 못한 도서·벽지지역에 찾아가 고장 발생률이 높은 어선 등 장비를 무상으로 점검·수리

- (질환예방교육)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질환 예방교육’을 추진, 수혜자 수 850명 달성
-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신규 지원 추진('22년 예산 3.7억원)
- (연보·건보료 지원) 어업인 기초생활 및 노후보장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 '22년부터는 어촌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신규 지원('22년 예산 +23억원)
- (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임신·출산,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어업·가사활동이 어려운 어촌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 지원

【어촌계 단체 보험계약 제도 신설, 보험가입 대상 확대 등】

- (편의 제고)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를 도입(기존: 개인만→ 개선: + 어촌계, 조합 단위)
- (보장 강화) 어선원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겸업어업인도 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관계기관 협업으로 어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지자체·수협 등과 협업하여 각 기관 보유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미가입어선 정보를 확보하고, SNS·유선 안내 및 특별가입기간 부여 등으로 어선원보험 가입률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정적 어업경영 지원 확충을 위하여 지속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가의 안정적 생활 지원,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등 정책 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귀어·귀촌) 어촌 인구 유입 및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전년 대비 지원 혜택 수혜자 12.1%, 도시민 관심도 50.1% 증가】

- (지원기반) ①일자리 확충, ②정주여건 개선, ③소득기반 마련, ④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수립('21.6)

- 지원확대 : 청년 정착지원자금 지원 확대('21년 200명→'22년 220명), 귀어학교* 3개소 신규지정('21.9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서비스 실시('21.12월~)

* '21년 4개소(충남, 전남, 경남, 강원) → '22년 경기, 경북 개설 → '23년 충북 개설

** 일자리·창업·어선 거래 등 어촌 정착 정보, 기관별 교육·행사, 주택 구입 자금 등 각종 정책 지원 정보, 문자·이메일 알림 서비스 제공 등

- 신규지원 : 어촌 임시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귀어인의 집(1.5억 원)',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지원(8.4억 원) 예산 확보('21.12월)

- (수혜자) 창업·주택융자(600명) 및 청년 초기정착 지원 사업(206명) 등 '21년 총 수혜자는 806명으로 전년(719명) 대비 12.1% 증가*

* ('15) 267 → ('16) 269 → ('17) 375 → ('18) 503 → ('19) 600 → ('20) 719 → ('21) 806

- (관심도)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역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코로나19 에도 전년 대비 1일 평균 방문객 수 50.1% 및 상담건수 1.5배 증가

* 1일 평균 방문객수(명) : ('17) 2,161 → ('18) 2,315 → ('19) 2,196 → ('20) 5,268 → ('21) 7,905

** 1일 평균 귀어귀촌 상담건수(건) : ('17) 364 → ('18) 394 → ('19) 794 → ('20) 233 → ('21) 557

【(어촌관광) 어촌관광 코로나19 위기 극복】

- 1) 코로나19 위기에도 전년 대비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소득 8.9%, 방문객 20.4% 증가

* 체험객/체험소득 : ('20.1.~10.) 85.3만 명/145억 원 → ('21.1.~10.) 98.1만 명/160억 원

- 온라인 안전·위생교육('21.9월/2회), 방역 점검(9회), 소규모·가족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리모델링 지원(4개소)* 및 비대면 여행 지원
 - * 글램핑 및 가족단위 돔 형태 숙소(서천·보령·거제), 가족단위 낚시체험장(강원)
- 어린이 어촌체험방송('21.8.19.~8.27.), 어촌체험 꾸러미 10종 제작·배포, 대국민 VR 어촌체험관 운영('21.4월, '21.6월, '21.8~10월)
 - * 전국 학교-어촌 비대면 자매결연 10개소 실시간 온라인 어촌체험 참여 학생 1,100명, 온라인 어촌체험 교육영상 조회수 2,035회, 온라인 라이브방송 조회수 4,225회 기록
- (추경) 어촌관광 일자리·소득지원을 위해 청년 IT 인력 채용(5억 원)
 - 청년 IT 인력(45명)을 활용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21.12), 감성 홍보 확대를 통해 바다여행 누리집 방문자 전년 대비 20% 증가
 - * 바다여행 누리집 방문자(만명): ('18) 144 → ('19) 139 → ('20) 145 → ('21.10) 174
- 바다여행 누리집 개편('21.12월)*, 다양한 민간 플랫폼(네이버, 야놀자 등) 연계 결제서비스 제공('21.11.30.)으로 어촌 관광객 편의 개선
 - * 물때·휴양 시설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마을 운영자 예약현황 문자 서비스 통지 등

2) 국가중요어업유산 3개소 신규지정 및 체계적 지정·관리 방안 마련

- (신규지정) 제9호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21.3.8.), 제10호 부안 곰소 천일염업('21.9.2.), 제11호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21.9.3.) 신규 지정
 - * 지정현황(개소, 누적) : ('15) 3 → ('16) 4 → ('17) 5 → ('18) 7 → ('20) 8 → **(21) 11**
- (지정·관리) 유산 지정대상 확대, 유인체계 구축, 사후관리 고도화 및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개선방안」 수립('21.10월)

3) 적극행정, 부처협업, 어촌마을 소득다변화 사업을 통해 어촌체험 휴양마을 자생력·경쟁력 강화

- (적극행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지원기준 완화('21.4월)*
 - * 당초 방문객 1만명 이하 마을 또는 신규사업 대상지가 중심이었으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방문객 기준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 중 노후 마을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기준 변경

- (부처협업) '22년 코리아 둘레길(문체부) 쏘 구간 완성·개통에 따라 인근 어촌 지역과 연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21.11.30.)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11.30. / 우리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여

- 어촌체험휴양마을·어촌민박을 활용한 코리아둘레길 안내센터 운영 협력,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홍보로 인지도 및 방문객 증가 기대

* '22년 코리아둘레길 인접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어촌민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30억 원 지원(문체부/총 30개소/개소당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소득 다변화)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품 할인지원(3억원)으로 매출액 9.9억원 달성('21.2~8월), 마을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시제품 4개 개발('21.12월)

4) 16개 기업·공공기관-30개 어촌체험휴양마을 간 사회적가치 선순환 활동 49건 완료

- 기업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원하는 기여형태*와 제공할 수 있는 기여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맞춤형 일대일 연계 모델 발굴
- 16개 기관에서 30개 마을 대상 환경정화, 꽃심기 등 마을 경관 개선, 특산물 구매, 방역·위생 물품 기부 등 활동 진행

【수산·어촌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 기반 마련】

-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수산·어촌 살리기 전문 공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상임위 상정('21.12.)

* 입안('21.1.28.) → 부처협의('21.3월) → 입법예고('21.3~4월) → 국무회의 의결('21.8.24.) 및 국회 제출('21.8.26.) → 상임위 상정('21.12.3.) 완료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정부대행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완료 ('21.4월)*로 연간 15억 원 내외 조세감면 효과 기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면세대상 사업 범위관련)」 개정('21.4월)

【(개발정책) 체계적인 어항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약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만 7천명의 취업유발효과 기대】

- 개별 어항 단위의 산발적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이용 어선의 세력권 등을 조정·반영한 전국 단위 「국가어항 개발계획」 최초 수립('21.12)
 - *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향후 10년간('22년~'31년) 약 2조원 투입, 생산유발효과(4조 2,2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1조 7,390억원), 취업유발효과(26,347명) 발생 추정
- 이용자 중심의 국가어항 환경·기능 개선계획* 수립('21.7.12.)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추진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잔교 확대 및 기준 개정, 기능·편익시설(어구창고, 여객터미널, 화장실 등) 규모 산정·개선, 해수취수시설 및 소화시설 도입, 공공디자인 도입 등
- 국가어항의 계획·설계 등 시작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21.12.6.)

【(민간투자) '25년까지 국가어항 민간투자 연간 700억 원 유치, 관광객 5,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 방안 마련】

-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어촌경제 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21.7)
 - * '25년까지 민간투자 700억원/년 유치(現 452), 관광객 5,500만명/년 달성(現 4,836) 추진
- 어항시설 및 민간투자기회 확대 등 「어촌·어항법」 개정안('21.9월) 및 사업절차 개선을 위한 매뉴얼 및 실시협약(안) 마련('21.12월)

【(신규지정) 기존어항 해제 갈등 중재로 국가어항 3개소 신규지정,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2개소 신규지정) 초과달성】

- (갈등 상황) 어선 입출항 실적 등 어항 이용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완도군 내 기존 국가어항(득암항)은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어항(당목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간 갈등으로 지정 지연
- (갈등 해결)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로 주민 이해·설득을 지속 반복하고, 관련 규정 적극 해석으로 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중재 완료
 - * 득암항 이용 주민의 어항정비 및 어항배후부지 무상사용 등

- (신규지정) 국가어항 3개소(영목항, 향화도항, 당목항)를 신규지정·고시하고 '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15억원)

-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기능과 해양관광·레저 기능을 아우르는 수산업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영목항(충남 태안) / 방파제 200m, 어선부두 250m 등 약 370억원('22년 5억원)

** 향화도항(전남 영광) / 방파제 455m, 어선부두 305m 등 약 480억원('22년 5억원)

*** 당목항(전남 완도) / 방파제 270m, 어선부두 520m 등 약 402억원('22년 5억원)

【(스마트어항) 4차산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전년 대비 어항 안전사고 23.7% 감소*】

* 국가어항 안전사고 현황(건): ('17) 55 → ('18) 31 → ('19) 39 → ('20) 38 → ('21) 29

-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사업('21년, 4억)을 통해 해역별 도서 지역 3개항*에 지능형 CCTV 설치(24대) 및 영상분석기술 도입('21.11)

* 동해 : 현포항(경북 울릉), 서해 : 우이도항(전남 신안), 남해 : 능양항(경남 통영) 대상

- 지능형 CCTV를 이용하여 방파제, 소형선부두 등 위험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상시 안전체계 구축 추진

* 사건 발생 즉시 상황전파, 차량침수 사전예방, 기상악화 시 방문객 안전 이동조치 등

【(특화어항) 국가어항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4차산업】

- '21년 남당항 다기능어항 등 4개항 착공 위도항 다기능어항 등 3개항 완공으로 총 47개항 중 21개항(53%) 특화개발 완료

* (착공) 홍성남당항, 통영육지항, 서귀포위미항, 추자신양항 / (완공) 부안위도항, 거제능포항, 울진죽변항

【(홍보·만족도) 건설 위주 사업 성과에서 탈피해 어항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어항으로 이미지 개선】

- (홍보)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개최('21.6월~'21.8월), 총 978명 3,016점 출품, 최종 수상작 27점 선정('21.10월)
- (만족도) 국가어항 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어업인 등 지역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결과 최근 3년 간 증가*

* 국가어항 이용 만족도 : ('19년) 75.0% → ('20년) 76.1% → ('21년) 76.8%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 · 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 ·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촌 인구 유입 및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등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융분야 >

-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35,887억원→36,754억원, +867억원)하고, 소규모 어업경영자금 이용 어업인 지원을 47.4% 달성

- 한정된 자금규모 내에서 취약계층인 영세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어업경영자금 이용 어업인 지원을 증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 전체 어업경영자금 중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 47.4%

- 다양한 금융 지원대책 마련·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 내실화

-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수산업경영인회생자금(100억원) 지원
- 수산정책자금의 금리 인하(0.5~1.0%p)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21.12.31.)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액 상향(2천만원→3천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 (재해정책보험 가입자 포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인 지원 내실화

- 태풍·집중호우·고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경영 안정에 기여

* 근해안강망 10억원(2.24) / 양식업계 153억원(3.8) / 태안선박화재사고 9억원(3.29) / 갯생이모자반유입피해 4억원(6.9) / 집중호우·고수온·태풍피해 49억원(8~11월) /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업피해 65억원(12.13.)

< 세제분야 >

-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산분야 세제감면혜택 유지*로 연간 약 8,553억원의 어업인 세제 감면 효과

* 일몰연장 15건(국세 6건/7,469억원, 지방세 9건/1,084), 신규감면 1건(국세 1건/1,542억원)

-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설명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원발의('21.2~11)
- 어업분야 세제감면 유지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11.3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12.7), 국회 본회의(12.9) 통과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금융지원 및 세제 개선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 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등 수산분야 세제감면혜택 유지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등 해상교통이용 편의 증진】

- (도서민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접안 시설 확충, 선착장 주변 항포구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접근성 대폭 개선
 - 만재항(신안)에 여객선 직접 접안을 위한 북방파제(40m×15m) 연장으로 운항 시간 3시간 30분 단축(연 3.5억원* 단축 효과)
 - * (지역주민 시간단축) = 1,212명×3.5hr(여객선)×8,721원/hr×2회(왕복) = 0.74억 원/년
 - ** (관광객 시간단축) = 9,008명×1.8hr(사선)×8,721원/hr×2회(왕복) = 2.83억 원/년
 - 가의도 북항(태안) 경사식 접안시설로 안정적인 차도선 접안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객 승·하선 단축(관광객 인터뷰, 20분 → 5분)
 - * 시간단축 효과= 10,717명/년 × 0.25hr(단축시간) × 8,721원/hr × 2회(왕복) = 0.47억 원/년
- (여객 편의 증진)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편의 시설(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
 - * 여객복합시설 ('19) 18개 → ('20) 68개 → ('21) 92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 등 해양관광 활성화】

- (특화개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이 긴요한 지역을 선도 개발·단계적 확산
 - 도비도항(당진)의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른 부유식 계류시설을 조성하여 낚시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낚시어선 입출항 빈도 ('19) 1,263 → ('20) 2,007 / 낚시어선 이용객수 ('19) 8,541 → ('20) 15,700

- (어촌재생) 어항과 배후어촌 내 노후되거나 방치된 시설 등을 제거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물 리모델링 및 재배치로 지역 재생 추진
- (테마마을 조성) 어촌의 역사·문화·경관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어촌테마마을' 조성·지원으로 관광객 방문 여건 마련
 - * '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지구로 2개(충남 태안, 경남 남해) 어촌테마마을(자연경관, 역사, 생태환경, 레저·스포츠, 재생형) 선정하여 지원(사업예산 55억원)
 - ** ('18) 3개 → ('19) 1개 → ('20) 1개 → ('21) 2개 → ('22) 3개 지구 선정 완료

【어촌 안전관리 강화 등 어촌정주여건 개선】

- (안전 관리 강화) 이용자가 많고 사고*가 빈번한 항포구에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실시간 사고감지 및 구조신고) 등 안전시설 설치·보강
 - * '17년 어항·포구 등에서의 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230건 발생, 32명 사망
 - 수렴항(경주) 파제제 신설로 해안가 주변 상가 및 주택의 태풍 피해 예방, 어달항(동해) 방파제 보강으로 월파 방지 및 항내 정온성 확보
- (어업활동 효율 개선) 선착장이 노후화되거나 높이가 낮아 만조때 물에 잠기거나 배 위에서 작업을 하는 위험 및 비효율 발생
 - 44개의 어선 접안시설, 공동작업장 등 기능 편의시설 11개, 방파제 등 39개 안전시설 개선 및 신축로 어업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 입암항(고성) 부잔교 1기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어업활동 환경 개선 및 어획물 양륙시간 약 30분 단축, 연간 약 21백만 원 절감 효과
 - * (시간단축) = 연간 입출항 어선척수(1,611척) X 평균 승선원수(1.96명) X 평균 인건비(13.5천 원/hr) X 단축시간(0.5hr) = 21백만 원
- (생활SOC 확충) 여객편의 및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SOC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 (일반농산어촌) '21년도 11개 신규 사업 지구 선정·추진 / (사업예산) 445억원
 - ** (어촌뉴딜300) 여객선 접안시설(8개소),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편의시설(17개소)

- (유휴시설 개선) 어촌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력 증대
- 빈집 폐교 및 낙후된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등) 리모델링
- * (사업명) 海드림 / (사업예산) 15억원 / (실적) '21년도 5개 신규 사업 지구 선정·추진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 (역량강화)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촌의 경영,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특화상품·서비스 개발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주민 역량 강화
- *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 : 전남, 경남, 강원, 충남, 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조직육성) 어촌지역 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운영 및 이익 공유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확대
- * (사업기간) '21.5 ~ 12월 / (예산) 100백만원 /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실적) '21년도 5개 마을 컨설팅 지원 / 예비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완료(화성 백미리) /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신청중(서산 중왕항)
- (소득증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으로 어촌공동체 창업 컨설팅, 특화상품* 연구·개발지원 및 판매·유통·홍보 등 지원으로 소득 증대**
- * '21년도 특화상품 개발 실적 : 흥합파스타, 다슬기해장국 등 40개 상품 개발
- ** 지원센터별 관할 어촌계 소득 : ('20) 7,085 → ('21) 11,068백만원 / 전년대비 64% ↑

【긍정적 정책효과 달성】

- (집행제고) 정기적 재정집행점검(월보고, 분기별 회의) 및 집행률의 대상지 선정 연계, 준공 예정지 현장점검(상,하반기) 등으로 지자체 재정집행률 전년동월 대비 5.2% 상승
- * ①'19년 대상지 70개소 현장점검('21.3~6), 부진대상지 37개소 추가 점검('21.10~11), ② 월별 지자체 집행현황 점검,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5회)
- (긍정추이) 어촌뉴딜사업 3년차인 올해는 사업이 준공되어 성과가 나오는 해로, 사업을 통해 변화된 어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촌뉴딜에 대한 긍정추이 2.4%p 증가, 부정추이 3.1%p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상교통이용 편의 증진 등 어촌정주여건 지속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여객선이 입·출항 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자원관리형 어선 감척으로 어업 생산량 및 어업이익 개선】

- 연근해어업 총생산량 또한 '20년말 기준 93만톤에서 '21년말 95만톤으로 약 2.2% 증대되는 효과 거양

* 연근해 어획량(만톤) : ('18) 101 → ('19) 91 → ('20) 93 → ('21^e) 95 이상

- 전략적 감척 등 자원관리정책을 통해 근해·연안어업의 어선당 어업이익이 '17년 대비 각각 23%, 39%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 추세*

* 어선당 생산량(톤/척) : ('17) 94.8 → ('18) 100.6 → ('19) 97.8 → ('20) 109.5

【자율감척 신청한 근해어선 85척 선정】

- 주요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최근 5년 평균치의 3.5배 예산(1,254억)으로 근해어선 85척 대규모 감척 추진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 ('16~'20년 평균) 345억원 → ('21) 1,254억원

- 지자체·어업인단체 간 협의를 거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근해어업 11개 업종에 대해 총 66척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21.1)

* 연도별 근해어선 감척 실적 : ('18) 10척→ ('19) 12→ ('20) 45→ ('21) 108(자율 85)

- 다른 물고기의 먹이어종인 멸치 자원의 보존·회복*을 위해 기선 권현망어업 4선단(19척)을 선제적으로 추가 감척('21.10)

* '21.10월 기준 멸치 누적 생산량은 134,115톤(전년 대비 25.5% 감소)이며, 최근(8~10월) 어획량 또한 전년·평년 대비 급감(전년 40.1%, 평년 32.7%)

【불법어업 어선 등 직권감척 23척 선정】

- 대형트롤·동해구중형트롤 등 자원 남획 우려가 높은 8개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감척 대상자 23척 선정
 -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기본계획 목표 : 대형트롤 14척, 동해구중형트롤 17척 등 근해어선 총 300척 감척하고 연안어선은 1,000척 감척
- 직권감척 대상 어업자단체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감척 필요성과 선정 기준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어업인 불만 최소화 도모
 - * 직권감척 선정기준 소형선망, 근해연승 등 어업인단체 의견수용('21.7)
- 직권감척 대상자 중 타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어업인에 대하여 관계기관·전문가와 검토 후 직권감척 대상 제외하고,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 (사례)영위하지 않는 어업허가로 인해 선정된 직권감척 대상 어선에 대해 이의신청 수용

【감척사업 수용성 제고】

- 어업인의 평년수익액(3년분) 대비 일부만을 지급하던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0%→'22년, 100)하였고,
 - * 폐업지원금 : (~'19) 평년수익액의 50% → ('20년) 70% → ('21년) 90% → ('22년) 100%
- 폐업지원금을 일괄 기준단가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지급토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감척지원금 현실화 도모
 - * 기준가격(평년수익액 70% 수준) 지원 → 개별감정평가(평년수익액 100%) 지원
- 어업손실액조사기관(전국 14개)과 행정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근해어업은 '21년부터, 연안어업은 '22년부터 톤수가 높은 어선부터 단계적으로 감정평가 산정방식 도입

【감척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병행】

- 감척사업 효과 저감을 예방하기 위해 타 업종의 혼획, 감척사업 수혜자의 재진입, 그리고 잔존자의 어획강도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어린물고기 혼획 비율이 높은 정치망어업이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 12.9 본회의 통과)
 - 감척지원금 수혜 어업인이 감척업종에 재진입하는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감척의 자원회복 효과 보존(「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 '21.4)
 - * (당초) 재진입 제한 규정 없음 → (신설) 3년 이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어선 규모를 편법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감척사업 효과를 저감시키는 허가어선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어선 대체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21.4)
 - * 저가의 겸업허가를 매입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허가어선을 증톤
- 감척사업 추진과 함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TAC 제도를 기반으로 한 어업규제 완화와 폐어구 관리 정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12.9 본회의 통과)
 -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소형선망·여수잠수기 등, '21.10~'22.9)하고 대상확대를 위한 어업허가규칙 개정('21.8)

【자원학적 감척사업 추진기반 내실화】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업종별 어업경영 현황, 감척 효과 산정 등, 어선 감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감척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3억원),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을 위한 '22년 예산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감척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자원관리형 어선 감척으로 어업 생산량 및 어업이익 개선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개발로 어선원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 (경제성) 최적화된 어선설비·구조 배치, 설계 기술을 반영한 선형 개발로 톤당 연료 소모량 평균 7%, 최대 10% 등 어업경비 절감

* 근해업종은 어업경영비용의 15.3%, 연안은 10.1% 차지('21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조사)

** ①유류비 약 30.8억원('21 어업경영자금 소요조사) 중 약 7%인 2.2억원 절감

②온실가스 배출량 연안어선 1척당 1.5톤, 근해어선 1척당 40.8톤 저감

- (조업환경 개선)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 확보 및 사고 시 탈출경로 확보* 등 안전 관련 기준 개선**

* 선원실·화장실·조리실 공간 추가 설치, 선원실 상갑판 위로 위치, 사다리 구조변경 등으로 위급 시 탈출 용이

**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흡수선(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 기준선 표시 등, 24m 이상 어선에만 적용했던 어선의 안전 관련 기준을 24m 이하 어선에 확대 적용

- (기술공유) 표준선형 설계도면 고시제정 추진으로 연간 어선(대체건조) 설계비용 약 185억원 절감*과 안전한 어선 건조기반 조성 및 유지** 가능

* 기본설계비용 : 연안복합어선 등 10톤급 약 2천만원, 근해채낚기 등 80톤급 약 7천만원
'20년 신조현황 : 연안 731척, 근해 55척('20년 국내등록어선 통계)

** 표준화된 설계도면으로 어선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불법 개조 시 적발 용이

- (정책지원) 현대화 어선의 현장 보급을 위해 표준어선 대체건조 비용 600억원을 확보('20년 0원 → '21년 600억원)*하여 어업인 지원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 대체건조 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 (어업인 변동 또는 고정 금리 2%, 15년 상환)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지원 확대 및 선형 개발로 전국 연안 지역 중소조선사(약280개)와 관련 산업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 (제도홍보) 표준어선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 유도 및 새로운 시각의 표준어선형 설계 발굴*을 통한 청년 인력 양성

* 설계공모전 개최 : 11~12월 / 총 10팀 대상 상장 및 부상(약 1천만원) 수여

【하이브리드, LPG 등 친환경 어선 개발로 지속가능한 조업기반 마련】

- (사업내용) 고비용·저효율인 디젤기관 기반 연근해어선을 하이브리드, LPG 추진 어선 등 저탄소·무탄소 어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기술개발 및 운항 실증 추진
 - * 하이브리드·LPG 추진시스템 개발 → 친환경 추진시스템에 적합한 어선설계·건조 → 시험조업(안정성·경제성 평가 등) → 법·제도적 지원기준 수립 및 현장 보급
- (4대 연구과제) ①전기복합추진어선 표준선체 개발 ②전기복합추진어선 핵심기자재 개발 ③검증 및 실용화를 위한 체계 구축 ④250마력급 LPG 추진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기존 디젤엔진 대비 연비 약 30% 개선 및 배출가스(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25~70% 감소 기대
 -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조선 기자재 산업 융성 기반 마련 및 5년간 약 270개의 일자리 창출*
 - * 한국선급, 중소조선연구원 등 20개 주관·공동 연구기관 참여
 - 유류비 등 유지보수비용 감소를 통한 어업인 경영비용 경감 및 면세유 지원* 규모 축소 등 국비 절감 가능
 - * 18년 면세유 지원 관련 보조금 약 7,000억원 지출
- (규제특구) 중형어선의 LPG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및 소형어선의 액화수소 추진시스템 개발**을 위한 안전기준 수립
 - * LPG : '21~'24, 총사업비 146억원(부산) / ** 수소 : '21~'24, 총사업비 45억원(강원)

【규제 완화, 어업인 편의 중심의 어선안전관리 추진】

- (현 황) 어선의 건조 및 검사기준 관련 제도*를 통해 내수면어선부터 원양어선까지 6만5천여척의 어선에 대한 안전과 복지 여건을 관리
 - * 건조검사 및 정기적인 검사 연평균 2만 2천여건에 해당
- (주요성과) 국내법 안전기준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개선으로 어선 사고 저감 등 사회적 비용손실 감소, 발효 논의 중인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방안 마련

- (안전강화) 어선화재를 초기 인지하여 진화 및 조난요청이 가능한 어선화재 조기진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설치 의무화 완료
 - * (장비개발) 화재경보기, 고성능 무인기관실용 소화기 및 선원실 조난버튼 개발('20.12)
 - ** (무상보급) 연근해어선 15천 여척에 화재경보기 무상보급 후 운영실태 점검(계속)
 - *** (제도개선) 어선용품 기준(제작기준) 및 어선설비기준(설치기준) 등 3건 개정
- 양승기 끼임사고 등 조업 중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어업설비 안전기준(안) 및 운영방안 마련*, 사고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업종별 조업자동화 연구** 추진
 - * 안전사고분석을 통한 어업설비 안전관리방안 마련(80백만원, '21.4~12월, KOMSA)
 - ** 근해통발, 연안복합 및 연안통발 등 조업자동화 설비 개발(54억원, '19.7~'21.12월, 학계 등)
- (규제개선) 소형어선 등화·방수구 기준 마련, 저렴하고 편리한 한국형 닻 등의 적용범위 확대로 건조비용 절감 및 조업 여건 개선
 - * (등화·방수구) 배 깊이보다 높은 등화 설치로 조업 시 불편 및 과도한 방수구로 인해 어획물 손실발생 → 불법개조로 범법자 양산 → 소형어선기준 마련으로 해결
 - ** (한국형 닻 등) 일반 닻 대비 80% 저렴하고, 90% 가벼워 운용비용도 절감되는 한국형 닻이 160톤급 이하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적용범위를 개선하여 수혜대상 확대
- (협약대응) 국제협약에 요구되는 어선검사 및 항만국 통제에 관한 국내법 수용안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국제수준으로 도약
 - * (주체) 선급법인(KR, BV) 및 KOMSA, (절차) 도면승인→검사신청→검사→검사증서 발부
 - ** 국내법과 협약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검사는 협약검사로 같음 가능
- (정책효과)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어선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Zero 달성 및 규제완화를 통한 연간 2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인명구조) 무상보급한 화재경보기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중대형 화재사고 6건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 발생無(59명 전원 생존)
- (비용절감) 한국형 닻 등의 적용범위 확대(160톤↑)로 대상 어선 115척에 대한 사회적 비용 25억원 절감 및 대상 톤급 어선 1척 신조 시 23백만원 비용 절감
 - * 2,357만원/척 = 일반형 닻 비용 (2,446만원) - 한국형 닻 비용(547만원)

【어선건조산업 관리를 통한 어선관리 선행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매년 3천여척의 신조로 탄탄한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조선소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개선 필요

* 산업규모 : 소형조선 5.6천억원/년 (건조 4,8천억, 수리 0.8억) 중 어선이 3천억(60%) 차지
일자리 : 약 5.8천명 (직영 2.5천, 외주 3.3천)으로 원양어선과 기자재업체 감안 시 규모 ↑

** 어획 증대를 위해 불법 증개축을 잘하는 조선소가 선호되는 실정, 무자격 건조 (건축 : 6층 이상,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가 검증 후 건축 / 어선 : 국가계약만 전문가 검증)

- (주요성과)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어선법」 개정 추진 및 어선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비용 확보(신규 10억)로 개선기반 마련

- (건조업 등록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한도 이상의 인적·물적 자격을 갖추고 어선을 건조하도록 「어선법」 개정 추진

* 「어선법」에 등록의무 등을 신설하고, 세부 등록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
어선건조에 일정기간 경험(또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인력 + 최소 건조설비 등 의무화

- (진흥단지 구축) 설계·조선·검사·연구 시설을 집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건조 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1.4~12월 / 1억원 / KOMSA

- (기술지원) 어업인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전한 고효율 어선설계가 가능한 인공지능 설계 플랫폼 개발 및 보급 추진 (신규예산 197억 확보, '22~'26)

* AI설계 플랫폼 : 기존 어선 R&D 결과와 접목하여, 자체적인 안전제어가 가능한 모듈 (선체, 기관, 어업설비 등)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설계('22년 예산 10억)

- (정책효과) 어선건조업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선행적 안전관리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을 통한 기간산업으로의 전환점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업인 편의 중심의 어선안전관리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개발로 어선원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총허용어획량(TAC) 운영)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 한도량 설정 및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연근해 어획 생산량은 과거 대비 감소 추세이나, TAC 확대*와 관리 강화**로 인접국 대비 어획량 감소가 낮은 효과 발생

* (TAC 확대) ('99) 4개 어종, 2개 업종 → ('21년) 12개 어종, 14개 업종(업종기준 7배 확대)

** (수산자원조사원 확충) ('18년) 85명 → ('19) 95 → ('21) 120명

- 오징어를 비롯한 TAC 관리 어종에 대한 과학적인 어획한도량 설정 및 관리로 전체 57.6%의 어획량 증가 효과 발생

- 특히, 주요 TAC 적용 대상 어종의 생산량은 5년 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TAC 제도 운영을 통해 높은 자원관리 효과 체감

○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평가) 수산자원 조사의 정밀도 향상*과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 확립**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도 확보

* 음향값 조사(3종), 바이오로깅(2종) 등 첨단 조사기법 도입 및 직접조사 범위 확대

** 개별 어종관리 중심에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

-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세분화*로 회복 권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 대상 권고안 홍보본** 마련으로 국민의 수산자원관리 정책 참여 유도

* (회복종) 매년 권고안 도출, (모니터링종) 어획동향 모니터링, (신규종) 3년차 권고안 도출

** 주요 상업어종의 자원상태,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개인별 실천방안 등 포함

- 성육기, 산란기, 자원량 등 과학조사에 근거하여 금어기·금지체장을 설정·운영하고, 치어럽 캠페인 추진 등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어린물고기 유통 근절에 기여

* 홍보영상, 체험교실(11건), 전시회(3건), 치어럽 밴드 제공,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4회) 등

** 어린물고기 보호 기준 인지 수준(한국소비자연맹) : ('20) 21.3% → ('21) 29.2%

- 업종·지역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시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근거로 각종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 한도량 설정 및 관리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 한도량 설정 및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바다숲 조성) 포자확산, 서식처 확대 등 바다숲 조성기법 별 편익 분석 결과, '21년 바다숲 조성관리 해역 환경조절편익* 약 47억원 창출
 - * 해조류에 의한 기후조절, 오염정화, 영양순환 등 생태계 환경조절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Costanza, 2014)
- (친환경 조성) ①자연상태 환경 이용, ②기존 시설된 인공어초 재활용, ③사업 부자재(버려진 어상자, 모조주머니 등)를 친환경 소재로 확대하는 등 조성사업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 ZERO화'로 수산생물의 쾌적한 환경 제공
- (자원회복 및 소득증대) 해역별 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중심으로 한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마련(14개소)하고, 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일자리 창출) 휴어기 어업인의 조성사업 참여로 공감대 형성 및 조성 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관리문화 정착 기여와 함께 단기 일자리 창출*
 - * 부착기질개선, 조식동물구제, 환경정화 활동 등 8,684명의 어업인 참여
- (혁신기술 활용) 항공드론을 활용한 사업지 비대면 관리감독, 수중드론 촬영으로 잠수부 안전관리 등 바다숲 관리의 첨단화
 - 수중드론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 전·후 VR 촬영 결과를 영상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검증 시스템 구현
- (기술 협력) 조성사업을 통해 보유한 다양한 조성기법 및 기술력을 민간 및 국제사회와 협력·교류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교육·홍보)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우리바다 보호에 힘쓴 유공자 포상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어린이들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기관 총 466개소에 15,083개의 체험키트 무상 제공

* 유공자포상(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4, 총리4) 및 샌드아트, 사진전시 등 진행

** 만족도 : 93.4%(전년대비 7.5%p 상승), 재참여 의향 : 99.1%(전년대비 2.8%p 상승)

- (폐어구 수거) 주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확대*를 통해 유령어업을 예방하고, 305억원의 생산소득 증대 효과 창출

* ('20) 2,650톤, 151천ha → ('21) 3,525톤, 170천ha

- 조기에 사업을 설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인식 개선) 어업인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유실·침적 폐어구 발생을 예방하고, 유령어업의 피해 등 수산자원보호 인식 개선

- (민간 참여) 기업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폐어구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수거된 폐어구의 업사이클링 제품화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

* 기부금 2억원 활용 한국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연평도 주변어장 폐어구 약 105톤 수거처리

- (자율관리어업 확산) 해양쓰레기 수거('20년 9,147톤), 조업금지기간 확대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활동으로 약 843억원의 경제적 효과 도모

- (낙시명예감시원 운영) 수산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민간 주도의 명예감시원(100명 위촉) 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한 낙시문화 확산에 기여

* 활동구역 : 총 1,082개소 (내수면 345, 바다 23, 하천/저수지 125, 방파제/갯바위 235, 기타 207)

** 활동실적 : 총 1,667건 (점검 734건, 계도 228건, 신고9건, 홍보696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바다숲 조성, 폐어구 수거 등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중국어선의 국내 불법어업 단속 감소('19년대비 △48%)】

- (불법조업 감소) 단속세력 확충, 공용화기 사용 및 어구·어획물 몰수 등 강력대응으로 '21.10월까지 단속건수(67건)가 '19년동기(130건) 대비 48% 감소

* 연간 단속건수(건): ('16) 405 → ('17) 278 → ('18) 258 → ('19) 195 → ('20) 35 → ('21.10) 67

** 중대위반 단속건수(건): ('16) 142 → ('17) 58 → ('18) 49 → ('19) 28 → ('20) 10 → ('21) 29

☞ '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차감염 예방을 위한 승선조사 자제로 의미 있는 감소추이로 관찰 곤란('20.11월부터 승선조사 재개)

【우리 EEZ 중국어선 입어규모 6년 연속 감소(전년 대비 50척 감소)】

- (입어규모 축소) 한·중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규모 감축('17. 1,540척 → '22. 1,300척) 등 6년 연속 입어규모* 감소

* ('16) 1,600척 → ('17) 1,540척 → ('18) 1,500척 → ('19) 1,450척 → ('20) 1,400척 → ('21) 1,350척 → ('22) 1,300척('21.11.19 협상결과)

【중국정부 최초 강력조치 유도 등 한·중 협력체계 강화】

- (조업질서 확립)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21.6), 수산고위급회담('21.8)에서 조업질서 확립방안을 합의하여 중국정부 최초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조치*를 유도하고, 어업공동위원회('21.11) 합의문에 명문화

* 중국정부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어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21.7월에 중국측에 의심선박 직접 인계

- (대표 협력사례 창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한·중 지도단속기관 간 공동순시를 실시*(4.20~26)하고, 추가실시를 합의('22.4. 예정)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기반 마련

* 해수부 무궁화 36호(2,000톤급) + 중국 해경 소속 6306함정(3,000톤급)

- (한·중 어업협상 타결) ①상호 입어가능 어선 척수 감축(1,350척 → 1,300척), ②우리 연승어선 조업기간 연장(10개월 → 11개월), ③동해 북한 수역 및 서해 NLL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중국측의 단속 의지 명문화, ④중국어선 전자어업허가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공동점검('22 상반기) 등 합의(11.19)

【불법조업 억제 및 현장 대응역량 대폭 향상】

- (접경수역 단속세력 확충) 한·중 및 한·일 간 해상경계 수역에 대형지도선 증강배치 방안을 마련('21.4)
 - * 어업지도선(척): ('17) 34 → ('18) 38 → ('19) 40 → ('20) 40 → ('21) 43(건조 중 3척 포함)
 - 대형(3천톤급) 어업지도선 3척 신규 건조 및 노후지도선 8척(19백톤급 3척, 9백톤급 5척) 대체 등 총 11척 건조 추진(~'24)
 - * 어업지도선 건조예산(억원): ('20) 18 → ('21) 678 → ('22) 1,389
- (신속 대응) 한·중 공동단속센터를 운영(인력 7명 근무)하며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사진·동영상을 즉시 중국측에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집단 폭력저항 시 긴급수배로 사건 조기 해결
 - * 기존에는 증거자료가 중국측에 전달될 때까지 8~10일이 소요되어 이의제기 곤란
 - '19년 이후 총 1,951건의 정보를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 ('19. 524건 → '20. 878건 → '21.9. 549건)하며 불법 중국어선에 신속히 대응
 - * 불법 중국어선 나포 정보, 불법어선 허가유무, 집단 침범 등
 - ①중국어선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②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전담 운영 및 데이터 분석, ③불법 중국어선 사건처리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우리 수역 내 중국 불법어구(범장망) 퇴출】

- (불법어구 퇴출) 우리 어선(3척)을 이용한 불법 범장망 강제 철거로 중국어선과의 조업갈등 차단 및 우리 어업인 조업권 보호
 - 중국어선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승선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 수역 내에 불법 범장망*을 설치하고 조기, 갈치 등을 남획

- *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포획
- '20년부터 제주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철거사업을 통해 불법 범장망 31틀을 철거하고, 조기·갈치 등 남획어획물 약 140톤을 현장 방류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국내어업질서 확립】

- (단속효과) 관할해역 내 주요 불법어업(무허가, 불법어구 적재, 변형어구 사용 등) 및 고질적·관행적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그간 연·근해 불법어업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기획적 대응으로 주요 지역별 어종(오징어·실뱀장어 등) 및 업종(공조조업)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 (살오징어) 낚시객(10건)은 계도, 낚시어선 선장·소매업자(6건)는 조사 및 처분 (실뱀장어)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허가 및 구획이탈 불법어업 단속(71건) 처분
- (계도활동) 14개 주요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 및 대국민 계도·홍보 시행으로 준법의식 제고
-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지도선은 연근해 어선 위주로, 해경 함정은 낚시어선 등 유어행위를 중점 계도·지도(계도장 발부) 실시*
 - * 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업종별 단체로 구성하여 2월말까지 운영(주1회)
 - ** 어업지도과, 지자체, 해경 담당자 3인 1조로 6월말까지 운영(주2~3회)
- 어업인 참여를 위해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과 계도반*을 구성하여 수협 위판장 등 주 1회 현장 점검
 - * 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업종별 단체로 구성하여 4월말까지 운영
- (어장환경 개선) 전북 지역 해상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및 전남 지역해상에 적재된 불법 통발어구 강제 철거를 통해 어업질서 확립 추진
- 사전계도·홍보 등을 통해 어업인 자발적 철거(폐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이행 불법어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
 - * 지역별 협의회(3회), 실시설계(2회), 행정대집행(2회) 등 적극행정 실시

- 전북 지역 불법 닳자망어구 331톤(54틀) 및 전남 지역 불법 연안 통발어구 274만톤(약 28만개)을 수거하여 어장환경 개선 효과 기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국어선의 국내 불법어업 지속 단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단속세력 확충, 공용 화기 사용 및 어구·어획물 몰수 등 강력대응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특별관리해역 집중관리로 수질 개선 등 소기의 성과 발생】

- (전해역 수질 개선) WQI* 1등급 해역 수 기준으로 최근 악화되던 수질이 '21년은 11개소로 '20년 10개소 대비 증가하며 반등('21.11)
- * (WQI, Water Quality Index) 해양환경의 해역수질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용존무기 질소, 클로로필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계산된 5등급 수질등급기준
- (특별관리해역 수질 개선) 특별관리해역내 I, II등급 정점 비율이 7.4% 높아지는 등('20. 68% → '21. 73%) 평균 수질이 개선
- (생태계 회복)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환경관리해역 내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해수부·환경부 정책협의회 상·하반기 운영 ('21.6, 12) 등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 다양성 회복에 기여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을 통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서 붉은발말뚝게 서식이 확인('21.6)되는 등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 중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출현종 수가 9종('11)에서 18종('21)으로 2배 증가하여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지정·관리 정책의 효과성 입증
- (오염원 관리 강화) 해수부-환경부 정책협의회 운영(6.30, 12.27)으로 '창원권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등 육상오염원 관리 강화
- * 비점오염원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70%)으로 마산만 수질개선 기대
-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개선) 변화된 사회·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개정*(7.1)하고, 연안오염 총량관리 운영 시 지역개발사업 협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11.3)

- * 퇴적물 오염 조사 항목, 배출원별 인구 산정방법, 비점오염원 저감방법 추가 등
-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행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등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해양수산부훈령 제622호)」 개정
- (국민참여 및 현장중심 정책추진) 민관산학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는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집행·평가 및 환류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협의를 통한 계획수립, 시행 및 추진성과 보고·공유*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방안 모색
- * 민관산학협의회 및 환경자문위원회 운영(부산연안 5회, 마산만 4회, 울산연안 4회, 광양만 4회, 시화호 3회, 인천연안 1회)
- ** 바다의 날 기념 감성돔 치어 방류행사,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부산연안 해양교육 및 줍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적극적 대응(해양수산 부문*)】

- * 범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TF 구성·운영중
- (적극 대응)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21.4) 즉시 해수·수산물 감시 등 안전관리 중심의 해양수산 대응책 마련·발표('21.4)
- (국제공조 견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내에서 지속 논의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및 오염수 처리 관련 정보제공 약속(IAEA)
 - * 원전 오염수 문제 런던의정서 규제대상 여부 법률검토 결정('21년 당사국총회), 검토결과에 따라 IAEA 외에도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지속적·구체적으로 논의 가능 기대
 - * 제32차 IMO 총회(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표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관심환기 등 유도
-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강화) '22년도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 940억원 국회 확정('21년 대비 13.7% 증액)
 - (해양) 전체 조사정점(39→45개소) 및 연간 6회 조사대상 정점(13→22개소)을 확대하고, 수층별 조사 및 스트론튬 분석 등 신규 추진
 - (수산) 방사능 검사대상을 100여종(연간 1천톤 이상 생산)으로 확대하고, 검사물량도 연간 2천건에서 5천건으로 단계적 확대(전담부서 신설)

【해양오염사고 전년 대비 6.9% 감소 등 관리 선진화 기반 마련】

- (해양오염사고 저감) 선박 및 해양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한 결과, 해양오염사고는 전년 동기(232건) 대비 6.9% 감소한 216건('21.10) 발생
- (해양오염사고 대응 강화) 국민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써 해양오염 사고예방 및 대응 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 (대규모 오염사고 대응) 악천 후 및 외해 등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21.7월 진수, '22.5준공예정)
 - (잠재적 위험관리) 바다에 침몰 후 수년이 경과하여 선체 노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침몰선박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 및 오염원인 잔존유 사전 제거(침몰후 20년 이상 경과, 잔존유 118kl 제거)
- (해양환경교육생 만족도 상승)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 전환 등을 통해 해양환경교육 이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성과 창출
 - * 교육생 만족도(점): ('20) 92.8 → ('21.10) 93.8
- (이동교실 수강생 증가) 수도권, 서해권, 남해권에 각 1대 씩 운영 중이던 이동교실*을 1대 추가 제작하여 동해권에 투입('21.9), 전국적 교육망 구축
 - * 8톤 트럭을 개조하여 제작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 체험형 콘텐츠 탑재,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해양환경교육 제공
-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던 해양환경 이동교실 실적이 회복되며 총 교육생은 13,346명('21.10)을 기록, 전년 2,136명 대비 6배 이상 증가
- (비대면 교육 확대) 가정에서 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꾸러미 3천개 보급('21.8)
- (국내외 협력 대응) 중국 청도항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원유) 다량유출사고 관련 주중 대사관 및 국제기구(NOWPOP)와 정보 공유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수유동 예측 등 국제협력체계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의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역 수질 개선,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해양수산 조영역의 탄소중립화 기반 확립】

- (체계 마련)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중심 국가 기술 작업반에 참여하고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8)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수단과 방향을 제시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발표(‘21.12)
-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전담 인력 지정(1명),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TF 발족(민관합동) 등 향후 탄소중립 정책 추진기반 확보(‘21.10)
- (국민참여)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학계,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수용성 확보
 - 기술 작업반 운영(‘21.1~10),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TF 워크숍(‘21.1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설명회(‘21.11)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국회 농해수위 당정협의(‘21.6), 농어민간담회(‘21.8)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국민생각함·광화문1번가 탄소중립 국민 아이디어 제안(‘21.4~6), 탄소중립 역량강화 워크숍 유튜브 생중계(‘21.12) 등 대국민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
- (국내외협력) P4G 해양특별세션, COP26 부대행사 개최 등 국제협력 및 SK 수소항만 MOU 등 국내외협력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탄소중립 정책 추진력 강화
 - P4G 해양특별세션시 HMM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1.5), 해수부-SK 수소항만 MOU(‘21.9) 등 협력을 통해 민간의 탄소중립 추진 수준 강화, 관심도 제고

- P4G 해양특별세션('21.5)을 통한 IMO·덴마크 등 해운 탈탄소화 공동 논의, COP26 부대행사('21.11) 한-인니 블루카본 정책 논의 등 해양수산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 지속적인 과제 발굴 교두보 마련

【항만 대기질오염 저감 기반 마련】

- (항만미세먼지 저감) “제1차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1~'25)” 수립('21.1)으로 항만 대기질오염 저감 기반 마련
-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친환경선박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이용 확대 등
 - *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3.5% → 0.5%)하여, '20년부터 외항 선박에 적용, '21년부터 내항선박으로 확대 시행('22년부터는 모든 선박)
- (항만의 친환경화) 항만하역장비 친환경화, 노후경유차 항만 출입 제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항만물류의 스마트화
 - *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및 환경부의 5등급 차량 정보 연계를 통한 5등급차량 출입 제한 시스템 개발 완료('21.9)
-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비산먼지 관리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 * 항만·어항 관급공사장 물청소 실시, 노후장비 사용 중단 및 정부시행 공사에 대한 일시중지, 항만 하역 작업시간 조정, 방진막(벽) 사용 등
- (관리기반 구축) 항만대기 정책지원체계 구축*,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망 확충,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대책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구축
 - *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내 5대 항만별 협의체 구성·운영(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 (항만 대기질 개선) '17년 대비 '20년 부산,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 * 부산(26 → 17), 인천(25 → 19), 울산(25 → 17), 평택(33 → 22), 광양(21 → 13)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의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항만 대기질오염 저감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해양폐기물 전주기적 관리기반 마련】

- (기본계획 수립)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1차('21~'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21.5)하여 2030년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발생량 60% 저감, 2050년 제로화 목표 제시
- (다부처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안전과 대책을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21.10/위원회 개최, '21.12)
 - * (위원회 구성)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9개 부처의 차관급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10명 이내 위촉 위원
 - (반려 해변 운영 시스템 구축) 반려해변 자문위원회 구성, 반려해변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체계 마련
- (활용가능 해양폐기물 확대) 해양에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확대 함으로써 남해안 일대의 굴 패각 폐기물 적체 문제 해소 기대
- (팽생이모자반 수거·처리지침) 팽생이모자반 예찰(위성, 드론, 관공선) 부터 수거·처리까지의 SOP를 정립하여 대량 유입 시 해상수거 (민간정화선 약 79척, 해경청 방제선 10척, 청항선 9척, 어항관리선 6척) 및 해안가수거(바다환경지킴이 등)의 효과성 증대

【해양폐기물 발생원 관리제도로 발생 예방】

- (어구부표보증금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1.12.9)

【정화사업과 전담인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거】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전국 항만·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작년 대비 11.3% 이상 수거('20년 3,144톤 → '21년 3,500톤)
- (바다환경지킴이) 전국 51개 시군구에 바다환경지킴이 총 1,000명을 배치하여 해안가쓰레기를 상시 수거하여 깨끗한 바닷가 조성

【IMDC 개최준비실무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로 협업 강화】

- (국제협력 강화)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으로 해양폐기물포럼 개최('21.5), 해양폐기물(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우호국 장관 선언문**에 대하여 우리측 지지서한 제출('21.10) 등 국제협력 및 대응 강화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

**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국제적 합의가 ①사전예방, ②장기적, ③생애주기적 접근, ④특정 유해 플라스틱에 대한 특별조치, ⑤표준화된 모니터링 및 평가, 이상 5개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설치 촉구

- (IMDC)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21.11)하여 집행위원회, 국내 준비기획단, 관계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성공적 개최 추진

- (하천폐기물 유입저감)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 2회 개최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기관 간 협업, 정보 공유 및 유입차단막 설치 등에 관한 검토·협의를

* 1차 : 4.6 / 23명(부처5, 시도13, 공공5) / 유출방지시설 설치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2차 : 10.14 / 20명(부처4, 시도12, 공공4) / 하천쓰레기 관리 근거 마련, 국비지원 확대 등

- (국립공원)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계기관 협의회 2회 개최를 통해 해수부·환경부, 지자체, 지방청, 국립공원공단 간 상시협의채널 구축

* 1차 : 5.24 / 26명(부처2, 지자체16, 지방청5, 공공3) / 관계기관 합동수거 실시, 기관별 역할분담 등
2차 : 10.12 / 25명(부처2, 지자체15, 지방청5, 공공3) / 집하장 등 수거기반 조성, 반려해변 일원화 등

【새활용 공모전 및 온라인 캠페인 실시로 국민인식 개선】

- (새활용 공모전)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해양쓰레기 새활용 공모전 실시

* 공모기간 11.3~24 / 133점 응모 / 대상 1점·우수상 3점·장려상 5점 당선

- (국제 연안정화의 날)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개최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유공자를 치하하고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식을 확산

* 9.15, 충남 서천군 / 해양정책실장, 서천군수, 충남도 부지사 등 온-오프라인 100여명 / VIP 메시지 소개, 유공자 표창, 반려해변 홍보대사 위촉, 반려해변 입양식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지속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에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확대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아우르는 공간계획 수립으로 통합해양관리 기반 구축】

- (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상경계에 대한 지자체별 갈등을 해소*하여 영해(12해리) 및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 등을 포함한 국토면적 4.4배에 달하는 44.3만km²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별 통합 해양공간관리체계 마련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를 해상경계로 인식하여 발생한 갈등을 11개 시·도 협약체결('21.6)을 통해 해결하고, 9개 해양용도구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

- 경기·인천 등 5개 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 고시* 및 동해안 권역(강원·경북·동해안EEZ)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21.12)으로 “先계획 後이용”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본격화

* 부산('20.2), 인천경기('21.9), 경남제주('21.12)는 확정고시하고, 전북전남 등 타 지역은 해상경계 갈등 해소 후 공청회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전 해역 수립 고시 예정('22.2월)

- (데이터 기반 해양공간관리) 어획량, 조업위치, 선박 통항량, 해양 생물다양성 등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용·개발 시 영향분석을 예측하고 입지갈등을 최소화

-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추진을 유도하여 이해관계자(어업인vs개발사업자) 갈등관리 및 해양이용과 보전의 조화 기여

* 동·남·서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심의 입지검토 28건, 풍황계측기 20건('21년) 등에 해양공간계획 및 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합리적 공유수면 관리를 지원

- (적합성 협의 제도정착) 해양공간 개발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시 사전 입지를 검토하는 적합성 협의 실적*이 '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개발 예방에 기여

* ('19) 19건 → ('20) 169건 → ('21) 278건

-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협의 진행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개설·상담('21.3월~)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과 객관적인 검토 방향 제시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21.9. 중앙부처·지자체 등)

- (공동활용 DB 확대) 해양수산정보의 공공 및 민간 공유를 위하여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수집·연계체계를 단일화하고, 민·관에서 쉽게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정보제공

* 공동활용 DB 구축 : ('18) 163종 → ('19) 82종 → ('20) 160종 → ('21) 200종

- 선박 위치정보(AIS), 어선 항적데이터(V-PASS) 분석 등 위치기반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21년부터 Open API*를 통한 자료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1,600건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 상이한 시스템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식

- (해양공간종합지도 구축)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의 특성정보를 격자별 지도위에 표현한 해양공간종합지도 구축*

* ('19) 인천·경기·부산·경남 → ('20) 전남·제주·울산 → ('21) 전북·충남

- 해양공간종합지도 활용 건수가 '20년(2,240건) 대비 44.6% 증가(3,240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 통합관리 기반 지속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국토면적 4.4배에 달하는 44.3만km²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 계획(안)을 수립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체계적인 갯벌 관리·복원 정책의 성과로써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갯벌복원 및 블루카본 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 기반을 마련
- (갯벌 관리·보전) 「제1차(‘21~’25)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7.22) 및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추진계획 마련(‘21.12)

* '갯벌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및 언론 브리핑(9.28)

-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8.13), 전문가 자문단 구성(8.25) 등을 통해 갯벌 기본계획 및 세계유산 통합관리계획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이행체계를 구축
- (갯벌 복원) “그린뉴딜”사업으로 갯벌복원을 확대시행*하고 갯벌식생복원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

* 신규사업 현황(개소/억원): (‘19) 1/35 → (‘20) 1/52 → (‘21) 3/111 → (‘22) 6/128

- 갯벌의 생태관광 인증,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등 관련 고시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복원된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확보
- (블루카본) 우리나라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규명*하고, 갯벌 생태계 다양성 및 가치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우리 갯벌에서 연간 26만톤(승용차 약 11만대 배출량)의 탄소를 흡수 / 국제 학술지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게재

-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증진, 서식지 보호 및 생물다양성 제고 등을 위해 '22년부터 블루카본 2단계 R&D* 및 식생복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해양의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탄소흡수량 연구(‘22~’26)

**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4개소, 개소당 150억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그린뉴딜”사업으로 갯벌복원을 확대시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매우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체계적인 갯벌 관리·복원 정책의 성과로써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정책효과가 매우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5대 해양생태축을 지정·고시)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보전을 위한 생태계 연결성 확보 등 체계적·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설정 유형	5대 해양생태축	설정·관리 필요성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축	① 서해 갯벌 보전축	바닷새, 연안어류 및 무척추동물의 섭이·성육장 보전
	②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다양한 해조류, 무척추동물 및 어류의 산란·성육장 및 공급처 보전
	③ 동해 생태 보전축	북한한류 해역에서 공급되는 수산자원 한류성 해양생물들의 유입통로 보전
해양보호생물(포유류)의 주요 이동로 보전축	④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괘이) 보호축	물범, 상괘이 등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회유로 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축	⑤ 기후변화 관찰축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열대-아열대 해양생물 출현 해역 모니터링

- (해양보호생물 추가지정)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국내고유종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 8종*을 추가지정**('20. 80종→'21. 88종) 하여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기반 마련

*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국제적·학술적 보호가치가 있는 8종(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큰돌고래, 발공게, 빨강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 해양보호생물 지정현황(종) : ('16) 77 → ('20) 80 → ('21) 88(+8)

- (해양생물 서식처 기능개선)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점박이 물범 서식지 정화활동 등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 사업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 증진
- (해양생물 복지 강화) 동물복지 저해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추진(7.14, 국회발의), 전시동물 서식환경 기준* 마련('21.11) 등

수족관 전시 생물 복지 개선 및 선박관광에 의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교란 방지를 위해 속도, 접근성을 제한한 해양보호생물 관찰가이드라인을 마련('21.10)하는 등 해양생물 동물복지 강화

* 수족관 전시동물 분류군별(고래류, 기각류, 바다거북, 해우류, 어류, 조류) 적정 서식환경 기준 및 수족관 체험프로그램(고래류 등) 가이드라인 등

○ (해양포유류 보호 강화)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규정 마련

* 미국은 對美 수산물 수출국에 대해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조치를 요구하고 미 이행시 수산물 수입 금지 예정

-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한 해양포유류 서식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큰돌고래 등 3종의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 (해양생물 인공증식)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기술 개발 및 인공 증식 개체 자연방류를 통한 해양생태계 다양성 증진

- 기수갈고둥 및 밤수지맨드라미 2종의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기술 신규 개발 및 갯게(500마리), 바다거북류(3마리) 인공증식 개체 자연방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해양보호생물 지속 추가지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5대 해양생태축을 지정·고시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9년) 수립에 따라, '대한민국 무인도서 통계'를 확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통계정비) 해양수산부 지정 전국 무인도서 수를 2,918개로 확정*('21.4)하고, 대한민국 무인도서 백서 발간('21.12) 및 공유
 - * 우리나라 전 지역의 도서 해안선을 추출하고, 위성영상과 중첩한 결과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 (법률개정) 무인도서 보전위주의 경직된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준보전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에서 지속가능한 낚시를 허용하고, 일부 시설물 허가 승인 등의 법률개정 추진
- '21년 제3차 무인도서 실태조사(4차년도) 및 관계기관·지자체·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유형 지정·변경 추진
 - (실태조사) 해수부 관리 무인도서 322개소,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27개소 및 지자체 제안 미조사 무인도서 16개소 등 총 402개소(계획 332개) 무인도서 현장조사를 실시, 정책적인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 (관리유형) 현장 실태조사 중, 전남 진도 일대에서 관리 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무인도서 17개소에 대해 준보전 무인도 등으로 관리유형 지정*·고시(8.30.), 관리유형 변경신청(민원 등)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상정(3건) 및 완료

* 관리유형 신규지정이 필요한 도서는 관계부처,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조회(6.25.~7.12.) 및 검토하여 반영

- (신규등록) 해수부, 국토부, 지자체, LX 공사 등의 관계기관 TF를 조직하여 '21년 5개 무인도서(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각1개소)의 조사방법(만조수위 드론측량) 결정 및 측량성과검사 완료

○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용자, 관리자)를 통한 통계 등 정보의 정확성 개선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무인도서의 대국민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메인화면 구성변경 및 실태조사 기반 시청각 자료 개선 등 홍보기능 강화

* 서비스와 콘텐츠 만족도는 전년 대비 평균 2.4% 상승한 92.6%(1차 92.4, 2차 92.8%)로 조사

** (1위) 접속안정성, (7위) 정보검색편리성, (기타) 관광·교육차원 콘텐츠 확대

- (정보관리)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자 부분 개선, 무인도서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면 제작(82개) 및 배포
- (홍보) 매달 이달의 무인도서를 정하고 관련 포스터, 카드뉴스,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및 정보시스템 연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무인도서 통계정비 및 대만민국 무인도서 백서 발간 등 정책효과가 다소미흡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최초로 독도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공('21.8월)하여
日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도쿄 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등으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적 천명
- 독도의 입도여부, 여객선 접안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누구나·언제나 시·공간 제약
없이 계절별·날씨별로 독도의 다양한 경관을 관찰 가능
- * 독도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실시('21.8.6)
- 과학적 증빙자료 확보, 독도안전관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해양
주권 수호역량을 확대하고, 대국민 해양영토 인식 제고
- 첨단장비를 활용한 독도·울릉도 주변해역 심해저 탐사를 추진하여
독도·울릉도의 지질학적 형성원인과 연계성 규명
- 사회적 약자층, 예술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 대상으로 독도 탐방*
및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 * 독도탐방 총 635명 / ** 홍보, 학술 등 5개 사업에 2.1억원 지원
- 이어도 등 해양과학기지에서의 체류형연구*를 통하여 이어도 해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 축척 및 해양경계 관련 협상지원 기반 확보
- * 해양과학기술원 자자연 고려대 경북대 등 5개 연구기관 32회(전년대비 10% 증가) 130여명 기지 방문
-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재난대응 정보 정확도 향상 및 국민의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예보서비스 확대(이안류 감시 '20. 8개소→'21. 9개소)
- * 해양법 전공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5명,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1명, 해양법
해외 아카데미 참가지원 3명, 해양법 자유주제 연구 지원 3팀 등

-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를 통해 중고생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 및 이해제고(총 56개팀, 약 200명 참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독도안전관리 및 교육·홍보 지속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최초로 독도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정책 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극지 진출 기반 구축】

- (법 제정) 「극지활동 진흥법」(4.13)과 하위법령(10.12)을 제정하여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남·북극 포괄) 남극 환경보호와 과학연구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남극활동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남·북극 활동 전반을 규정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조약의 국내 이행법으로 ①남극으로 범위 한정 ②활동 허가, 환경보호 등 규제 중심
 - (활동범위 확대) 과학연구를 포함하여 국제 활동, 북극권 경제 산업 진출 등 극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 마련
 - (안전관리 강화)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극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전략 수립) 「2050 북극 전략」을 수립하여(11.30 국무회의), 과학, 외교, 산업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 정립
 - (북극 진출 확대) 북극 현안 해결(기후변화·환경 등)에 기여하는 등 북극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50 북극 시대 대비 거버넌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 * (4대 전략) 북극 현안 해결 기여, 외교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 동참, 국내 기반 마련
- (연구 역량 강화) 차세대 쇄빙연구선(6.27 예타 통과) 등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
 - (인프라 확충) 증가하는 현장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여 남·북극해 현장 연구 일수 229% 확대*
 - * (북극) 35일 → 156일, (남극) 49일 → 121일

- (개방적 연구 환경 조성) 연구 인프라(연구선 등)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산·학·연 연구 참여도를 높이고 인프라 활용도 극대화
 - (극지) 쇄빙연구선을 포함한 극지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2.19)하고, '21년 아라온호 남극항해 공동활용 과제 4건 선정
 - * 극지활동 기반시설 공동활용 위원회: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서울대·이화여대·부경대 교수 등)로 구성
- (극지 생명 자원 활용) 극지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주)크리오텍, 9.16),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달성 기대
 - * 극지 미생물에서 분리한 저온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용하여 의료용 세정제, 기능성 사료 등 제작·상용화 예정(~'23)
- (국제 사회 기여)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SCI(E)급 논문 55편)
 - (해양환경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서양에서 기원한 저온 고염수가 북극해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21.3)
 - * 국제적 학술지인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21.3)
- (국가위상 제고) 남·북극 주요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간 양·다자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 (국제기구 의장 배출) 아시아권 최초로 남극 과학계를 대표하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의장(김예동극지연구위원장) 배출(3.25)
 - * 국제과학협의회(ISC) 산하 국제민간 학술기구('58년 설립) / 남극 연구활동 계획 수립,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남극 관련 정부 간 회의·국제기구 자문 수행
 - (남극 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익스프레스블섬'이 남극조약 당사국회의에서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21.6)
 - * 남극의 환경·자연·과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생태계 조사, 환경관리 등 계획 수립·시행

- (북극권 협정 체결) ‘중앙북극해공해 비규제어업 방지협정’*(6.25 발효)에 북극 연안 5개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제1차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영향력 확대
 - * 중앙 북극해 공해의 환경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업을 금지, 과학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수산기구 설립 검토 / 연안 5개국+韓·中·日·EU 등 비연안 5개국
- (양·다자 협력 확대) 북극과학협력 공동성명 발표*(5.9), 북극협력주간** 개최(12.6~10), 한-덴 극지과학기술협력 MOU 체결(12.8) 등 주요 북극권 국가와 네트워크 확대
 - * 제3차 북극과학장관회의(5.8~5.9, 온라인) / 북극이사회 회원국·옵서버 국가 장관 등이 참석, 북극 과학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북극과학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 ** 2021 북극협력주간(12.6~12.10, 부산) / 북극 정책·과학·산업 등 북극 쏠 분야 동향 공유, 국내·외 북극 관계자 간 교류·협력을 위해 옵서버국가 최초로 매년 개최(‘16~)
- (전문성 강화) 해운, 사회과학 분야 국내 극지 인력과 북극권 내 우호 세력을 양성하여 극지 활동 전문성 강화
 - (전문가 양성) 북극항로 운항 인력(선원·연구원 등) 26명, 극지 사회과학 분야(인문·사회, 국제관계 등) 전문가 28명 등 양성
 - (북극 우호세력 형성) 4명의 북극 원주민 교육 지원(국내 대학원 석사), 27명의 북극대학 교류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해외 우호세력 형성
 - * 북극이사회에서는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원주민 단체의 발언권이 점차 확대
- (인식 제고) 극지체험 전시회*, 북극 환경보호캠페인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육행사와 온라인을 통한 극지 문화 홍보
 - * 극지체험 전시회 / 서울시립과학관(노원구) / ‘21.7.20~8.29
- (문화·교육 행사) 북극 환경보호 캠페인*, 북극케어 서포터즈** 출범 등 행사를 통해 북극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 유도
 - * 북극케어캠페인 / 11.5~11.30(온라인) / 해양쓰레기 줍기, 북극 환경보호 홍보 등 생활 속에서 북극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SNS에 인증(상품 증정)
 - **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 모집(11.14~11.24), 지원동기 등 심사를 거쳐 총 50명 선발, ‘북극케어 서포터즈’로 임명(12.6, 북극협력주간)

- (온라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북극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극지e야기*' 방문객 수** 13% 증가

* 극지 정책·산업동향, 과학연구, 지리정보, 문화 등 극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 극지e야기 방문객 수(천명, 11월 누적): ('20) 70 → ('21) 79

【대양연구 기반 구축】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사업 추진방향」을 수립 (11.23)하여 중장기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광물자원 탐사 추진하여 자원량 확보

- (추진방향 마련) 기확보한 5개 광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기술확보 방안 마련하여 안정적인 미래 광물** 확보 기반 구축

* 공해 3(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 EEZ 2(피지·통가 열수광상), 11.5만km²

** 니켈·코발트·희토류 등 배터리·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수요 광물 연간 850천톤 생산 가능('50년 국내 수요 대비 50% 충당 가능)

- (자원탐사) 인도양 해저열수광상에 대한 탐사를 통해 기존 광체 포함 총 8곳의 광체를 확인하고, 수백미터 규모의 광화대* 발견

* 유용광물이 모여 있는 특정지역으로 광상이 모여 있는 지대

- (국제협력) 국제해저기구(ISA) 개최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 토론 패널로 적극 참여(2건)하여 국제 영향력과 국익 증진 기여

- (대양 과학 연구 확대) 연구영역을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대 하는 등 대양과학 발전과 해양자원 확보 저변 확대

① 인도양 연구 확대

- (인도양 기후 연구) 한-미 정상회담(5.22) 후속조치로 한-미 간 인도양 수온약층 융기해역(SCTR)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22~'26)하여 한반도 기후 예측 연구 고도화*, 한-미 기후변화 공조 강화

* 인도양 변동은 한반도 기후 영향 3대 요인(북극해-시베리아, 북태평양, 인도양-티벳)이나, 그 간 연구된 바 없음

- (인도양 자원탐사) 인도양 심해열수 탐사 수행을 통해 새로운 열수분출공* 2곳(온바다·온나래)을 발견('21.11)하고, 열수생물**을 확보하여 새로운 유전자원 활용 등 해양바이오 기술 개발 기대

* 해저 지각의 틈에 스며들었던 바닷물이 마그마에 의해 데워져 지극의 틈을 뚫고 솟아나오는 곳 / ** 열수분출공 주변 극한 환경에 서식

②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대양 관측 역량 강화) 대양에 대한 독자 관측망을 지난해 대비 약 40% 확대*하고, 미 해양대기청(NOAA)과 공유 표층부유관측기도 확대**

* 관측정점개: ('20) 165→('21) 212/ 선상조사개: ('20) 59→('21) 95/ 해양로봇개: ('20) 11→('21) 18

** 국제 공유 표층부유관측기(개): ('20) 78 → ('21) 92

- (기후예측모델) 국내 대양연구를 통해 구축한 기후변화 예측모델이 해양 분야 국내최초로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6차보고서에 인용('21.8)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세계기상기구(WMO)와 UN환경계획(UNEP)이 설립('88),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

- (태풍 등 재난 대응)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등을 통하여 태풍 예측력 향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역량 향상

③ 국내·국제협력 강화

- (연구선 공동활용) 이사부호, 온누리호 등 대형 연구선뿐만 아니라 중·소형 연구선까지 공동활용 범위 확대('20년 12건 → '21년 14건)
- (국제기구 활동)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30년 연속 집행이사국 유지에 성공하여 국제 학계에 우리나라 입지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극지활동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정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해양수산 쏠분야 ODA 확대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협력, 수산자원관리 등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ODA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해결에 기여
 - 사모아 해양산성화 대응사업('17~'21, 28억원),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사업('19~'21, 6억원), 키리바시·베트남 수산자원관리 모델 구축 등 해양온실가스 감축, 해양쓰레기 저감 등 ODA 협력 강화
 - *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워크숍 개최('21.7), 한·인니 해양쓰레기 관련 공동세미나('21.10), 사모아 해양산성화 추적 관련 인프라, 장비 구축('21.9) 등
-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운영 및 ODA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 및 관리기반 마련
 - ODA 전문기관 운영 예산(7.2억원) 확보로 사업 발굴·관리·평가 업무 일원화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1.12), OCEANAID 워크숍 개최(반기별 2회)
- 국제협력 대상국가(약 94개국, 양자협약 기준) 중 중요성과 빈도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협력국을 선정, 차별화된 전략으로 집중관리
 - 연계-총괄 가능성을 토대로 '22년도 해양수산 핵심국제협력 업무로 5개 사업* 선정

* ①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등 대응, ②해양쓰레기 관리개선 협력, ③BBNJ 대응, ④국제 IUU 대응, ⑤WTO 수산보조금 규범협상 대응

- 지역별 전략적 중요성 및 활용·협력 활성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총 13개 중점 협력대상국*을 선정

* (태평양) 미·일·중, (신남방) 인니·베트남·필리핀·인도, (유럽) 프랑스·노르웨이·포르투갈, (아프리카) 세네갈, (군소도서국) 피지, 키리바시

-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21.2)를 통해 우리나라 ODA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ODA 신규사업 발굴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2.23~3.2 / 부산 하얏트호텔(온오프라인 병행) / 중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해양수산 ODA 수원국가 및 전문가 100여명 참석

- 해양수산 글로벌 이슈 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권역별 맞춤형 ODA 수요 등 해양수산 개발협력 방향 논의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 해외수역 조업쿼터 확대를 통해 원양수산물 시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국제수산물기구의 조업규제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연안국의 입어조건 강화로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연안개도국 ODA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조업쿼터를 배정하는 국제수산물기구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전년보다 조업쿼터 확보량 증가('20년 49천톤 → 62.0천톤)

【신남방·신북방 등 양자협력 증진으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인니) 한-인니 장관급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실질협력과 유대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 마련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방한('21.5, P4G 계기), 장관님 방인('21.10), 한-인니 해양장관 회의('21.11, 화상)

- 수산양식, 블루카본,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분야에서 전문가 협의체 구성, 공동조사·연구, ODA 사업 추진 등 협력확대 방안 논의

- 해양과학 연구장비 공여('21.6) 및 해양전문가 양성지원* 등을 통해 인니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원 및 우호세력 확보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석사급 인력 70명 배출 예정

- (필리핀) 수산협력 MOU('19.11) 체결 이후 제1차 한-필리핀 수산 공동위 개최('21.10/화상) 등을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발판 마련

- (EU) 한-EU 간 장관급 면담(9.13)을 통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해양쓰레기 대응, IUU 어업 근절 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EU, 미국 등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회원국과 함께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공동발의국 참여*를 통해 국제 환경 어젠다 추진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남극 해양보호구역(웨델해, 동부남극해) 지정 확대 지지국 장관급회의('21.9.29)시 최초 선언, 제40차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21.10.25~29)

- (기타) 핀란드, 프랑스 등 주요 해양국가와 장관급 양자면담을 진행 하여 해양수산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우호적 네트워크 구축

-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니의 예비 선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실습선박·강사)를 활용한 승선 실습을 실시하여 양질의 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

* '21.11.17~12.17/ 신남방국 및 아태 개발도상국 해양대 학생 22명

【민관협력채널 활성화로 해양수산정책 협력 및 선제적 이슈대응】

-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20.10)이후 전체회의(3회), 분과 회의(4회) 및 실무회의(수시) 등을 개최하여 주요정책 수용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ODA 사업 지속 발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수산 소분야 ODA 확대, 신남방.신북방 양자협력 증진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안정적인 원양수산물 공급 기여】

- 안정적인 조업쿼터 확보, 어획할당량 배정·관리 등을 통해 **국적 원양선박 생산량**(전년동기 대비 **2.0%**)과 **생산금액**(26.5%) **증가***

* (국적선) '21.11월까지 생산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동기(40만톤) 대비 **20% 증가**, 생산금액은 1조 2,121억원으로 전년 동기(9,579억원) 대비 **26.5% 증가**('20년도 전체 생산금액 1조 441억)

- **해외 합작어업**(뉴질랜드·러시아·서아프리카·아르헨티나 등)으로 어획한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증가세)하여 **원양수산물 공급 확대**

* 합작어업 생산량: ('14) 25만톤 → ('20) 31만톤

-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21.4)에서 '**22년 '러' 수역 입어 쿼터량 41,260톤*** 확보와 **입어료 동결** 등 **조업 안정화**

* 명태 28,400, 대구 5,050, 꽁치 3,000, 오징어 4,000, 기타 810톤

- 적극적인 해외어장 자원조사(10개소)로 신규 어장을 적극 개척하여 전년 대비 **신규어장 생산량 30%(24천톤) 증가**

【원양어선 안전역량 확충】

- '19년 결성한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투입,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추진 중이며, '**21.12월 3척**** 취항 완료('20년 2척)

* 원양어선 선령('20): 10년 이하(19척), 11~30년(25척), 31년 이상(166척)

** 가나마린 105금양호, 동원해사랑 805통영호, 해인수산 21은진호

- 대체건조를 통해 '**21년 조선산업 일자리 133개*** 창출

* 산출근거: 선박발주금액180(억원) × 국내조선사 발주율(100%) × 0.74(명/억원당)

** 선박분야 고용유발계수('21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선박별 「원양어선 안전관리 표준지침」 수립·비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분기별 본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어선 안전관리 표준지침」 마련·배포(6.1)
 -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20.11): 안전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의무화
 - *** (4월) 선망 1척, (5월) 연승, 봉수망 각 1척, (8월) 선망 1척, (11월) 채낚기 1척
-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케이프타운 협정(CTA, 국제 어선 안전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 및 금융 지원** 확대
 - * 공청회('21.10)→내부방침('21.11)→외교부·법제처 검토→차관·국무회의
 - ** CTA 기준에 맞춘 구조정, 생존정 등 안전설비 추가 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금리 인하(3%→2%)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IUU어업 예방·근절 역량 강화】

- IUU어업 행위에 대한 항만국검색 강화, 어선 위치추적장치 운용, 해외 수역에서 어획물 불법전재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 정비
 -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시 제정('21.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비 및 운영방법 고시 제정('21.8), 해외수역 어획물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21.8) 등
- IUU어업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조업감시센터(FMC) 기능을 강화(인력 증원)하고, 조업감시 시스템 개선 등 관리·감독 역량 제고
 - * 조업감시센터 직원 소요정원 확보('22년 3명), 시스템의 편리성 및 통신 환경을 개선한 모바일단말기용 앱(app)과 위성 통신 연결장치 개발 등
- IUU어업 근절에 관심이 높은 EU와 정책교류 확대, 교육 워크숍, 특별관리 계획 수립(11.1) 등 국제어선 IUU어업 관리 지속 강화
- ➡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19.9)하였으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공식 해제('21.8)
 - * 미국은 우리 정부와 업계 노력을 인정,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에서 공식 해제, 이로써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 회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 · 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 ·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획할당량 배정·관리 등 정책효과가 다소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적극적 다자·양자 협상을 통한 우리나라 총 어획쿼터 증대】

- 전갱이^{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꽁치^{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남방참다랑어^{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태평양 참다랑어^{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등 주요 기구에서 어획쿼터 신설 또는 추가 확보
-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상태 악화로 인한 대규모 집단감축 논의^{인도양참치위원회}(‘21. 6. IOTC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어획쿼터 감축 최소화
 - 여타 주요 원양조업국(기준년도 대비 21% 감축)과 달리, 기준년도 대비 13% 감축만을 부담해 사실상 현 조업수준 유지(7,524톤→7,448톤)
- 대서양 수역 내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국가간 전배(transfer)에 대한 규범 근거를 공고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참다랑어 조업 기회 확보
 - 우리나라의 미 소진 눈다랑어 쿼터 일부를 대만의 참다랑어 쿼터와 교환함으로써 고가 어종인 대서양 참다랑어 쿼터 50톤 추가 확보

【국제수산기구 의장단 활동을 통한 국제수산규범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우리나라 제1·제2의 참치 생산 수역인 중서부태평양·인도양을 관리하는 각 기구에서 우리부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의장으로 활동*
 - *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임기 '21~'22),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임기 '21~'23)
- 각 기구 사무국과의 우호 증진 및 협력 원활화, 논의동향 파악의 유리함 등 향후 양 수역 국제수산규범 협상력 향상 기대

【코로나19 상황 하 원양어선의 조업활동 독려를 위한 제도 개편】

- 공항·항구 폐쇄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약이 원양어선의 안정적 조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읍서버 승선, 입항 전제

등 이행이 불가능한 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임시 조치를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적용기간 연장*

* '20년 4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우리나라가 제안 및 채택, 3개월 단위로 전 세계적 상황 검토 및 적용 연장을 결정하는 절차 적용 중(차기 검토 예정 시점 : '22.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우리나라 총 어획쿼터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우리나라 총 어획 쿼터 증대, 국제수산기구 의장단 활동 등 정책 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내 수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협상 대응

- WTO, UN, OECD 등 국제기구 중심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규제 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 대응 지속

• 상반기 협상 6회(1.11~1.15, 2.15~2.19, 3.15~3.19, 4.12~4.16, 5.18~5.29, 6.1~6.30), 통상 장관급회의(7.15), 하반기 협상* 참석 및 발언

* 하반기 협상은 쟁점별 협상 및 단계별 협상으로 진행되어 주평균 3~4회 대응

• 법률 자문 및 부처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면세유, 타국어선 규율 관련 대안(각 6.23, 11.11)을 마련, 전체 협상에서 대안 제시

○ 주요 FTA의 적극적 협상 대응으로 수산업계 보호 및 해외시장 확대

-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FTA 등 '21년 신규 타결된 협상에서 既체결 FTA(ASEAN) 대비 수입개방 영향 최소화 및 수출 관심품목(김, 다랑어, 게 등) 상대국 시장 추가개방으로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수산물 수출입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익 증대 기반 마련

- (수입) 연구 용역과 참여업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TRQ 운영에 따른 국내업계 보호효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연간 180억 원의 국내 수산업 보호 효과 추정

- 수산물 생산 감소·물류상황 악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애로 사항을 고려, TRQ 수입이행기한*을 12.31로 설정하여 피해 최소화**

* 수산물 무관세 수입권을 공매로 수입업체에 배정하고 있으며, 예년의 경우 수입 이행기간을 낙찰 후 1~ 6개월로 설정

** 수입이행기한 내 수입 미완료시 수입이행보증금 국가귀속, 1년간 TRQ 참여 제한 등 제재

- 연도별 TRQ 운영계획의 사전 공지, 간담회 정례화 등 업계와의 소통 확대 방안 마련

- (수출) 코로나 19로 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재개, 조미김의 對日 수출 쿼터를 확대*

* 한·일 양국 간 수산물 교역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급 회의로, 김 IQ 품목별 쿼터 배분(총 IQ 증량분을 마른김, 조미김, 김조제품으로 다시 배분) 등에 대해 논의

** '22년 총 증량분(150백만매)의 60%인 90백만매를 조미김에 배분('21년의 경우 총 증량분의 23%인 35백만매만 조미김에 배분)

- 마른김에 비해 가격이 높고 일본 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조미김의 쿼터 확대로 국내 김 수출업계의 수익 증대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소통·확산노력이 상대적으로 저조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확산노력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 등 정책효과가 다소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관광콘텐츠 개발)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급증에 따른 관광 위축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우수 해양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사업화 자금 및 상품판매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
 - * ('18년) 5개→('19년) 6개→ ('20년) 8개→ ('21년) 8개(최근 3개년 평균 15% 증)
- 해양관광상품 발굴·운영을 통해 '21년까지 선정상품 이용객수 16천여명, 상품매출 14억여 원 달성 등 해양관련 상품 정착기반 마련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상품의 홍보 기회가 축소된 상황을 감안, 우수 해양관광상품의 할인기획전을 개최(11월)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 지원
 - * 온라인 여행플랫폼인 '야놀자'를 통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의 할인판매(40%) 실시
- (해수욕장 활성화) 휴가철(7~8월) 손쉬운 스마트 방역, ICT기반의 분산정책 추진을 통해 방역과 여가가 공존하는 해수욕장을 운영
 - * (스마트 방역) 안심콜을 통한 방문이력 관리, 체온스티커를 이용한 신속한 발열확인 등
 - ** (분산정책)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수욕장별 혼잡정보 제공, 사전예약제, 한적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전년 대비 대형해수욕장 이용객 비중 10% 감소 등 이용객 분산 제고
- 철저한 해수욕장 방역 추진으로 안전한 휴가지 제공 및 분산정책을 통한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와 인근 해양관광 수요 연계
- 또한, 매년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포상하여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의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과 해수욕장 환경개선을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집합 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험교실 약 71개소(12개 지자체) 운영으로 국민의 해양레저 저변 확대
 - 코로나19 추이 변화에 따라 운영과 중단을 반복되면서 체험인원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향상

- * 체험교실 방역담당 감독관(공무원) 지정 운영, 온라인 사전예약 원칙, 밀접접촉 예방을 위한 체험종목·방식 조정 및 레저장비·시설 방역 기준 등
- ** 체험교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감염 발생 사례 無

○ **(크루즈 활성화)** 코로나19 확산으로 **크루즈 입항 금지***, 전세계적 출·입국 제한으로 **크루즈 기항지 현장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관광목적 크루즈 입항 금지('20.2, 중대본), 크루즈 항해 금지 명령('20.3, 美CDC)

-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K-Cruise 온라인 홍보관***'을 보완을 통해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으로 크루즈 운항 재개에 대비

* 기항지 정보 및 해외선사와 국내 업계 간 1:1채널을 개설하여 4개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번체·간체), 한국어)로 제공

- 관계기관 공동 온라인 포트세일을 통하여 해외 크루즈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크루즈 운항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크루즈 운항 재개 시 우리나라 기항 유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부진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부진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부진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활성화 정책 효과가 다소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新산업 기반 육성) 해양치유·마리나 산업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해양치유) 「해양치유자원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21.2)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프라·협력 체계·프로그램 등 마련 추진
 - (제도) 「해양치유자원법」 하위법령 제정(2.18), 해양치유 관련 고시* 제정(5.25) 및 해양치유 기본계획 수립(12.16)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인프라)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4개소)*을 통해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기반 마련
 - * 완도 해양치유센터 착공('21.3) 및 공사 추진(~'22년 말) 및 3개(울진, 태안, 고성) 해양치유센터 설계 등 절차 추진
 - (협력체계)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위해 산림·해양·농업치유 유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10.1) 및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 추진('21~'25)
 -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21~'25) 총사업비 495억 중 해수부 66억원
 - (프로그램) 해양치유 협력지자체(완도, 태안)에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및 의료진 등 코로나 19 대응 인력 대상 해양치유프로그램 협력 추진
 - * (완도) '18~'21년(3~11월 경) / 총 226회 개최, 17,282명 참여, (태안) '20~'21년(10~11월 경) / 총 81회 개최, 1,544명 참여
 - ** ('20. 완도) '20.8. ~ 11., 의료진 등 236명 / ('21.태안) '21.10. ~ 11., 보건 소방, 방역 등 200명
- (마리나) 해양관광 핵심 신산업인 마리나 육성을 위해 산업육성, 인력양성 및 인프라 조성 등 추진

- (마리나산업) 코로나19라는 마리나산업 위축 변수에도, 국내외 판로확대·홍보, 新 산업분야 제도화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노력**
- 코로나19로 실내활동·해외여행 제약에 따라, 국내 요트·보트체험 인구증가에 따라, 전시·체험행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적극 시행
 - * (레저산업 전시·체험행사) '20년 1회(온라인) → '21년 3회(현장행사 병행)
 - (해외판로 홍보) '20년 없음 → '21년 1회(네덜란드 METS 2021)
- 레저선박 규모의 지속 증가('20년 12백척 신규등록)에 따라, 레저선박 정비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비업 제도 시행 준비
- (인프라) 마리나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인프라* 지속 확보
 - * 제부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준공('21.6.)
- (수중레저) 코로나19 기간 중 수중레저활동 증가에 비례하여 우려되는 안전불감, 지역사회와의 갈등불식을 위한 정책노력 발휘
 - 수중레저사업자* 안전점검·제도 강화,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개정
 - * ('19년말) 612개소 → ('20년말) 659개소 → ('21년 11월말) 780개소
 - ** 수중레저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사업자 기록물 관리의 전자화 허용 등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어업인의 야간 수중레저 전면금지 요청 및 레저인의 가두시위 등 민원 고조에 주체 별 간담회('21.4) 및 건전한 레저활동 캠페인 전개('21.6~7) 등을 실시하여 **갈등봉합 노력**
- (일자리 창출) 해양치유 센터, 마리나 항만 건설 등 재정 투입 인프라 구축 및 마리나 창업 지원·홍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총 445명 : 치유센터 60명, 마리나 241명, 마리나 거점 144명 고용 창출
- (대국민 인식 증진) 해양치유, 마리나 등 홍보활동을 통해 해양관광 산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양레저 이용 인식 제고***
 - * 브리핑 1건, 기고 1건, 보도자료 10건, 기획기사 3건, 블로그, UCC홍보 10건, 다큐멘터리 등 방영 3건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마리나, 수중레저산업 육성 등 정책효과가 다소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해양교육문화법 시행('21.2)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 기본계획 수립·발표 등으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 법적 제도기반에 근거한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 및 해양문화 진흥으로 바다에 대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20) 해양교육문화 관련 법적 제도기반 없음 → ('21) 법적 제도기반 마련
- (인프라 구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본격 추진
⇒ 건립 완료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문화 향유권 확대
* ('20) 해양문화시설 3개소(부산·울진·서천) → ('21이후) 5개소(+인천·청주)
-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박람회재단의 부채 증가 및 박람회장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따른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수광양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 도모
* ('20) 여수박람회장 민간개발(매각·임대) → ('21) 공공개발 정책 전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다소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에너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에너지·그린수소 중장기 계획 수립, 파력발전 준공을 통한 도서지역 주민 전력 공급, 조류발전 기업을 위한 육상 시험장을 준공하여 상용화 기틀 마련
- (중장기 기반 마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21.10)에 따라 조류·파력·조력 등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해양에너지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21.12)하고,
 - '40년까지 국내 그린수소의 10%를 해양에서 생산하기 위한 '해양 그린수소*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21.11)하여 민간기업 기술개발 지원
 - * 파력 등 해양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해수를 담수화·수전해하여 생산한 청정수소
- (파력발전 설비 구축 성공) 국산 기술 100%로 도서지역 방파제를 활용하여 구조물 비용(동급 파력발전기 대비 50% 비용절감)을 낮춘 파력발전 설비를 준공*('21.11)하여 제주 추자도에 전력 공급 개시
 - *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융복합시스템 기술개발 : '16~'22 / 140억원(KRISO)
- (인프라 구축) 육상 시험장(부산)*을 구축('21.11)하여 조류발전 민간기업이 인허가 우려** 없이 개발품 성능을 시험하도록 지원
 - * 조류발전 실험역 시험장 구축 : '17~'22 / 280억원(KIOST)
 - ** 조류·파력발전 기업 간담회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업들이 기술개발한 제품을 시험하기 위하여는 해역이용협의·주민동의 등 제반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
- (해양장비) 첨단 해양장비·로봇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수중에서 작업자 안전을 향상하고 해양오염 감시·예방 강화

- (수중로봇) 수중건설로봇 개발을 통한 국산화와 성능 실증을 통해 잠수사를 활용한 수중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인명피해 예방
 - * 그간 잠수사가 투입되던 배관 매설·해저면 정리·사석 고르기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
- (수중통신) 세계 최초로 수중기지국을 설치하여 해양정보를 육상으로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 실시간 해양감시와 생태 모니터링 가능
 - *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수중정보(수온, 용존산소량 등) 측정과 해양오염을 실시간 탐지하여 육상으로 전송하는 실험 성공('21.12)
- (차세대 선박) IMO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친환경선박 연료 선박 적극 개발을 위해 R&D 지원과 함께 산·학·연 생태계 조성 추진
- (민관 협력)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와 기술 개발 교류, 규제 없이 육·해상 실증을 하기위한 인프라 공동활용,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육성을 위한 협력 MOU 체결
- (전기추진차도선) 선박용 배터리 개발 등을 통해 '21년 논문 8편*(SCI급 5편, 국내학술지 3편), 특허출원 9건, 특허등록 10건 등 상용화에 이르기 위한 기술 확보
 - * 대표 논문: 전동기의 3상제어시스템 관련 지연 보상기술,
 - 대표 특허: 광섬유를 이용한 배터리셀 온도 및 변형도 측정장치
- (LNG 벙커링 선박) 시험 건조(12.末)로 5개 핵심기자재 실증·실적 확보, 국산화율 향상(75%→ 89%)하여 국산 기자재·선박 수주 확대 기여
 - * (가칭)K-LNG DREAM호, LNG 공급용량 500m³, 총톤수 677ton(길이 48.5, 너비 12.4m)
- (LNG 선박 성능평가 인프라) 선박용 LNG 핵심기자재에 대한 성능평가 설비 구축 완료(12월말)로 기자재 기업 판로 확대 지원
 - * 해상모사장비 2기,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동 1동(부산, 2층 449.43m²)
- (친환경선박 실증기술) 전기·수소·혼합연료 등 다양한 친환경선박 추진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선박 한국선급 형식 승인(11.6)으로 친환경선박 실증 환경 개선과 개발기업 편의 증진 기대

-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해외 수주·계약 지원 및 우리 기업의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 진출 추진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 플랜트 건조 이후, 운송유지보수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4개 기업)을 통해 약 1,250억 규모 협력사업 발굴, 4개 MOU 체결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입안·설계, 금융조달 등 타당성 조사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 1억원)

- (장비·S/W 공동활용) 성능 시험장비 및 엔지니어링 S/W 등 공동 활용을 통해 33개 기업, 130억원 수주 지원

- (인력양성) 불팅, 인슐레이션(단열) 등 해양플랜트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전문교육 14개 과정 240명 이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강화 기여

- (수출상담회) '한-인니 오프쇼어 콘그레스'를 개최(10.13~14)하여 국내기업(67개사)과 인니기업(46개사)간 1:1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총 118건, KOTRA)하여 147백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 (한-인니 장관급 MOU) 장관님 인도네시아 방문(10월) 시 인니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 시범사업 등 해양플랜트 협력 MOU 체결(10.13)

- (한-인니 기업 MOU)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삼인엠티에스등 3개 기업에 대한 협력지원을 통해 인니 기업과 MOU체결, 향후 약 5천억 매출 기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에너지, 차세대 선박,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육성사업의 정책 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유용소재 11.3% 및 분양 실적 15.5% 증가, 국제인증 100% 달성 등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 소재 공급체계 강화】**

- (유용자원 확대 구축)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기업 등에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4개)**을 본격 운영('21)하고, 유용소재 **총 8,426건**을 확보*(전년 대비 11.3% 증가)

* 확보량(누적, 건): ('18) 1,544 → ('19) 6,490 → ('20) 7,571 → **(‘21) 8,426**

- (활용 및 품질 제고)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224건을 **분양**(전년 대비 15.5% 증가)하고, 뱅크 보유자원의 품질 확보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ISO 국제인증 추가** 획득**

* 뱅크 분양건수(건) : ('18) 108 → ('19) 150 → ('20) 194 → **(‘21) 224**

** '20. 추출물, 유전자원 → **'21. 미생물, 미세조류 2개 추가(100%)**

- (효능정보 등급화) 확보한 소재(추출물 322점)의 **효능**(항산화, 항염증, 항균)을 활성 수준에 따라 **등급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연구 수요자의 소재 선택의 편의성 증진('21.7.~)

- (분양서비스 개선) 해양수산생명자원 **DB**(국내 14,507종, 해외 6천종)를 구축하고, 관련 학회 개최 시 홍보 부스 운영(6회), **현장분양**(98건) 등을 통해 자원 이용 편의성 증진

* 해양바이오뱅크 추출물 소재 홍보샘플 제공(100 set) 및 해양생명정보 인포그래픽 레터(소재등록정보, 연구동향 등) 배포(한국바이오협회 등 4개 학회·협회 1,279개 회원)

**【인큐베이터 설계 건축 허가, 해조류 소재생산시설 설계, 인력 양성(39명) 등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인프라 조성 착수】**

- (특성화 거점 착수) 해양바이오에 특화된 인프라·서비스 통해 산업화 전주기(기초연구→소재 개발·생산→산업화)를 지원하는 권역별 특성화 시설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및 신규 예산 확보

- 서해권 산업화지원 인큐베이터(서천 1), 남해권 해조류 생산시설 및 인증센터(완도 2) 등 3개 거점시설에 대한 설계 완료
- 추가 예산(127억원)을 확보(신규 2건 4억원, 기존 3건 123억원)함에 따라 특히 서해 및 동해권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 * 서해권 해양바이오 소재 인증지원센터 타당성조사, 동해권 특성화 거점인 해양바이오 메디컬케어 중개기술센터의 타당성조사
- (전문 인력 최초 양성) 해양바이오 최초 해양바이오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 2회(21명, 18명)의 교육과정을 통해 39명 배출(만족도 93.5점)
- * (필수 교육 과정) ① 기능성 소재 추출분리정제 기술, ② 장비활용 교육, ③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분 분석기술, ④ 국내외 인증/인허가 교육
- (산학연관 협력 강화) 해양바이오 신규 정책 발굴과 자문기능을 대폭 강화한 연구혁신발전협의회 구성·운영('21.10)
- (문제해결형 R&D 확대) “글로벌 해양바이오 선점전략('21.1)을 토대로 수입 소재 국산화*, 글로벌 환경이슈(탄소 중립 해양환경개선) 등 대응하는 연구개발 범위 확대(예산 122.5억원 신규 확보)
- *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22년 신규, ①국산화 타깃 37억원 ②탄소저감 15.5억원)
- **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21~'23, '22년 22억원)
- *** 해양수산물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22년 신규, 50억원)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양생명자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글로벌 해양바이오 선점전략 이행) 기업 수요 및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기반 조성, R&D 혁신 등 2대 전략 및 5대 중점과제 도출(1.14)
- (자원 관리제도 개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해양생명자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해양생명자원법률 개정('21.9.1, 국회제출) : 분양승인 용도를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도 추가하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사유 강화

-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3) : 자원 **분양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원 분양을 담당하는 책임기관에 분양 승인 업무를 위탁
- 국외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원 종을 정비(신규 추가 245종 등 고시, 개정 중)하고, 종별 분양수량의 **정량기준**을 마련하여 자원 이용 관련 혼선 방지

- (생명자원 인식 제고) 초중고교 생물교육 지원*,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실시간 원격교육, 해양생물 교육 자료집, 어린이 도서, 교구재 등 6종 교육콘텐츠 개발

** 온라인 전시·교육·체험 콘텐츠 총 56편 제작, 어린이 전용 공간 조성 등

【BBNJ 협정* 공개 포럼 개최(4회)를 통해 BBNJ에 대한 인식 확산, 국가 입장 정립과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 (인식 확산) 소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위주의 논의 구조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포럼으로 넓혀 정보와 의제 쟁점을 공유
- 4회(10.7, 10.20, 11.1, 11.9)에 걸쳐 총 4개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 **126명** 참여
- (입장 차이 이해) 연구자, 산업계,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의제별 발표 및 토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 상호 입장 차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해의 폭도 넓히게 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바이오 소재 공급체계 지속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 소재 공급체계 강화,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인프라 조성 착수 등 정책효과가 다소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보급을 위한 해운·조선 상생협력 강화】

- (연구개발) 해수부·산업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22~'31)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2,540억원 규모의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21.6), '22년부터 사업 착수
 - 이외에도 친환경선박 분야의 다양한 R&D를 지원 중이며,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기술주도권 확보 및 국익창출 기회 제공
- (국가 계획)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20.1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1년 개발·보급 시행계획」 수립('21.1. 해수부·산업부)
 - * '30년까지 무탄소선박(수소, 암모니아 등) 상용화 기술 확보, 친환경 선박 528척 보급 등
 -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3척, 총 36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

- (황함유량 0.5%) 국내 항해 선박은 '21.1.1이후 첫번째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일부터 적용하고, '22.1.1.부터 모든 국내 항해선박에 적용
 - (저감효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3.5%→0.5%: 70% 이상 저감, 0.5%→0.1%: 10% 저감(美환경청, EPA)
 -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로 선박 배출량 50% 수준 저감 가능
 - * (감축량) 4,806톤 * 70% = 3,364톤, (감축비율) 3,364톤 / 6,995톤 = 48%
- (배출규제해역) 선박 입·출항 척수, 규모 등을 고려 5대 대형항만* (부산, 인천, 평택, 여수·광양, 울산)의 교통안전특별해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
 - *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약 76.2%를 점유('19년)하는 5개 항만 지정

- 정박·계류 시('20.9.1) 적용에서 해역 진입 시('22.1.1)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0.1% 이하 적용하여 주요 항만 대기질 개선
-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존 선박온실가스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관리 중('21.~)
- 운항선박에서의 실측을 통해 계산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근거로 우리부가 개발한 산정방법을 환경부의 국가 산정체계 반영 추진 중
-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선박에 탑재·측정('21~'24년, 8척/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 및 우리부 '2050 탄소중립' 목표(해운부문 72.8만톤) 달성에 활용

【친환경선박 신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인증제도) 친환경 신기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21.1~)'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에 인센티브(보조금)를 제공하여 보급 촉진
- * 선박기자재의 오염물질 저감효과 및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등급(1~5등급) 부여
- 올해 전기추진 유람선, 하이브리드 예인선 등 총 8척을 인증하고, 이 중 3척은 정부지원(보조금 약 40억원)을 통해 선박 건조 달성
- (기술기준) 국가 100대 기술목록과 10대 유망기술을 마련하고, 그간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 6종(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선박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시험·안전·검사 등 총 3건,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총 3건
- 특히,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잠정기준을 마련('21.6)하여, 내년 해수부 관공선 30척(60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80척에 설치 예정(한국판 뉴딜(그린뉴딜), '22~'25)
- (해상실증) 신기술 상용화에 필수인 적용실적(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수소·LPG 연료 추진선박 3척 해상실증을 허용*하는 등 친환경선박 조기 상용화와 지역별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기여
- * 연구개발 목적의 새로운 선박 시운전 시 법 적용 면제(「선박안전법」 제3조)
- ** 울산 및 강원(수소 추진선박), 부산(암모니아·LPG 추진선박), 전북(신소재 선박) 등 규제자유특구 총 5개 과제 소관부처

【해수부 관공선 18척을 선제적으로 친환경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

- 올해 해수부가 신규 발주한 친환경 관공선 9척(하이브리드 7척, LNG 2척)을 포함, 총 18척(1,134억원)을 선제적으로 친환경 전환하여 조선업 일자리 840개* 창출

* 1,134억원('21년 관공선 건조예산)×0.74명/억원(조선업 고용유발계수)

- 특히 한국판 뉴딜에 따라 '25년까지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총 29척(6,280억원) 건조하여, 조선업 일자리 4,647개* 추가 창출 기대

* 6,280억원(관공선 건조예산, 한국판 뉴딜)×0.74명/억원(조선업 고용유발계수)

【타부처·지자체 등의 친환경 전환 지원을 통해 5척 발주】

- (전환 지원) 친환경관공선 건조 의무화(「친환경선박법」, '20.1~) 및 관련경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정부부처·지자체 등에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올해 6개 기관(부산소방재난본부, 해군, 충청북도소방본부, 제주시청 등) 총 10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공선 전환을 위한 적용기술 등에 대한 자문 제공

- 특히, 친환경관공선 모델 10종 개발과 운항특성에 최적화된 자동설계 플랫폼* 구축을 완료

* 기관별로 요구사항(속도, 업무 등) 입력 시 적용기술, 예상선가 등 설계정보 자동 제공

- (타 부처·지자체 발주) 산림청, 충남도 등 정부·지자체에서 산림보호단속선, 병원선 등 관공선 5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 중

* 병원선 2척(충남·전남 각 1척/132억원), 어장정화선 1척(전남 완도군/75억원), 청항선 1척(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2.5억원), 산림보호단속선 1척(산림청/30억원)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선박 13척 전환】

- (내항선) 영세 연안 선사의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 보조 사업을 신설*(40억원)하고, 4차례에 걸친 사업자 공모 및 적극 홍보**를 통해 전기추진 유람선(9.24. 취항)을 포함한 총 3척 지원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 내항 여객·화물선, 선가의 최대 20% 보조('21. 40억원)

** 온라인 정책설명회 1회, 현장간담회 3회, 홍보영상 및 브로셔 제작·배포 등

- 특히, 내년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율을 선가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민간선박 총 140척 전환 목표의 조기·초과 달성 예상

* (지원척수/예산) 40억/3척 → 60억/5척, (지원율) 선가 최대 20% → 30%

○ (외항선) 정부 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올해 총 10척 지원

* 친환경·고효율선박 확보 지원: 외항화물선, 선가의 최대 10% 보조

('18) 7척/225억원 → ('19) 8척/85억원 → ('20) 6척/112억원 → ('21) 10척/191억원

○ (제도개선) 친환경선박 전환 자금 지원대상을 현재 면허 취득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확대(적극행정위원회, 6.17) 적용하여,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신규수요를 창출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신규사업자 선박 1척 지원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 지원】

○ (예산 지원) 국내선사가 규제대응을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이나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22~'23.)

* 기관출력제한장치 설치지원 예산(570척, 보조금10%) : 51.2억원('22년:25.6억원, '23년:25.6억원)

○ (기술·정보 제공) 국영문 기술지침서 배포('21.6월), 설명회를 통한 규제내용 및 선사 준비사항 전파('21.6월, 12월) 등 정보 제공

- 에너지효율 계산 프로그램 개발·제공('21.8월)을 통해 등급이 낮은 선령·선종 소유 국적선사는 효율 개선을 위한 사전 계획수립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장치 설치지원 :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 사업('22년:87억원)에서 일부 지원

○ (국가감축목표 달성) 소규모 해운업체의 목표관리제도의 성공적 이행과 외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의 해운부문 감축목표량(30년 19.1만톤) 달성에 기여

- (목표관리제 시행) 내항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업체(6社)를 대상으로 '22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컨설팅 및 제도이행 지원

* ('22년 목표) 예상배출량: 131천톤, 배출허용량: 122천톤, 적용감축률: 6.4%

- (외부사업 활성화) 소규모 선박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며('19.~), 신규 방법론 개발을 통한 활성화 추진 중

* 승인현황 : 방법론(육상전원장치 활용 방법론 '20.10), 외부사업(인천항만공사, '21.3)

** (해운선사 지원사업) 해운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240백만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해운·조선 상생협력 강화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사업화·성장 촉진

- (진입장벽 완화) 창업설명회를 통해 예비·초기창업자에게 해양수산 창업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창업 역량 강화 지원
 - * (정보) 창업 성공사례·트렌드, 정부 지원정책 등 / (상담) 사업모델 수립, 판로개척 등
- (육성 체계화) 창업기획자*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사업화~투자유치 패키지 지원(31개 기업)
 - * 창업기업이 성장궤도에 오르도록 자금·멘토링,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 자금·시설, 선도기업·투자자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해 8개 해양수산 기업 창업*, 신규 고용 70명 창출, 투자 69억원 유치 등 달성
 - * 해조류 건강기능식품, 해양생물 유래 친환경 제설제, 수산식품 유통 플랫폼 등
- (사업화 가교)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컨설팅과 기업 수요 기반 기술개발 등 전주기에 걸친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 촉진) 국내외 혁신기술과 선도 기업 소개*, 우수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아이디어 발굴, 기술 거래 등 지원
 - *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 전문가와 해양수산 기업인 중심으로 컨퍼런스 개최

② 해양수산 민간투자 확대 및 해양수산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 (투자유치 기회 확대) 해양수산 기업이 기업설명회(IR), 투자 상담 등을 통해 투자기관과 교류하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기회 마련

*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운영(연 4회), 기업현장 방문(연 3회), 투자박람회 개최 등

- (투자유치 역량 향상) 기업에게 재무분석, 자금조달 전략 등 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 기업설명회(IR)·상담을 통해 피드백* 제공

* IR 자료 첨삭, 발표방식 교정, 모의 IR 참여 투자기관 개선의견 등

- (인식 제고)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업 특성, 기술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기관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투자 확대 유도(109명(91%) 수료)

* 기업, 연구소, 대학 및 투자기관 등 각 분야 해양수산 전문가로 강사진 구성

- (중점투자 기반 조성) 해양수산 기업에 집중 투자(의무비율 60%) 하는 정책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촉진

* 정부-민간 공동 출자, ('19) 2개(295억원) → ('20) 2개(298억)→ ('21) 1개(143억)

- '20년까지 조성된 4개 펀드(593억원)에서 23개 해양기업에 231억원 투자 중이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 급격히 상승

* 벤처투자 중 해양수산 비중 : ('13~'17) 0.4%→ ('18) 0.97→ ('19) 0.82→ **('20) 1.94%**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수산 창업 지속 활성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수산 민간투자 확대 및 해양수산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발굴) 우수한 해양수산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다】

- (사업실적)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11개 아이템 발굴
 - 다년간('15~'21) 콘테스트를 운영하며 인지도가 상승되고 경진대회 브랜드도 공고화되어, 총 11개팀을 선발하는 가운데 185개팀이 지원하여 약 17:1의 경쟁률 달성
 - 특히 사업화 부문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약 36%(23건) 증가
- (입상팀 투자연계) 콘테스트 입상팀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육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투자·금융 연계를 위한 후속 지원 추진
 - 후속지원을 통해 11개팀 중 5개팀 기업 IR 연계를 진행하였고, 그 중 2개팀(라피끄, 오이스텍)은 투자 미팅이 성사되어 구체적 투자 논의 중
 - *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기업 IR 연계를 통해 수산모태펀드 운용사 투자 검토 주선
- (후속지원) 탈락팀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아이디어의 우수하나 아쉽게 입상하지 못한 탈락팀 6팀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서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창업도전 독려
 -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 등 해양수산분야 적극행정을 홍보하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홍보 콘텐츠 Best15*에 선정('21.7, 해수부)
 - * (카드뉴스)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유망기업 발굴 및 우수성과 창출
- (기업성장 우수사례) 올 한해는 역대 수상팀 중 큰 성장을 거둔 사례도 등장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성공적인 창업 가능성을 증명함
 - 2018년 사업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스타스테크(불가사리 친환경제설제)는 현재 100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하여 여러 TV매체에 출연

【(지원)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다】

- (사업실적) 지역별 센터(6개소,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를 지정·운영하여 해양수산분야 창업자·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가공, 유통, 바이오, 기자재 등 해양수산기업 321개사 발굴하여, ①창업·기업 교육, ②마케팅, ③시제품 개발, ④판로개척 등 지원 제공
- (사업성과) '21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성과지표에 신규 고용수, 창업기업수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 매출액 증가율, 신시장 확보건수, 여성참여율, 수혜기업 만족도 등 여러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다각도에서 우수한 성과 도출 노력
 - (신규고용수) '21년 신규고용수는 1,482명으로 전년도 1,182명에 비해 300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125.4% 성과를 달성함
 - * (지역별) 부산 295명, 제주 91명, 경북 437명, 강원 117명, 전남 320명, 충남 222명
 - (창업기업수) '21년 창업기업수는 35개사로 전년도 31개사에 비해 4개사 증가하여 전년대비 113% 성과를 달성함
 - * (지역별) 부산 8개사, 제주 6개사, 경북 5개사, 강원 6개사, 전남 6개사, 충남 4개사
 - (수혜기업 매출액 증가율) 수혜기업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15.3%로 사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업체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 영향 미침
 - (수혜기업 신시장 확보) 수혜기업의 기존 거래처 외 새로운 판매처인 홈쇼핑, 온라인 마켓 입점, 수출 시장 등 180건 개척
 - (여성참여율) 수혜기업 중 여성대표자 기업 비율 10%를 신설 지표로 포함하여 23.3%를 달성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실현
 - (수혜기업 만족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피드백을 '22년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순환하는 순기능 실현

- (디지털 청년 일자리)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 해양수산업기업의 온라인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1차 추경에 신규로 반영(약 7억)하여,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및 전북도를 통해 지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이를 통해 60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하였으며, 이 중 42명이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 예정으로 70%의 계속고용율을 달성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비대면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명회를 온라인 박람회,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배달하는 사업설명회 등으로 대체,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
- (추가 1개소 예산 확보) 기존 6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22년부터 추가 1개소를 지정하여 총 7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을 반영
 - 디지털·청년 일자리 사업에 협조하며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에 경험을 쌓은 '전북도'가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21.12)되었으며, 앞으로도 전국 연안지역 모두에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투자) 수산펀드를 조성하여 해양수산업 기업 투자를 확대하다】

- (수산모태펀드) 정부는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자(子)펀드인 수산펀드에 출자하며, 정부 재원과 민간 자금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되는 수산펀드는 성장가능성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
 - 정부 주도의 보조·융자 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를 통해 수산벤처분야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펀드 결성·투자) '10년~'21.10월까지 수산모태펀드 재원(예산 1,039억원, 회수금 등 456.5억원)을 마중물로 790억원 규모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누적 2,285억원으로 15개 펀드 결성, 1,507억원을 투자
 - '21년에는 정부 출자 180억원, 민간 출자 75억원을 더한 총 255억 규모의 수산펀드를 2개 결성 완료(수산일반펀드 150, 수산벤처창업펀드 105)

- (피투자업체 매출고용 성장) 수산경영체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경영체의 성장으로 이어져 경영체의 매출 및 고용 증가로 나타남
 - 실제 운용성과평가 결과, 투자받은 26개 수산경영체에서 최근 2년간('19~'20) 투자 후 매출액 35,802억원(13%) 증가, 21개 경영체에서 최근 2년간('19~'20) 투자 후 고용인원 139명(21.2%) 증가되는 성과를 보임
 - (수산펀드 수익성) 특히 올해는 수산펀드 최초로 IDV-IP 수산전문 투자조합이 청산('21.11.24)되며 우수한 수익률(수익배수 162.2%, IRR 8.35%)을 기록하며, 해양수산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가능성을 증명함
 - 수산분야에 90억(5건)을 투자하여 103.39억을 회수함으로써 수익배수 114.9%을 달성하였고, 이 중 수산바이오 기업인 네이처 글루텍은 212%의 수익률 달성
 - (우수 투자사례) 네이처글루텍(수산 바이오), 더파이어츠(수산물유통 플랫폼) 등 우수사례를 보면, 적기에 이뤄진 투자로 우수 인력을 확충하고 물류, 유통 설비 등을 보강한 결과 확장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
 - (펀드 인지도 확산) 투자 성과, 투자 우수사례 등 홍보를 통해 수산모태펀드 인지도 제고 및 농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
 - 언론매체, 전용 SNS 채널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우수 투자사례 확산 등을 통한 수산모태펀드 홍보 노력 지속
- * '21.11월 기준 블로그 누적 조회수 6,504회 및 방문자 수 2,663명, 인스타그램 누적 게시물 88건, 유튜브 구독자 783명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 개선 ·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코로나 장기화에도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보완 필요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등 정책효과가 다소미흡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원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선사, 선박관리회사)의 수요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신규선원 양성 후,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한 선원 일자리 창출
 - * (신규 해기사)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등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 해기사 양성(해양대 979명, 해사고 268명, 수산계열 700명, 오션폴리텍 79명)
 - * (특수선종 취업지원) 산학 협력을 통해 특수선종(LNG, 오일탱커, 컨테이너선 등) 실전교육을 제공하여 수료 후 특수선종 선사취업 연계
 - * (국적부원 양성) 부원 구직 희망 예비선원과 선주 참여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 합격 시 부원 승선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및 장기승선 지원
- (교육인프라 확충) 우수한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기교육 인프라 확충
 - 안전교육 수요를 분산하고, 교육시설의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 설립·운영(2월~)
 - * '21.12.8. 기준 교육횟수 389회, 교육실적 7,908명
 - 예비 해기사들의 실습 역량 강화를 위해 친환경설비와 첨단시설을 갖춘 6,300톤급 규모의 실습선 한나래호* 취항('21.6월), 승선실습 시행
 - * (제원) 선체길이 109.5m, 폭 17.2m (최대속도) 15노트 (정원) 180명
 - **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질소산화물저감장치(SCR) 등 친환경설비와 선박 및 기관 조종 시뮬레이터, 이중연료추진기관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체험형 실습장비 구비
- (해사영어 역량강화) IMO 표준 해사영어교재 개발·보급(e-book, 동영상강좌), 원격학습 기반 마련으로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 * 해사영어교재 교육기관·선사 보급('21.상, 12권) 및 관련 동영상강좌 제작·보급('21.하, 40강좌)

- (승선실습 개선) 승선실습 환경 개선*을 통해 예비해기사의 실습 권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더욱 유능하고 역량있는 해양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상선 실습선을 건조·완료하여 ①해사고 및 오션폴리텍 실습비중 확대 (8월~), ②해사고 승선실습과정을 전면 실습선(연수원) 훈련으로 전환
- (해외일자리 창출) 청년 해기사 대상 해외취업 지원, IMO 표준 해사영어교재 개발·보급(학교, 선사 등), APEC SEN 운영**을 통한 국내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일자리 진출 확대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해기사의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해외취업 지원(8.9.~10.29., 10명)
 - * 교육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국내), 핀란드 아보아마레(국외, MoU 체결)
 - APEC 선원 네트워크의 유치·운영*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선원정책을 선도하고, 우리 선원의 해외취업 확대 도모
 - * 분과별 전문가 위원회 9회, 사전 운영위원회 2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12회 회의 개최**
 - ** '21.11.24 개최된 운영위원회(11.24, 회원국 참석)에서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APEC SEN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APEC 기금 신청 의결 등 9개 안건 의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원 일자리 창출, 교육인프라 확충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선원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백신예약이 어려운 선원의 현장접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선원 교대를 지원
 -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내 물류체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선박의 장기운항, 하선교대 시 격리 등의 문제로 발생한 낮은 백신 접종률을 제고
 - * 국가 필수 전략물자의 해상운송, 국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공·수급을 위하여 선원을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사전 예방접종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 접종 시행('21.3.17)
 - ** (기존) 승선 2개월 전 교대선원(접종소요기간) → (개선)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종+안센 접종
- (선원 교대 지원) 수·출입 물류체계 불안정성 해소 및 국내 외국인 선원 수급 문제 극복을 위하여 국적 교대선원 입국금지 해소('21.8.20) 및 외국인 선원의 비자발급 완화('21.11월)
 - 싱가포르 입국 교대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국내입국 금지('21.7.15), 인도네시아 선원 신규 비자발급 중지('21.8.7) 등 선원의 입·출국 제한에 따른 선원교대 및 선원수급의 문제에 선제적 대응
 - *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지('21.8.7)에 따른 국내 연근해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비자발급 재개('21.10.19.)
- 선원 근로여건 개선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개선 이행점점) 노사정 합동점검반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여 근로환경 개선

- (선내 인권침해예방 네트워크) 각 기관의 인권보호 시책을 주기적으로 확인·공유하여 선내인권 개선의식을 확산(4월, 10월, 12월)
- (특별근로감독) 명절대비 특별근로감독,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점검을 통해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정기 직무교육을 통해 선원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와 인권침해,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지식 함양
-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전문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원양선박 승선 선원에게 비대면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장기운항으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원양 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정신건강 지원) 대면상담, 원양 선원 원격 비대면 상담톡 상담, 선사 대상 직무 스트레스 예방교육 등을 통해 고립된 근로환경에서 가족과 사회와 단절된 선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선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
- 육지와 격리된 선원들에게 전자도서관의 전자도서 대여를 통해 승선 중의 스트레스 완화 및 자기개발 등의 문화복지 증진
- 고립된 해상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항구에 기항해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선원의 후생복지 증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원 교대지원,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민-관 여객선 합동 안전점검으로 여객선 안전공백 해소】

- (여객선 안전 합동점검) 여객선 안전관리기관(해수부, 해양교통공단 등) 합동 여객선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전년대비 4% 감소한 1,102건* 안전조치 이행

* (설연휴) 205, (봄행락철) 239, (하계 휴가철) 249, (추석연휴) 196, (겨울철) 213건

- 연 5회(설·봄 행락철·하계 휴가철·추석·겨울철) 합동점검 실시로 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
- 사전 안전점검으로 사고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상시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공백 해소

【여객선터미널 방역점검 강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용객 불안 감소】

- (방역강화) 고령인구가 많은 도서지역에 코로나 19 확산시 육지 대비 신속대응이 어려워 도서 지역 확산방지가 필수적
- 연안여객터미널 기관장급 현장점검(9회), 담당자 비노출 현장점검(20회) 등 수시로 방역점검 등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코로나19 확산방지 기여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규제혁신으로 종합적 안전관리 실현】

- (24시간 모니터링) 도서에 지능형 CCTV*를 최초로 설치(9.30)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 출항부터 입항(365일, 24시간)까지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여객선 모니터링 관리센터 설치 예정(12.26)으로 종합 안전관리 실현 기대

* 입력받은 비디오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출·입항 지연 및 사고상황 등 돌발 상황 발생시 알람 / '21년 신안, 진도 등에 6대 설치

- (규제혁신) 여객선 안전점검결과를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보고서 선내게시 지침 개정(3.31)으로 상반기 10대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선원대상 교육시행 여부 등 주기적 점검 및 선사직원의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규정 개선(7.20)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운영으로 연안해운 신뢰회복】

- (국민안전감독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운영으로 총 64척, 62건 안전사항 개선(6.15~11.30)
- 교수, 해기사 등 다양한 분야·연령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여객선사-해수부-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의 역할도 수행하며 여객선에 대한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
- * 국민 안전감독관은 권역(서해/서남해/동남해)별 5명씩 30세에서 63세로 다양한 직업·연령층으로 구성

【이용객 불편을 반영한 정책추진으로 품질개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선·발권시 실물신분증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까지 범위 확대,
- * 「안전관리 혁신대책」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사는 발권, 승선시 2회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 17개 언론(kbs 등)에서 신분증 인정범위 개선사항을 우리부 적극행정 사례로 보도(하반기 10대 규제개선과제로 선정)
-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20년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 등 육상교통수준 대비 교통약자 이용 불편 지속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선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교통약자 전용좌석 등을 설치

- (여객선 현대화) 여객선은 낡고 불편하다는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연안해운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선박의 신규건조를 지원
 - 코로나 19 지속으로 선사들의 경영난 가중에 따른 신규건조 수요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5척의 신규 건조 추진
 - 현대화사업으로 선령 20년 초과 노후여객선 비율이 17%로 하락('15년, 29%)하였고, 국내 건조를 통해 중소조선소 및 지역일자리 983명* 창출
- * 1,329억원(6척 국내조선소 발주액)×0.74명/억원(조선업 고용유발계수)
- (고객만족도 평가) 2년 주기로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를 실시하여 선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 우수선사는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선사는 정부 정책 및 재정지원 불이익 등 상·벌 체계 유지

【선사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경영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융자금 상환유예)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사들이 안전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융자금(60.4억원) 상환 일시적 유예 추진
- * 연안선박을 신규 건조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시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 금리 중 일부(2%~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추진노력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추진노력 및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여객선 현대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해양사고 저감】

- (성과지표 초과달성) '21년 달성 실적은 33.7로('21년 기준), '21년 당초 목표치인 41.0 대비 118% 초과 달성
- '21년 해양사고는 2,662건 발생하여 전년(3,156건) 대비 494건(15.7%) 감소
- '21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19명 발생하여 전년(126명) 대비 7명(5.6%) 감소
-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수립·이행 강화) '21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선종별·계절별·유형별**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 6대 전략, 31개 이행과제 추진 /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등 참여
- ** (선종별) 국제여객선·카페리화물선·일반화물선(화물창 개방·과적선박) 안전관리계획, (계절별) 봄철·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유형별) 선내안전사고 인명피해 저감 대책 및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TF 구성·운영
- 각종 안전대책 수립단계에서 이해관계자, 해양안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현장중심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높은 정책효과 발생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9개 광역시·도 및 10개 유관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PA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점검회의(장관님 주재) 개최 등을 통해 대책의 현장이행력 제고 등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사분야 최초 자격증제도 도입】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도입) 선장·안전관리자·선박소유자의 안전관련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신설*
- * 상임위 법안소위('21.4.9~11월), 공청회('21.6월),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21.12월)

- (책임성 강화)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서 선박소유자에게 안전조치(선박수리 등) 요구권한을 부여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

* (요구사항 미조치 시) 장관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벌칙 부여(1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

- (전문성 강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 △선박안전관리사 수행업무, △역량검증 방식(필기시험 등), △자격시험 시행·운영 등

【획기적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민·관·학·연 협업체계 구축】

- (협업체계 구축) 인명피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부서 등 민·관·학·연 TF 구성(6.18)

- (전문가 의견수렴) 선박설비(충돌 예방), 선원교육(부원 확대), 사고 통계(다발 위주), 대책의 실효성(단속강화, 인식전환 등) 등 분야별 의견 제시

- (운영체계 확립) 사고의 유형에 따라 TF 구성을 세분화하여 근본 원인·제거방안 집중논의, 분과별 현장확인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대책 이행력 제고) 인명피해 빈발 양망기* 끼임, 해상추락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이행실태 확인 및 종사자 의견청취(10.28)

* 어선(연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등)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

- (브랜드과제 개발) 현장점검 결과 검토 등을 통한 브랜드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 논의를 위한 'TF 전문가 회의' 개최(11.10)

- ①나홀로선박* 해상추락사고 예방, ②양망기 끼임사고 예방, ③어선 종사자 위험불감증 극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브랜드과제(3건) 발굴

* 승선원 2인 이하의 일반 소형선박(총 313척: 1인 67척, 2인 246척)

- (시범사업) 브랜드과제인 나홀로선박 대상 「구명조끼 상시착용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결정(11.25)

- 일반선박에서의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승선원 2인 이하 선박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시범사업 시행

* 기간/예산: '21.12 ~ '22.1 / 13백만원(구명조끼 100벌 x 13만원)

-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안강망·자망·통발 등 연근해어선 1,180척 대상 비상정지장치 보급사업 추진 중(~'21.12, 13억원)

【해양안전활동을 통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

- 관련 재정사업(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구축·운영, 해양안전체험관(안산) 및 국민해양안전관(진도) 건립지원 사업으로 직·간접적인 일자리* 92개('21.12월 기준) 창출
 - * 직접일자리 20개(체험시설 강사 4명 × 5개소), 간접일자리 72개(건립예산 집행 90억원 ÷ 건물건설·보수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0.8억원/1명)
- (신규 일자리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곤란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채용된 인력을 통해
 - * (지원대상/내용) 만 19~34세 청년 / 일자리(122명x6개월, 14.8억 원) 제공
- 해양안전 관련문서*를 전산화·체계화하여 해양사고 예방 빅데이터 구축 및 효과적인 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21.3~12)
- (고용위기대응 기여)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신규 일자리(143명*) 창출 및 공공기관 정규직 취업연계 기여
 - * 총 배정인원인 122명 중 중도퇴사 등으로 추가 채용 추진하여 최종 143명 채용
- 상대적으로 구직 기회가 적은 소규모 지역(사천·고흥·완도 등)의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 사업수행 인원에 대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채용 시 근무우수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연계 기반 제공
 - * 공단 근무경력으로 인정, 서류전형에서 3%의 가산점을 부여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 ('구명조끼 海주세요'* 캠페인) 해수욕장 등 해양이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실천 집중홍보 전개
 - (비대면 콘텐츠) 개그우먼 김민경이 참여하는 '구명조끼 海주세요'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캠페인 전개
 - * 해양안전 실천서약이벤트(참여자 총 2,025명, 댓글 2,393회)등을 통해 캠페인 참여 독려
- (매체광고) 인지도 높은 TV(도시어부, 행복한 아침), 라디오(MBC여성시대)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익광고 및 버스광고(서울, 부산) 등 병행

- (대국민 참여 강화) 국민이 쉽게 해양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2만명)·해양체험시설(6.5천명, 워터파크 등 6개소) 운영

-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해 해양안전콘텐츠 공모전, 스스로 점검캠페인*, 국민참여형 해양안전퀴즈 이벤트** 등 추진

* 선박, 시설물 등의 안전취약점 발굴·개선 사례 포상(낚은 구명설비→구명설비 신환 등)

** 구명조끼 착용법 등 교육자료를 마이크로 영상으로 제작, SNS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유 참여(3.8천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우수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사분야 최초 자격증제도 도입 등 정책 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어선 안전사고 : 예방】

○ 기상특보 시 조업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 (조업제한)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뿐 아니라 조업도 제한*하고,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는 선장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현행)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 출항 제한 → (개정) 현행+조업제한 추가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9) 및 국회 제출(10.21)

- (구명조끼 착용)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도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선장에 계도 부과**

* (현행) 기상특보 발효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현행+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 추가

** (현행)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개정) 현행+어선의 선장 추가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9) 및 국회 제출(10.21)

- (위치관리 강화) 대화퇴 등 원거리(100km↑) 조업어선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D-MF/HF)를 근해어선(통발·연승·채낚기 등)에 보급*

* 총 2,100여척 : ('20) 102척 → ('21) 700척 → ('22) 700척 → ('23) 600척

○ 화재소화장치 등 어선설비 보급 확대

- (화재감지) 화재경보기와 연계, 소화약제가 개선된 기관실용 소화장치 기술개발·성능검증(~'20.11월)을 완료하고, 설치 의무화 추진

* 「어선설비기준」 개정 완료('21.9.28) →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2.9.28)

- (화재경보장치) 연근해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무상설치를 완료('20.12월, 15,094척)하였으며, 10톤 미만 어선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확대(10.26)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양망기 끼임 등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많은 연근해자망·통발을 대상으로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우선 보급(~'21.12, 1,180척)
-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개발 완료('21.3월), 긴급상황 발생시 선내(작업현장, 갑판, 조타실 등) 어디서든 휴대용 버튼(2~4개)을 이용하여 즉시 양망기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어선전복, 추락 등 사고 시 개별 선원이 조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해상검증 등* 추진
- * 실제 조업 어선(10척, 100명)을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의 기능과 성능 현장 검증('22)
- ** 전파진흥원(KCA)에서 개발한 "SOS왓치" 검증을 위한 대상어선(전국 1,000척) 선정 협조

【어선 안전사고 : 대비·대응】

○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교육강화) 실제 조업·항행에 관여하는 어선원(선장·기관장 등)은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선주 및 코로나 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
- *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무선통신(VHF-DSC) 작동요령, 충돌예방 항법 등
-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21 ~ '25, 20억원) / 서버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등
- ***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대면교육을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교육 재개(11월~)
- (안전점검)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하는 시기(봄철·겨울철)를 대비, 기관·전기설비 등 화재취약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 대상(시·도별 연근해어선 100척 이상) / 점검반(해수부,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 (실천운동) 어업인 안전의식 경각심 고취를 위해 어선의 안전관리 상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실천운동 캠페인 지속 실시(연중)
- * (기간) 매월 1회 이상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 / (대상) 연근해 어업인 / (참석) 수협, 관내 어업인 등 / (점검) 기관상태, 무선전화(VHF) ON 실천,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

○ 어선 안전조업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보 공유

- (안전조업관리시스템* 운영) 실시간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고시 신속한 조난구조와 대응 체계 등 체계적 어선 안전관리
- * FIS(Fishing boat safety management system) : 어선의 위치, 조업관리, 조난신호 전파, 위험해역·사고다발해역 주변 접근 시 경보 알림, 기상정보 등

- (위치확인) 기상특보 예보(발효 24시간 전) 시 출항이 제한된 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100km ↑)에서 순차적 입항 유도 등 실시간 관리 강화
- * (현행) 문자 및 방송 안내 → (개선) 현행+1:1 안전관리 강화(수협 안전국, 어업관리단)
- (기상정보 확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등 자료 분석을 통한 기상특보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어업인에게 정보 제공
- * 기상청·중앙해양심판원에서 발표하는 계절별 해상 기상분석 정보를 '조업정보알리미앱'에 홍보

【어선 안전사고 : 수습】

- (상황인지) 사고의 규모, 승선원 인원 등 인명피해 상황을 인지·파악하고, 위기수준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를 단계적 발령하고 대응·수습
- (중수본 가동·수습) 신속한 사고수습과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해 수산실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현장 수습과전관 조치)
 - * 본부장(해수부 장관) → 상황실장(수산실장) → 총괄반(어업국)·상황반(수산국)·복구대책반(양식국) 등
- (상황점검 회의) 사고 관련 기관별 사고수습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구조·수색 등 지원 상황이 현장에서 원활히 조치되도록 당부
- (현장 방문) 장·차관님, 어선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승선원 가족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색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당부
- (예방대책 수립·시행) 어선사고 원인 중심으로 예방대책 수립·시행
 - * '21.2.19(전복사고) : 기상특보 시 어선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 ** '21.3.23(계류선박 화재사고) : 화재사고 관련 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시행
 - *** '21.6.6(양망기 끼임사고) : 양망기 끼임 사고 등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 **** '21.10.20(전복사고) : 어선 위치관리체계 강화방안 수립·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 · 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개선 ·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부진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부진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부진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화재소화장치,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등 어선설비 보급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바다내비게이션 제공) 세계 최초로 ①바닷길 안내 및 ②교통·기상정보 등을 제공, ③충돌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 특히, 항해중인 선박(단말기 약 2,500척, 앱 약 3만건)에 대해 일일 1억건 이상의 충돌, 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실시간 항해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대폭 감소

* 해양사고 통계 ('20.10월 2,641건 → '21.10월 2,229건, 16%↓/ 잠정)

- (통신 사각지대 해소) 전국 연안에 해상무선 통신망(LTE-M) 구축을 통해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LTE급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상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육해상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조성

* LTE-M 구축으로 그 동안 정보통신의 사각지대이던 전국 연안에 남한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였음

- (정보공유·이용 활성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해경, 수협 등 유관 기관에 제공하여 기관 고유 업무(사고대응·인명구조, 선박안전관리 등)에 활용

* 해양정보를 연구기관, 사업체와 공유하여 연구개발 사업 및 민간 비즈니스 창출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첨단해양교통정책 추진 위한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1~'25) 및 '21년도 시행계획 수립('21.4.28)으로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LTE-M의 이용 활성화 및 지속적인 고도화 등 정책기반을 조성

- (국제화 주도)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협력 MOU 체결 통해 국제공동시험·인증 기반 조성 및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기준 개발 등 해양디지털기술 국제표준화 주도

* 해양디지털 콘퍼런스(매년)

- (MCC 사무국 국내 유치) '국제해양디지털정보 공유플랫폼'(MCP*) 및 컨소시엄(MCC)을 주도적으로 창설·운영하여 해양디지털 시장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형성될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

* **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 전 세계에서 해양디지털 정보를 24시간 끊임없이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e-Nav 서비스도 이를 기반으로 운영)

** 국제해양디지털 표준관리협약체 사무국 유치('21.3.30)

- (통신망 이용 활성화) 범부처·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다양한 해양디지털서비스에 활용

* 통합공공망 용역 등을 통한 LTE-M 연계·활용 방안 마련 및 해군 함정의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등 추진('22.1~)

- (국가 해양안전·해상안보 강화 협력체계 구축) 바다 내비 선박 정보를 활용한 해양사고 대응, 밀입국·해상대테러 강화를 위해 웹포털 공유 및 시스템 연계 등에 관한 우리부·軍·국정원간 협약 체결

* 해양안전·해상안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체결('21.12, 우리부, 국정원, 국방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및 LTE-M의 이용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파교란 대응) GPS 전파교란에도 끊김 없는 지상파 항법시스템 도입 및 시범서비스 제공('21. 6.)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완료
- (피해 최소화) GPS 중단 시 지상파항법시스템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손실의 56% 감소 가능(GPS 중단 시 피해액 1조 8,688억 원으로 추계)
 - * (피해 산출근거) 지상파항법시스템 시각동기 분야 활용에 관한 경제성분석('20.9)
- (역대 최대 우주산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 예타 통과('21.6) 및 국가우주위원회(총리 주재)의 추진계획 의결('21. 11)
- (4차산업 발전 가속) 정확도 부족, 신호장애 등으로 인해 4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PNT 품질보장·초정밀 서비스(cm급)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상파 항법시스템 도입 및 시범서비스 지속 제공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지상파 항법시스템 도입 및 시범서비스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정부 합동훈련을 통한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상시훈련) 해양오염 및 조수에 의한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우리부·지자체·해양경찰청 등 범정부훈련 실시로 기관 간 재난대응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정립(7.2.)

* 상시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핫라인 구축·운영(해경 상황실, 해군상황실 등)

- (안전한국훈련) 우리부 주관 재난유형 중 여객선·화물선 간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해양오염 피해를 가정한 대응 훈련으로 우리부·국방부, 외교부, 해경, 소방청 등 범정부훈련을 실시하여 기관 간 재난대응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정립(11.17)

- (상황전파훈련) 우리부 종합상황실 및 소속·유관기관 합동 설·추적연휴 기간 및 불시 상황전파훈련*을 통해 상황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사고발생 → 사고접수 → 상황전파 및 신속한 상황파악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실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

○ 사고예방 및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

-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으로 태풍피해, 한파 등 계절적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로 대비태세 강화
-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추진으로, 권역별 항행장애물 제거 협업체계 구축, 2차사고 예방 선제적 안전활동* 전개로 부유물 감김사고 및 해양사고가 각각 1.5%, 최대 8.8% 감소

- * ('20) 예방활동 267회 실시, 항행장애물 215건 수거, ('21) 예방활동 252회 실시, 항행장애물 304건 수거

○ 국민이 해양수산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많은 국민이 이용,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대상*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점검 실시 및 결과 공개로 안전한 해양수산시설 이용환경 조성

* 점검대상 선정 1,175개소 → 실제 점검 1,240개소 실시(105.6% 초과 실시)

- 점검시 식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조치관리 실시

○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가치 제고

- 재난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 우려가 높은 재난취약계층(어린이)*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

* 어린이의 안전사고율은 전체 안전사고의 34%, 장애인의 안전사고율은 비장애인 대비 10배,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함

○ 해양수산 재난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강화

- 민·관·학 구성 전문가협의체 운영으로 해양수산분야와 재난정책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해양수산 재난관리 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참여 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 지속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범정부 합동훈련, 사고예방 및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고위험해역 설정 및 진입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 적용을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선원까지 확대
 -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 등이 실효적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해적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피해를 예방
- * '16년 이후 우리선박의 해적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서아프리카 현지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국민이 피랍되는 사건은 발생
- 우리부 포함 10개 국가기관이 참석하는 해적피해예방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적 해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적피해 최소화
 - '서아프리카 해적피해예방 강화대책'(관계기관 합동) 수립·시행(1.29)
 - 제4차 해적피해예방협의회를 개최, 위험해역 변경, 고위험해역 지정(12.16.)
 - 우리선박의 안전한 호송 및 해적공격 등 비상 시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함정 내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운영지원
- * 해적 위험해역 통항선박 DB 업데이트 및 통항보고 등 정보연계(연중)
- 국적선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
 - 전 세계 해적정보 및 해적동향 수집·분석 전파
- * ('21년) 전 세계 해적정보 160건, 청해부대 호송작전 정보 12건, 동향분석 4건 등
-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시 청해부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정보교류 및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법 시행이후 정책수요자(선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설명회, 워크숍 등)를 통해 해적공격에 대한 대응 민감성, 자체 해적대응력 강화
- 서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중인 우리국민의 해적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우리국민 비상연락망 구축
- 코로나19로 승인을 위한 현지점검 불가에 따른 해상특수경비 서비스 POOL확대 및 연속적 제공
- 해적위험해역에서의 우리선박에 대한 안전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상특수경비업 원격승인제도 시행
- * '20년 5월 원격승인제도 시행 이후 3건 심사완료('21년 2회)하였으며, 해상특수 경비업체 허가에 필요한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종합 평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부합도 및 정책효과의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임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다소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적피해 최소화 등 정책효과가 다소미흡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국가 연안침식관리체계의 전면적 혁신】

- 기후변화, 연안침식 사회문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예방·대응 등 연안 침식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국가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21.12)
- 연안관측망 확충, 정밀조사 실시, 침식관리체계 구축, 정비사업 개선 등 6대 전략, 13개 과제 수립
- * 연안침식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해양환경의 한분야로 인식하고, 재해예방·복구 위주의 체계 ⇨ 연안침식관리체계로 전환
- 환경부, 행안부, 해양보전과, 해양공간정책과 등 타부처·타부서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전부처 차원의 계획 수립

【재해취약성 차원의 연안침식대응 체계 도입】

- 사회적 취약성 등 재해위험측면에서의 연안관리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개정('21.2), 연안재해위험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 연안재해 위험평가 활용방안 및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 연안재해 위험평가 활용기준, 저감대책 수립 시기, 범위, 상세사항 등 제시
- 재해위험정도 등을 고려한 저감대책 수립 후보지역도 도출('21.12)

【연안정비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지역 조성】

- (사업 추진) '21년 1,052억원(국비 839, 지방비 213)을 투입하여 73개 연안(국가 22, 지방 51)에 대해 연안정비사업 실시
- * 21년 사후평가시 사업 전후 주민만족도(10점) 설문결과: ('17) 5.6점 → ('19) 6.2점 → ('21) 6.8점
- 포항 송도 등 17개소를 완공(국가 2, 지방 15)하였으며, 22개소 신규 착공

- (예산 확대) '21년 대비 16.2%(170억원) 증액된 1,222억원의 '22년 연안정비사업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 '22년 국가시행 신규사업도 역대 최대 수준인 6개 반영('21 3개)
- (실태 조사) 침식실태조사지구를 전년 대비 44% 확대('20. 250개소 → '21. 360개소)하였으며, 정밀조사* 예산도 최초로 확보('22 15억원)
- * '99년 연안관리법 제정시 정밀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간 미 실시

【침식관리구역 신규 지정 및 연안정비사업 사후관리 개선】

-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소통을 통해 5년만에 연안침식관리구역 신규 지정(1개소*)
-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일원 연안(약 13km²)
- 심각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지정('21.12)하고, 구조물 설치제한 등 특별관리를 통해 연안침식 사전예방
- 연안정비사업 사후관리 내실화 및 연안정비사업 효과평가* 내실화를 위한 지침 개정안 마련('21.12)
- * 연안정비사업 실시 후 효과평가 대상 및 기준, 방법 명확화 및 개선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

- (장비개발) 효율적 침식현황 파악을 위해 연안해역 3차원 정보 획득이 가능한 국산 항공수심측량장비 실증*을 추진하고,
- * 수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TPU(불확실도) 적용 등 성능개선 및 운영컴퓨터 국산화 완료 등
- 연안 퇴적모래를 침식지역으로 이동시켜 침식과 퇴적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천해용 우회양빈 시스템* 현장시험('21.10) 및 성능평가 인증
- * 궁촌해변에서 현장테스트를 통한 KOMSA 선박검사 및 성능평가 실시
- (기술개발) 기후변화와 인공구조물에 의한 연안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연안 지형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21.12)하고,
- 모델 체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장 실증(4개소), 연안침식 저감공법 배치설계 가이드라인 마련('21.12)

- (기획연구) 순환·적응형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 기획연구 착수(‘21.9~)
- 정확한 침식예측에 기반한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 도출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안침식대응 체계 지속 확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보통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연안침식 국가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안정비 사업 추진 등 정책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안 취약요소 개선 등 항만 보안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항만보안 관리 능력 제고
 - 경비수탁업체 지정요건 상향(자본금 5→10억), 항만시설보안감독관* 지정근거 마련으로 항만시설 보안업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 (시행규칙 개정, '21.2)
 - * 그간 항만시설 보안감독 업무주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지도감독이 다소 비활성화 → 보안감독관제 신설 및 감독관 지정('21년 총 9명)으로 업무 체계화 및 관리감독 강화
 - 항만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을 통해 국제항해여객선 등에 대한 보안검색 품질 향상 및 국내 보안검색장비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하위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세부 인증절차 등) 제정('21.1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보안사고 증가에 따라 「항만공사 항만보안 관리강화 TF」를 운영하여 보안관리 미비점 개선 추진
 - 출입차량 보안검색 등 항만별로 상이한 업무처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항만 보인인력 처우개선, 외국인선원 밀입국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 * 1차 TF 개최('21.11) → '컨'터미널 출입관리 개선 실무협의('21.12) → 2차 및 후속 TF 회의 개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22.下 예정)

- 외국인선원 밀입국 등 항만보안 위해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보안사고 발생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입항관리 강화* 조치
 - * (무단이탈) 입항금지(6개월 이상), (무단상륙) 조건부 입항허가 / '21년 총 12척 지정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테러 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
 - * 부산항 등 총 21개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 12개소
- 보안사고 위험이 높은 민영부두 등의 CCTV 영상을 지방청(항만공사) 종합상황실에 연계·관제하여 항만 보안사고 감지·대응체계를 강화
 - * ('19) 인천항 등 3개항 → ('20) 울산항 등 2개항 → ('21) 포항항 등 5개항 → ('22) 부산항
- 역무선부두*, 신규 종합상황실 등 관리를 위해 보안인력(청원경찰) 총 56명을 증원하여 항만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
 - * 예·도선, 항만작업선 등이 접안하는 부두로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른 보안구역으로 미관리되어 밀입국 등 보안사고에 취약 → 보안인력 확보·배치('22~)로 보안관리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소통·확산노력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소통·확산노력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부진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부진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부진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항만보안 관리 능력 제고, 보안관리 미비점 개선 추진 등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세계 최초) 바다에 빠지면 자동으로 위치발신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개발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실용화 성공
- (특허출원) 해상인명구조용 무선경보 신호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인명구조 경보시스템(출원번호 10-2020-0111379) 출원 완료
- (상용화) 당초 연구개발(R&D) 참여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민간 보급에 어려움이 생겼으나 기술이전 추가공고 후 제품 보급 성공
 - * 사업권 회수(6.25) → 기술이전 공고(7.5~16) → 설명회(7.19) → 사업자 선정(7.26)
- (안전 강화) 해양안전 수요 증가, 구조사례 홍보(입소문·공모전·UCC 등)로 인해 해로드앱 설치 증가→구조사례 증가 순으로 해양안전 선순환 정착
 - (누적 앱 다운로드) 전년 대비 21% 증가
 - * '18년 229천 → '19년 288천 → '20년 373천 → '21년(11월 기준) 451천 건
 - (누적 구조 인원) 전년 대비 32.3% 증가
 - * '18년 375 → '19년 677 → '20년 1,105 → '21년(11월 기준) 1,462명
- (활기찬 어촌) 지역균형발전 해소를 위해 등대여행이 어촌경제에 활력을 부여하여 지역소멸 대안으로 가능성 확인
- (경제효과) 올해 1,403,047명(완주자 550명 포함)이 등대여행에 참여하여 어촌지역경제에 약 2,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 추산

* ('21년 등대여행통계) 등대여권 여행객 10,081명('21. 11월 기준), 유인등대 방문객 1,113,700명('21. 9월 기준)

** 1인 1회 등대여행 시 평균 지출액은 156,823원 추산(장관 보고, '20. 6. 30.)

- (관광산업 대변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여행콘텐츠 다양성, 디지털화를 도모하여 국내·소규모 여행 증가에 적극 대응

* 코로나19 이후 해외 보다는 국내여행이 증가하며 청정, 힐링, 일상, 소규모 여행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메킨지, EC21, '20.3)

○ (Boom-Up) 해양사고 시 해로드 앱을 통해 구조되는 전 과정이 유튜브로 소개되며 서비스 문의 증가 등 국민과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서비스 개선) 해상환경 변화와 신규 수요자(해루질) 발생으로 인해 해로드앱에 대한 신규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

* 소형선박 좌초 방지를 위한 수중방파제 접근 알림 기능 추가('21.11.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 · 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 ·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로드 세이버' 개발, 등대여행을 통한 어촌경제 활력제고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MO 대표부) IMO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인 대표부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기술***의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로 기술력 차이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친환경선박) 수소, 암모니아 등 추진설비, 친환경 연료, 친환경 설비, (e-Navigation) 해상통신, 육해상간 정보교환, 안전정보 관리, 항해통신장비 등, (자율운항선박) 선박자동화 기술, 자율항해기술, 원격조종.관리기술 등

- EU, 일본 등에 뒤쳐져 왔던 후발산업 주자 지위를 넘어 기술로 시장을 개척·선점하는 명실상부한 해양강국 입지구축

※ IMO 대표부 설립 후 처음 진행된 제32차 총회 이사국 선거(12.10)에서 A그룹 최초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이사국 선출

- (해사주간·모의 IMO총회) 해운·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한국해사주간*('21.10) 및 대학생 등 청년의 국제해사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모의 IMO 총회('21.11) 개최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회의소(ICS), 세계해사대학(WMU), 덴마크, 영국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원의 인권, 해사분야 친환경 동향 및 전망, 디지털화 주제발표논의

- (IMO 정보제공) 코로나19 관련 IMO 가이드라인, 주요 회원국의 선원교대·항만운영 등 현황·조치사항을 적시에 제공*(주 1회 이상) 하여, 해운분야 종사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산업계의 신속한 대응 지원

* IMO 및 국제해사분야 주간 동향(국제해사 관련 기사 스크랩) 뉴스레터 발송·게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IMO협력사업이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IMO협력사업이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다소미흡함 ○ (정책이행 노력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을 완수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등 정책 소통·확산 노력과 보도자료, 우리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이 있는 난이도가 미흡함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당초 목표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한국해사주간, 모의 IMO 총회 등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3-⑤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안전항만 강화 (항만기술안전과)	○ 정책소통·확산노력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한국형 기술기준 전면 개정 추진방안 마련('22.12월) ○ 제2차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계획 확정 마련('22.12월)
I-4-③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개발사업 추진 (항만투자협력과)	○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항만배후단지 관심기업 간담회 추진('22.7월) ○ 항만 민자사업 관리·운영 개선방안 마련('22.5월)
II-1-③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어촌양식정책과)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자문 회의('22.6월) ○ 낚치 물가급등 등 수급문제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시행('22.6월)
II-3-②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어촌어항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보완·개선 추진('22.6월) ○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 개선 보완방안 마련('22.6월)
III-2-① 오염해역 수질개선 및 해양오염사고 관리 선진화 (해양환경정책과)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보완 추진('22.6월) ○ 방사능 오염수 감시 강화 및 대형 방제선 투입 등 통해 정책효과 개선 노력 추진('22.12월)
IV-2-②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원양산업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재검토('22.6월) ○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22.12월)
IV-2-④ 주요 통상 협상 시 수산분야 전략적 대응 (통상무역협력과)	○ 정책소통·확산노력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 소통 확산방안 발굴·확대('22.12월) ○ 성과지표 개선·보완('22.6월)
V-1-①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강화 (해양레저관광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콘텐츠와 실행력 구분 필요	○ 성과관리과제의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지표 재수립 추진('22.6월) ○ 해양관광 트렌드변화에 따른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등 정책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22.12월)
V-1-② 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관광 핵심 新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과)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정책수요자와 적극적인 정책 소통·확산 방안 제고('22.12월) ○ 마리나, 해양치유 분야 핵심정책의 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22.12월)
VI-1-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연안해운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여객선 안전 제고방안 추가모색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 보완 및 변경('22.6월) ○ 여객선 안전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추진('22.5월)
VI-1-③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어선안전정책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성과목표 상향 조정('22.6월)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등 정책효과 향상방안 발굴('22.6월)
VI-2-④ 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내실화 (항만운영과)	○ 정책소통·확산노력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항만공사 항만보안 관리강화 TF 운영 등 이해관계자 소통·정책개선 협의('22.12) ○ 항만보안 강화 종합대책 수립('22.10)을 통한 보안사고 제로화 추진
VI-3-① 항로표지의 사회적 가치 확대 (항로표지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해로드 앱 운영의 성과지표를 국민 체감 지표로 조정('22.6월) ○ 해로드 앱 기능개선 등을 통해 안전 및 등대문화 체험 기회 확대('22.12월)
VI-3-② 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 확대 (해사안전정책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IMO협력사업이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22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성과지표 등 설정 추진('22.6월) ○ 국민편익 증진 여부를 고려하여 '22년 IMO 협력사업 추진('22.12월)

[붙임] 2021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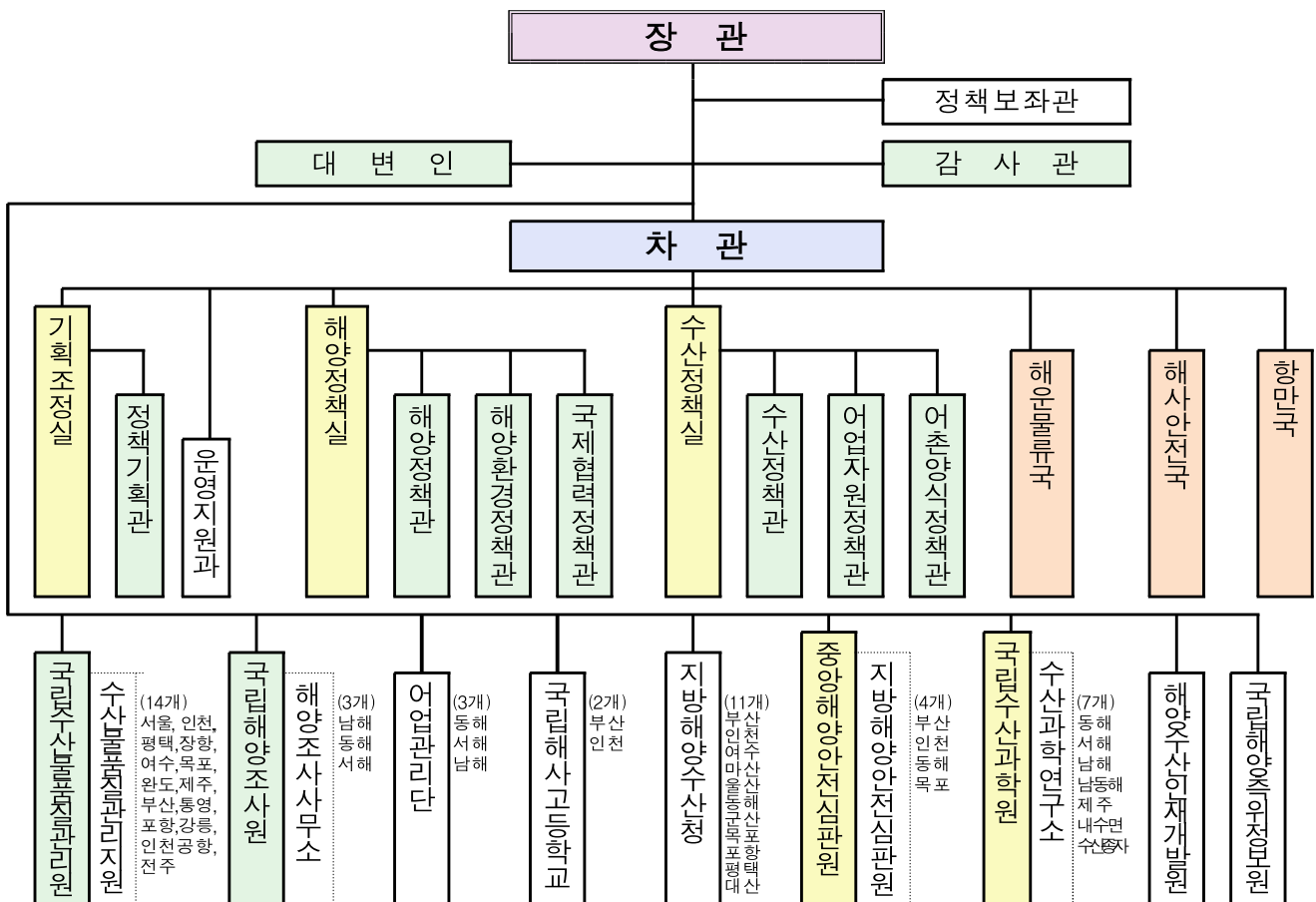
- ◆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관장

□ 핵심기능

-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
- ◆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

□ 조직도

-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 (48과 5팀)
- ◆ 소속기관 : 68개 (1차 22개, 2차 40개, 3차 6개)
-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관리·보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비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1. 세계 5위 수준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한다. 2. 국제항만·물류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 3.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물류중심 항만을 구축한다. 4. 항만지역에 민간투자를 다양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II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실현하고, 살기좋은 어촌을 조성한다.	1.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고품질 양식수산물을 생산한다. 2. 질 좋은 수산물 유통·가공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3.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로 귀어귀촌을 확대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III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한다.	1. 국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한다. 2. 해양수질·생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이용을 실현한다.
IV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한다.	1.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2. 국제협력 및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해양 수산자원을 개발한다.
V	해양수산 신산업을 본격 상용화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한다.	1.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 레저 수요를 창출한다. 2. 해양신산업 상용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3.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VI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한다.	1. 안전관리여건 개선으로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한다. 2. 첨단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양안전을 수호한다. 3.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제 해사안전분야 영향력을 확대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I.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1

원양 선복량(만TEU)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20ft(6.9.6cm) 표준 컨테이너 박스 1개를 1TEU로 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능력을 나타냄
- 조사기관 : 전문 조사기관(Alphaliner社)
- 조사대상 :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미주, 유럽 등, 동남아 등 연근해 제외)
- 조사방법 : Alphaliner社 선사별 선복량 확인
- 측정산식 :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합

□ '21년 측정결과

- 해운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한진사태 이후 국적 원양선사의 선복량 증가 추세
 - HMM의 초대형 '컨'선(2.4만TEU급 12척, 1.6만TEU급 8척) 12척 인도 완료('20.4~'21.6), 1.3만TEU급 컨테이너선 12척 추가 발주('21.6) 등에 따라 선복량 105만TEU(신조 발주 포함) 달성

구 분	한진 사태 전	한진 사태 직후		국정과제 추진 후			
				'18	'19	'20	'21
원양 컨 선복량	105만TEU (16.8)	46만TEU (16.12)	⇒	49만TEU	51만TEU	78만TEU	105만TEU

* 성과지표 목표 : ('18) 38만TEU → ('19) 50만TEU → ('20) 75만TEU → ('21) 95만TEU

□ 성과분석

-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해운동맹 개시, 정책금융을 통한 선복량 확대 등 해운시장에서의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 (新 얼라이언스)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 가입('20.4~)으로 서비스 운항노선 및 수익성 확대
- (원양선사 경영정상화) 초대형선 투입을 통한 원가구조 개선, 화물수송량 증가 등의 효과로 '20년에 10년 만에 흑자전환
- 해운 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지배 선대 등 주요 정량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

구 분	한진 사태 전	한진 사태 후	해운재건 중('21, 잠정)
해운 매출액(조원)	39('15)	29('16)	40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TEU)	105만('16.8) (한진 63만, 현대 42만)	46만('16.12) (현대 46만)	105만 (HMM 99만, SM 6만)
지배선대(DWT)	8,586만('16)	7,994만('17)	9,338만

- '20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물류대란에 대응한 임시선박 투입 등 적극적인 물류지원으로 수출 호조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뒷받침
- * '20.8월 이후 주요항로에 임시선박 86척 투입 20만TEU 운송 / 중기전용 선박 1,300TEU/항차 배정
- 초대형선박 투입 등을 통해 주요 수출항로인 미주·유럽항로의 국적선사 점유율이 각 8.4%, 7.2%로 '16년말 대비 2배 이상 증가

< 주요 노선의 국적선사 점유율(출처: Alphaliner, 주간공급량 기준) >

구분	'16.8(한진사태 전)	'16.12(한진사태 후)	'21.8
미주노선	11.4%	3.9%	8.4%
유럽노선	8.8%	2.6%	7.2%

□ 향후 추진계획

- 해진공 중심의 해운업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26년까지 원양선복량 120만 TEU 목표
-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 선박 투자자 세제혜택 신설, 정책 금융 지원프로그램(산은·수은·캠코·해진공 공동, 15억불) 지원 추진

2

수산물 수출액(억불)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수산물 수출액 확대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통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
- 조사기관 : 관세청
- 조사대상 : 당해연도 수산물 수출실적
- 조사방법 : 수산물 수출 통계자료 요청(관세청)
- 측정산식 : 수산물 수출 통계

□ '21년 측정결과

○ '21년 수산물 수출실적 28.2억불 달성

- 코로나19 이후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 비대면 판로 확보 및 물류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 수산물 수출(억불) : '17) 23.3→'18) 23.8→'19) 25.1→'20) 23.1→'20) 28.2(전년대비 22.4%↑)

□ 성과분석

○ 온라인 중심의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디지털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 수산물 수출 회복을 위한 '21년 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 수립·추진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경제중대본 안건 상정('21.3.3)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e커머스플랫폼에 한국수산식품 판매 전용 K-SEAFOOD(5개관)을 개설, 중소기업체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판로 확보

-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을 확충하여 △수시 상담 체계 구축, △온라인 박람회 정례화로 우리 중소기업의 비대면 무역거래를 알선
-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화물 수요에 대응하여 김·어묵 등 추가 수출 성과 도출
 - * 民(HMM, aT)+官(해수부, 농식품부) / 수산식품 월65TEU 우선 배정
 - *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분야 - 최우수상/장관 표창 수상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산업법'('21.2) 및 '김산업법'('21.12) 등 신규 법률 본격 시행
- 지역중심의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맞춤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수산식품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 추진
 - *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조사 통과('21.11) 및 '22년 신규 예산 21억원 (설계비) 확보, 전남권 클러스터 기본설계 완료('21.10)
- 가정간편식품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산식품 가공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중소 수산식품기업 등 민간기업에 핵심기술 보급
 - * 간편식 생선강정·전복 버터구이 제조기술 등 15건 민간기업 기술이전 협약('21.10)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 추진
- 「수산식품산업법」, 「김산업법」 본격 시행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추진
-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착공,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3

연근해어업 생산량(만톤)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생중량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대상 : 일반해면어업
- 조사방법 : 표본 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
- 측정산식 : 조사직원이 표본어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회수 및 전국 수협 위탁판매량 활용

□ '21년 측정결과

- 2021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95만톤 이상 예상(잠정)
 - ('16) 90.8만톤 → ('17) 92.7 → ('18) 101.2 → ('19) 91.4 → ('20) 93.2

□ 성과분석

〈 정책여건 〉

- (자원 감소) 수산자원 어획량은 '19년 감소(101만톤→91) 이후 회복 추세*이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55개 어종 중 16종의 자원이 감소

* 연근해 어획량(만톤) : ('18) 101 → ('19) 91 → ('20) 93 → ('21^e) 95 이상

- (정책전환 지연) TAC 기반 자원관리로 정책 전환 중이나, 참여자 반발, 어구·어법 허가제도와 부정합성* 등으로 동력 약화 우려

* 어종 고려가 없는 현행 허가·규제 아래, TAC 미참여 어선도 TAC 관리어종을 자유롭게 어획 가능하여 TAC 어획쿼터의 신뢰도와 참여 유인 저하

- (불법어업 증가)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증가*하는 등 국·내외 어선들의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역량 확충 필요

* NLL 일일 최대 조업척수 : ('17) 198척 → ('18) 74 → ('19) 93 → ('20) 131 → ('21) 238

〈 추진실적 〉

-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TAC 직권 설정 근거 마련('20.3), TAC 확대*, 「수산업법」 전부개정('21.12) 등 자원관리 중심으로 어업관리 혁신

* ('17) 11개 어종, 13개 업종 → ('21) 12개 어종, 14개 업종(시범 3개 어종, 8개 업종 병행)

- (감척 확대) 과도한 어선세력 구조조정,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 대응 등을 위해 감척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금 상향**으로 수용성 제고

* 감척현황(근해/연안) : ('18) 2척/292척 → ('19) 13/360 → ('20) 53/176 → ('21) 108/109

** 폐업지원금(평균 수익액 대비) : ('16~'19) 50% → ('20) 70 → ('21) 90

- (지도역량 강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강력 대응을 위해 남해어업 관리단을 신설('17.7)하고, 어업지도선 6척 확충('17, 34척 → '21, 40)

- 어업협정 수역 내 우리어선 조업권 확보를 위해 '대형지도선 증강 3060 방안'을 마련('21.4)하고, 대형지도선(3천톤급) 3척 신조중('21~'24)

- (불법어업 관리) 우리 EEZ 조업 중국어선 규모를 지속 감축*하고, 북한 입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정보 공유·처벌 합의**('21.6)

* 입어규모(척) : ('17) 1,540 → ('18) 1,500 → ('19) 1,450 → ('20) 1,400 → ('21) 1,350 → ('22) 1,300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잔류예상 최대척수 : ('17) 1,029척 → ('18) 718 → ('19) 1,073 → ('20) 855 → ('21) 314

□ 향후 추진계획

- 연근해 생산량 100만톤 이상 증대하기 위해 어업관리 강화, 수산 자원 조성 확대, 지도단속 인프라 확충 등 추진

- (어업관리 강화) TAC 관리대상을 단계적 확대('21, 29% → '30, 80)하고, 감척 촉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감척 상생자금 지원*('23)

* 업종별 감척 잔존자부담금을 정부에서 융자하여 어업인 부담 완화

- (규제완화) TAC 확대와 감척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어업규제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선복량 등 완화로 어선 규모화 유도
- (수산자원조성) 바다숲 조성면적 확대('20. 24 → '30. 54만ha), 자원회복 대상종(대문어·대게 등)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확대(~'30, 80개소)하고, 연안바다목장 지속 조성(~'22, 누적 50개소)
- (산란장 보호)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주요 어종 산란장을 보호구역으로 반영하고, 해당 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
- (지도 인프라 확충) 한·중·일 어선의 경계수역 출어 및 중국어선 집단조업에 대응하고, 어업지도관리 인프라 확대('30)
- * ('21)40척 → ('24)43(+3) → ('25)46(+3) → ('27)52(+6) → ('29)58(+6) → ('30)60척(+2)

4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 성과지표 개요

〈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

- 개념 : 남·북극 및 대양 주요 연구 조사 정점 목표('23년 890점) 대비 탐사 진척도
- 조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조사대상 : 남·북극해, 아북극-서태평양 등 극지 및 대양 탐사 연구 정점 수
- 조사방법 : 연차별 성과보고서, 탐사보고서, 관측 데이터 등 확인
- 측정산식 : 실제 조사 정점 수(누적)/ 조사 목표 정점 수(%)

□ '21년 측정결과

- '21년 극지 및 대양 조사 정점 수는 203점(잠정*, 누적 1,008점)으로 최종 목표('23년 누적 890점) 대비 초과 달성

* 연차별 성과 점검 및 확정('22.2월 末) 이후 최종 결정

< 5년간('19~'23) 목표 및 실적 >

구분		'19	'20	'21	'22	'23
목표	극지 및 대양 탐사 진척도(% 누적)	30.6%	57.9%	80.7%	91.5%	100.0%
	연도별 정점 조사(점, 누적)	272	515	718	814	890
실적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누적)	42.6%	90.4%	113.6%	-	-
	정점 조사(점, 누적)	379	805	1,008	-	-

□ 성과분석

- 남·북극해 및 대양 조사 정점을 확대하여 해양·생태·수산·지질 등 주요 관측정보를 확보*하고 해양과학 연구영토 확장

* 인도양 중앙해령대 신규 열수분출공 발견, 서남극 전 지역 고해상도 빙저 지형도 확보 등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남·북극 등 출입 규정 강화로 연구인력 파견, 연구 일정 등이 축소되어 현장 탐사 규모 전년 대비 축소(426→ 203점)

□ 향후 추진계획

- 연구 선도국과 공동탐사 네트워크 확대, 북극 해양-대기-육상 종합 관측망 구축 등 극지 및 대양 탐사 역량 강화

전략목표 V. 해양수산 신산업을 본격 상용화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한다.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확보액(억원)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추가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 필요
-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
- 조사대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 조사방법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통계
- 측정산식 : 과거 실적('18~'20년)을 감안한 과거 3년간 평균 증가율(25.2%)를 반영하여 237.5억원을 '25년 목표로 설정

□ '21년 측정결과

○ '22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19억원 예산 확보

- 최근 5년간 동향과의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4,926	7,556	7,719	15,297	21,875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 일자리 지원)	276	256	359	373	407
수산업 창업투자 지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3,750	4,500	4,750	4,500	5,25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신산업인큐베이팅 지원)	900	1,900	1,710	2,560	2,560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	400	400	500	250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500	500	400	40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	-	-	6,644	10,638
스마트 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스마트 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	320	320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일자리 지원)	-	-	-	-	2,050

□ 성과분석

- 주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 및 기존 사업의 신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반영을 통해 전년대비 43% 증가한 예산 확보
-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원·시급·일수 상향
- 수산분야 창업자·유망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6→7개소, 전북)
- 해운항만산업 실·퇴직자 및 예정자의 맞춤형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지원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창출
- 사업 확대 및 추가발굴을 통한 예산안 확보 노력
- 과거 실적('18~'22년)을 감안한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45.2%)를 반영하여 971.4억원을 목표로 설정

6

해양사고 인명피해(명)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
- 조사기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사대상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
- 조사방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표하는 ‘해양사고 현황’에서 확인
- 측정산식 :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 + 실종자 수’

□ '21년 측정결과

- '21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19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5.6%(7명) 감소,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154명) 대비 22.7% 감소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현황 〉



□ 성과분석

- (법정부 해사안전대책 수립·이행 강화) '21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선종별·계절별·유형별**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6대 전략, 31개 이행과제 추진 /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등 20여개 기관 참여

** (선종별) 국제여객선·카페리화물선·일반화물선(화물창 개방·과적선박) 안전관리계획, (계절별) 봄철·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수립·시행, (유형별) 선내안전사고 인명피해 저감 대책 및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TF 구성·운영

- (현장중심) 안전대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현장중심 이행점점 추진
- (이행력 제고)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장관님 주재, 11.16) 등 대책의 현장이행력 제고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 해수부, 해경청, 9개 광역시·도, 10개 유관기관 등 참여

- (협업체계 구축) 인명피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부서 등 민·관·학·연 TF 구성(6.18)

TF 활용 전	TF 활용 후
· 각종 대책의 기관별·개별적 추진 · 종사자의 대책 수용성 제고 한계 · 대책의 현장 이행력·피드백 한계	· 인명피해 저감대책 협업체계 공고화 · 협업, 현장의견 수렴 등 수용성 확보 · 현장점검, 의견수렴 등 대책 지속 보완

- (현장점검) 인명피해 빈발사고(양망기* 끼임, 해상추락) 예방대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종사자 의견청취(10.28)

* 어선(연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등)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

- (브랜드과제 발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브랜드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TF 전문가 회의' 개최(11.10)

- ①나홀로선박* 해상추락사고 예방, ②양망기 끼임사고 예방, ③어선 종사자 위험불감증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브랜드과제 발굴

* 승선원 2인 이하의 일반 소형선박(총 313척: 1인 67척, 2인 246척)

- (시범사업) 브랜드과제인 나홀로선박 대상 「구명조끼 상시착용 체계」 마련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시범사업' 추진(100벌)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안강망·자망·통발 등 연근해어선 1,180척 대상 비상정지장치 보급사업 추진(~'21.12, 13억원)

- (안전의식 제고) 해양안전 영상제작,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캠페인 집중 전개, TV·라디오 등 프로그램 활용한 광고 실시

* 해양안전 실천서약이벤트(참여자 총 2,025명) 등을 통해 캠페인 참여 독려

☞ '21년 유튜브 영상 10만뷰 달성('20년 5만뷰 대비 200%↑), '20년 대비 해양안전 캠페인 인지도 1.4%p↑(17.2%→18.6%), 지지의사 1.2%p↑(83.8%→85.0%)

- (국민참여 강화) 국민이 쉽게 해양안전교육을 받도록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2만명)·해양체험시설(6.5천명, 워터파크 등 6개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5년후 목표치) '20년 126명 대비 30% 감축한 88명*

- 그간 지속적인 예방대책 마련·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16~'20) 동안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18명 발생하였으며,
 - ▶ 해상추락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매년 약 60% 이상 발생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획기적인 저감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 ▶ '21년에는 '선내 안전사고 저감대책', '해양사고인명피해 저감 TF' 운영 등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대책 추진으로 전년 대비 5.6%(7명) 저감 성과를 달성
- ☞ 향후 5년 간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의 체계적인 이행 및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30% 저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주요 실천방향) 여객선·어선·낚시어선 등 인명피해 고위험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안전설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 연안여객선 상시모니터링체계(24시간) 운영('22.상~), 어선원·고령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및 고위험선박(사고이력·고선령) 집중안전 관리 등을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에 반영·추진